



# 2025 보험소비자행태조사

## :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변혜원, 이재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점	4
II. 조사 개요	8
1. 중고령자의 금융역량	8
2. 설문 구성	11
3. 조사방법 및 표본 특성	18
III. 설문조사 결과	22
1. 금융지식	22
2. 금융행동: 돈 관리, 재무계획	35
3. 금융행동: 신탁	45
4. 금융행동: 금융자문 및 정보 검색	49
5. 금융행동: 연금 인출기	55
6. 금융후생	69
7. 기대 여명 및 노인 돌봄 필요 예상 연령	79
8. 소결	80
IV. 금융지식 수준에 따른 금융행동·후생과 취약 집단	85
1. 금융지식	85
2.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86
3. 금융지식과 금융후생	91

4.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의 결합 효과	93
5. 금융역량 취약 집단의 특성과 장벽	97
V. 온라인 실험	104
1. 금융역량 강화 수단	104
2. 실험설계 배경 및 개요	105
3. 조사 결과	110
VI. 결론	122
1. 요약	122
2.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방안	126
• 참고문헌	130
• 부록	136



〈표 II-1〉 은퇴기의 금융관리 5원칙	8
〈표 II-2〉 OPIR 성과와 관련 요소	9
〈표 II-3〉 OPIR 금융역량 성과 체계	10
〈표 II-4〉 조사 방법	19
〈표 II-5〉 응답자 특성	19
〈표 III-1〉 일반 금융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25
〈표 III-2〉 퇴직연금 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29
〈표 III-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33
〈표 III-4〉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35
〈표 III-5〉 수입·지출 관리 방법(복수 선택)	36
〈표 III-6〉 신용카드 대금 관리	39
〈표 III-7〉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복수 선택)	42
〈표 III-8〉 재산관리 위임장 등 마련 여부	44
〈표 III-9〉 신탁제도 이용 의향	47
〈표 III-10〉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 활용 여부	50
〈표 III-11〉 공공 재무관리 정보 만족도	54
〈표 III-12〉 본인의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	69
〈표 III-13〉 소득 및 자산 수준별 생활비 충당 정도	72
〈표 IV-1〉 영역별 평균 금융지식 점수	86
〈표 IV-2〉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행동	90
〈표 IV-3〉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별 금융행동	91
〈표 IV-4〉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 점수별 금융행동	91
〈표 IV-5〉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후생	93
〈표 IV-6〉 취약 집단 및 비취약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98
〈표 IV-7〉 금융자문을 구하는 행동 비교: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100
〈표 IV-8〉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정보 접근성 장벽	101
〈표 IV-9〉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점수 비교: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102
〈표 IV-10〉 금융역량 과신 여부 응답자 비율: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103
〈표 V-1〉 조사 방법	108

〈표 V-2〉 비교 기준 특성 및 임의 할당 검증	111
〈표 V-3〉 이탈자 수: 집단별, 시점별	112
〈표 V-4〉 참고자료 정독 수준	113
〈표 V-5〉 이해도 총점 비교	116
〈표 V-6〉 이해도 문항별 정답률 비교	116
〈표 V-7〉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 비교	118
〈표 V-8〉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	119
〈표 V-9〉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 비교	120
〈표 V-10〉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교호항	121
〈표 VI-1〉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방안	128



〈그림 II-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노후 재무설계	14
〈그림 II-2〉 공·사연금 적립금	15
〈그림 II-3〉 설문 구성	17
〈그림 III-1〉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 분포	24
〈그림 III-2〉 일반 금융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24
〈그림 III-3〉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 분포	28
〈그림 III-4〉 퇴직연금 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28
〈그림 III-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점수 분포	32
〈그림 III-6〉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32
〈그림 III-7〉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증여 계획	45
〈그림 III-8〉 신탁제도 인지도	46
〈그림 III-9〉 신탁 이용 경험	46
〈그림 III-10〉 신탁제도 이용 목적	49
〈그림 III-11〉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	51
〈그림 III-12〉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조언을 구하는 대상	52
〈그림 III-13〉 재무관리 관련 조언에 대한 만족도	53
〈그림 III-14〉 은퇴기 재무관리 정보 제공기관 이용 경험	53
〈그림 III-15〉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비율	54
〈그림 III-16〉 퇴직연금 수령방법(모두 선택)	55
〈그림 III-17〉 퇴직연금 총 적립 금액	56
〈그림 III-18〉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	56
〈그림 III-19〉 퇴직연금 선호 수령방식	57
〈그림 III-20〉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고려한 사항	58
〈그림 III-21〉 퇴직연금 사용처 또는 사용 계획	60
〈그림 III-22〉 퇴직연금 수령/인출 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하거나 제공한 정보	61
〈그림 III-23〉 남겨둔 퇴직연금 자금의 투자 방식 선택 방법	62
〈그림 III-24〉 퇴직연금 운용(투자) 상황 마지막 확인 시점	62
〈그림 III-25〉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 소득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이후 행동	63
〈그림 III-26〉 개인연금 수령 방법	64

〈그림 III-27〉 개인연금 총 적립 금액	64
〈그림 III-28〉 개인연금 수령 금액	65
〈그림 III-29〉 개인연금 인출 결정 시 고려한 사항	66
〈그림 III-30〉 개인연금 사용처 또는 사용 계획	67
〈그림 III-31〉 남겨둔 개인연금 자금의 투자 방식 선택 방법	68
〈그림 III-32〉 개인연금 운용(투자) 상황 마지막 확인 시점	68
〈그림 III-33〉 재무 상태 설명 정도	71
〈그림 III-34〉 최근 1년간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71
〈그림 III-35〉 가구의 주된 소득원	73
〈그림 III-36〉 현재 가구 월소득과 은퇴 전 가구 월소득 비교	73
〈그림 III-37〉 현재 가구 월 최소 생활비	74
〈그림 III-38〉 현재 가구 월 적정 생활비	74
〈그림 III-39〉 은퇴 예상 연령	75
〈그림 III-40〉 예상 노후 최소 생활비	75
〈그림 III-41〉 예상 노후 적정 생활비	76
〈그림 III-42〉 노후 준비 상황	76
〈그림 III-43〉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종류(중복응답)	77
〈그림 III-44〉 총부채 금액	78
〈그림 III-45〉 ‘나는 지금 부채(빚)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응답	78
〈그림 III-46〉 부채(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자금의 출처(중복응답)	79
〈그림 III-47〉 예상 생존 연령	79
〈그림 III-48〉 노인 돌봄 필요 예상 연령	80
〈그림 III-49〉 치매에 걸릴 가능성	80
〈그림 III-50〉 설문조사 주요 결과	84
〈그림 IV-1〉 일반 금융이해력 분포 및 집단 정의	87
〈그림 IV-2〉 금융행동지수 분포 및 집단 정의	94
〈그림 IV-3〉 금융지식-행동별 금융후생 점수	95
〈그림 IV-4〉 금융지식-행동별 ‘부채가 너무 많다.’ 응답	95
〈그림 IV-5〉 금융지식-행동별 금융후생 점수	96
〈그림 IV-6〉 금융지식-행동별 ‘부채가 너무 많다.’ 응답	96

〈그림 V-1〉 금융역량 강화 수단: 걱정안 은퇴소득 보장	105
〈그림 V-2〉 온라인 실험 개요	110
〈그림 V-3〉 집단별 정독 수준 분포	113

---

## Abstract

---

# Financial Capability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 Survey-based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s

We assess the financial capability of middle-aged and older consumers and analyze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capability as they approach and enter retirement. An online survey reveals substantial within-group heterogeneity in financial knowledge and behavior.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respondents lack contingency plans for end-of-life financial arrangements or asset management in the event of health deterioration, and a substantial share report debt burdens and insufficient living expenses. Examining financial knowledge and behavior together, improvements in knowledge alone are unlikely to enhance well-being unless accompanied by corresponding behavioral changes. On this basis, we define individuals with low levels of both knowledge and behavior as the financially vulnerable group and further investigate the barriers they face. This group faces barriers including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low utilization of digital financial services, and overconfidence in financial capability. An online experiment compares text and card-news formats for delivering financial literacy information. While the card-news format keeps more people engaged to the end, the text format is more effective at improving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targeted interventions for vulnerable groups, expanded access to public financial diagnostic services, improved accessibility of online consultation and expanded face-to-face consultation services, behavioral-bias mitigation mechanisms, and evidence-based program management through systematic pre- and post-evaluation and data accumulation.

---

## 요약

---

본 연구는 은퇴 직전 및 은퇴기(55~79세)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은퇴기 금융관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에서 집단 내 이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당수 응답자가 장래·상속, 건강 악화 대비 자산관리 위임 등 위험 대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 금융자문 이용률은 낮고, 재무상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부채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지식 수준 개선만으로는 후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금융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후생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식과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 집단으로 정의하였는데,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고령·여성·저학력·저소득·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디지털 활용 미숙, 금융역량 과신 등의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험에서는 텍스트형과 카드뉴스형 정보 제공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카드뉴스형은 완독률 측면에서 유리했으나,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는 텍스트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이는 복잡하고 맥락 의존적인 금융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카드뉴스는 관심 유도 및 상담 연계 단계에, 텍스트형 자료는 심층 이해와 행동 변화 촉진 단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공적 재무진단 서비스 접근성 강화, 대면·비대면 채널의 병행, 행태편향 완화 장치 도입,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증거 기반 운영을 제안하였다.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25년 20.3%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 추세는 지속되어 2035년에는 그 비율이 29.9%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sup>1)</sup> 동시에 65세의 기대여명은 2010년 19.8년에서 2023년 21.5년으로 증가하여 노후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훨씬 이른 시기에 발생한다. 2024년 5월 기준 55~64세 인구 중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경우의 평균 연령은 59.7세이며, 조기 퇴직(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한 경우는 평균 51.2세였다(윤정혜 2025). 2023년 기준 51세의 기대여명은 약 34년임을 고려하면, 조기 퇴직자들은 30년 이상의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명 연장으로 장기 노후에 대비한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자의 재무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금융역량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중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OECD 2020a; OECD 2020b). 그렇다면 왜 중고령층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이 시기는 생애 자산 축적이 정점에 도달하는 동시에(통계청 2024), 은퇴계획 수립, 연금 수령 선택,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배분, 주거 형태의 조정 등 중요한 재무 결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와 재무 결정의 중요성이 모두 높은 만큼, 이 시기 금융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더불어, 이 시기에 금융관리를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Agarwal et al.(2009)은 고령소비자는 젊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 실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인지적, 신체적 역량 저하로 금융 실수로 인한 실패

1)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전국, 2025. 11. 14. 검색

2) 국가데이터처, 「생명표(2023)」, 완전생명표(1세별), 2025. 11. 14. 검색

로부터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에 비해 은퇴자들에 대한 실질적 규제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이 시기의 재무 결정은 노후 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중고령층은 다양한 금융사기 위험에 취약하다.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sup>3)</sup>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65.4%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이 연령대에 집중되었으며, 50대 피해자의 58.3%, 60대 이상 피해자의 75.6%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춘 중고령자는 이러한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후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역량 강화는 중고령층이 직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중고령층의 금융역량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경제적 부양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노인 빈곤은 기초연금 및 의료비 등 공적 부양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고령층이 적절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자립적 노후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의 노후를 넘어 가족과 국가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고령층은 중요한 재무 결정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그 결정의 효과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초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재무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도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매일경제(2025. 7. 17.), “정보 털리는 순간, 피싱도 시작된다”; 매일경제(2025. 7. 14.), “AI에 낚였다, 보이스피싱 악랄한 진화”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3. 27.),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 원 피해, 전년비 1.5배↑: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점

개인의 재무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 태도,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금융이해력은 주로 금융지식과 이해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Lusardi and Mitchell(2014)은 금융이해력을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 계획, 자산 축적, 부채 및 연금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금융이해력은 구체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 개념에 대한 지식, 재무 결정을 위한 수리적 능력 등을 포괄한다(Hastings et al. 2013).

금융역량은 금융이해력을 포함하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식뿐 아니라 태도와 실제 행동까지 아우른다. World Bank(2013a), World Bank(2013b)는 금융역량을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금융이해력이 주로 '무엇을 아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금융역량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재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복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이해력의 영역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금융역량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OECD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OECD/INFE)가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금융이해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OECD 2023; 영역별 조사 문항 개요는 <부록 II>를 참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3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5)</sup>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측정도 포함되었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식과 실제 금융행동 및 실천 영향을 함께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사용하되, 선행연구에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으로 측정된 결과들도 금융역량의 맥락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금융이해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데, 중년기까지는 경험 축적과 함께 향상되다가 고령기에 접어들며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Lusardi and Mitchell(2011a), Lusardi and Mitchell(2011b)은 이러한 생애주기 패턴을 제시한 바 있으

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9. 7.),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6)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7.),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며, 이후 연구들은 고령기의 금융이해력 감소가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Finke et al. 2017; Boyle et al. 2025).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예컨대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40대가 68.4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하락했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전 연령대 평균(65.7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이는 중년을 기점으로 금융이해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이해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조적 격차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은 학력, 소득 수준, 성별 등이 금융이해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Atkinson and Messy 2012; Hastings et al. 2013; Lusardi and Mitchell 2014; Lusardi and Mitchell 2023). OECD(2023)의 최신 보고서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고소득 집단이 저학력·저소득 집단보다, 경제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 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Boyle et al.(2025)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융이해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만 성별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이해력은 인지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Finke et al.(2017)과 Gamble et al.(2015)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금융이해력 감퇴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더 나아가 Gamble et al.(2015)은 고령층의 능력 대비 자신감 괴리 현상을 발견하였다. 고령자의 실제 금융역량은 하락하지만 본인 역량에 대한 자신감은 유지되는 경향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금융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금융역량이 실제로 어떤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는가이다. 먼저 금융역량은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Lusardi and Mitchell(2011b)과 Alessie et al.(2011)은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체계적인 은퇴계획을 수행하고, Hastings and Mitchell(2020)은 은퇴 자금 축적을 더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et al.(2021) 또한 금융이해력이 높은 고령층일수록 재무관리 활동에 적극적이며 전문적 금융 조언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역시 앞선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금융이해력이 노후 대비 금융행동 및 금융웰빙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정현 외 2012; 양혜경 2018; 양덕순 2022; 최철 2023).

7) 한국은행 보도자료(2025. 4. 29.),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역량은 자산 축적, 투자, 부채관리와 같은 구체적 재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Behrman et al.(2012)은 금융역량이 자산 축적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Von Gaudecker(2015)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안정적인 투자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부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Lusardi and Tufano(2015)는 금융역량이 바람직한 부채관리 행태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Engels et al.(2021)은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금융사기를 탐지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금융역량이 자산을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나 불리한 금융상품 선택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한다.<sup>8)</sup>

이러한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요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OECD(2020b)는 각 생애주기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금융웰빙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에 적합한 집중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sup>9)</sup> 국내에서도 법정기구로서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으며, 금융역량지도를 개발하여 각 생애주기 단계에 맞춘 금융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sup>10)</sup> 금융감독원은 아동, 청년, 성인, 교사 등 대상별 온라인 및 방문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각각 제공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의 개념과 효과를 폭넓게 규명해 왔으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이해력, 금융교육, 금융역량을 다룬 연구들을 주로 학교 금융교육, 은퇴저축기 금융역량 강화 등 주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를 이루는 반면, 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디지털 금융역량을 다룬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국내 연구들 중에는 은퇴 전후의 가계소득 및 소비의 변화, 자산보유 행태, 은퇴자산의 최적 소비나 투자 전략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sup>11)</sup> 그러나 동 연구들은 대부분 은퇴기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특

8)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금융이해력과 은퇴계획, 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 금융 실수 등 금융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이해력 관련 선행연구들을 폭넓게 정리한 문헌고찰 논문(Survey paper)인 Lusardi and Mitchell(2014), Stolper and Walter(2017) 등을 참조

9) OECD(2020b),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OECD/LEGAL/0461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5. 25.),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1) 이경희 외(2025); 유경원 외 2인(2020); 유경원 외(2016); 여윤경(2014); 이희숙 외 2인(2013); 윤재호 외(2010); 석상훈 외(2009)

정 시점의 소득, 소비, 자산 구성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각 금융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었고, 이를 통해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중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앞서 학력, 소득,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중고령층에서 어떻게 금융역량 수준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특히 고령기로 갈수록 인지기능 저하와 금융역량에 대한 과신이 높아진다는 Gamble et al.(2015)의 발견을 고려할 때, 중고령층 내 취약 집단을 식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중고령층이 처한 특수한 재무 상황에서 금융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이다. 금융역량이 실제 재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은퇴 결정, 연금 수급, 자산 인출과 같이 중고령층이 실제로 직면하는 재무 상황에서 금융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이해력을 분석하여 이들의 금융역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금융역량 격차를 분석하고 취약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설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중고령층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금융후생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을 기준으로 한 3분의 집단들의 비교를 통해 금융지식 개선이 긍정적인 금융행동 실천, 또는 금융후생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셋째,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진단 설명자료와 비교하여 개선된 정보 제공 방식(카드뉴스)이 금융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토대로 중고령층의 금융역량 현황 및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II

# 조사 개요

## 1. 중고령자의 금융역량

구체적으로 중고령자가 갖추어야 하는 금융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중고령자 또는 은퇴 고령자의 금융역량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 가. 금융감독원 은퇴기 재무관리

금융감독원(2020)은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시리즈를 발간하였는데, 은퇴기를 다룬 5권에서는 은퇴기 재무관리를 은퇴기 재무설계, 노후 주거, 노후 의료비, 상속 및 증여 등 생애 마무리의 내용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울러 은퇴기의 금융관리 5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1〉 은퇴기의 금융관리 5원칙

원칙	내용
은퇴 후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무설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산·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자산 수익률 제고 및 부채 부담 최소화</li><li>• 은퇴 후 감소하는 수입에 대비해 생활비와 의료비 등 비상지출을 구분하여 자금 관리</li></ul>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국가 지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은퇴 후 소득원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며,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li><li>•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경우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가 지원 여부 확인</li></ul>
건강관리를 잘하고 노후의료비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낙상 등 노년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걷기, 계단 이용 등 일상 속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수명 관리 필요</li><li>• 보험 등을 활용한 의료비 준비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음</li></ul>
금융사기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가하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기 유형, 예방법, 피해 대처요령에 대한 사전 학습</li><li>• 정보통신 발달로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노후자금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 요구</li></ul>

〈표 II-1〉 계속

원칙	내용
상속 및 증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증여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사전 준비가 중요함</li> <li>•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담부 증여 등 자산 형태에 맞는 절세 방안 검토</li> </ul>

주: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의미,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자료: 금융감독원(2022)을 요약

## 나. 영국 MAS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et al.(2017)는 실무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은퇴 고령자(OPIR: Older People in Retirement)가 흔히 부딪치는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융역량 요소들을 〈표 II-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2〉 OPIR 성과와 관련 요소

구분	내용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환경 변화나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는 고령소비자의 일상적인 소득 및 지출 관리를 요함</li> <li>• 예산 수립 등 재무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에 초점</li> </ul>
은퇴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고령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저축으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음</li> <li>• 성공적인 은퇴 전환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하며, 고령자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득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li> </ul>
서비스 이용 및 지원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고령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인식,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지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li> </ul>
남은 생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의 필요와 환경은 은퇴 후 지속적으로 변화함</li> <li>• 자문을 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에 대비하는 계획 수립 등</li> </ul>
소득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고령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극대화하지 못함</li> <li>• 고령자의 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li> </ul>

〈표 II-2〉 계속

구분	내용
주거 및 돌봄 비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주거 환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li> <li>• 이러한 변화가 없더라도, 저소득 고령자는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li> <li>• 주거 및 돌봄에 대한 재무적 측면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li> </ul>
사기, 착취,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의 일상적인 자산 관리 능력이 감소하면,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짐</li> <li>• 특히 고령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은 피해를 입을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li> <li>• 사기, 착취 또는 학대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li> </ul>

자료: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et al.(2017)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고령자 금융역량 성과 체계(The Financial Capability Outcomes Framework for Older People)를 만들었는데, 동 체계는 금융역량의 구성 요소를 크게 후생(Wellbeing), 행동(Behavior), 태도(Mindset), 능력(Ability)으로 나누고, 각 요소별로 해당하는 금융역량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문항과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성과를 제시한다. 이 중 태도나 능력 관련 항목들은 금융역량 강화 제도 도입 직후 측정 가능한 반면, 행동과 금융후생 관련 항목들은 제도 도입 후 3개월 이상, 이상적으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II-3〉 OPIR 금융역량 성과 체계

구분	일상적인 자금 관리	전반적 성과	생애사건 대비
금융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내에서 생활</li> <li>• 재무에 대해 만족하고 불안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을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함</li> <li>• 돌보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이 금융후생을 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사건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음</li> </ul>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세우고 재무를 관리</li> <li>•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과 돈을 최대한 활용</li> <li>• 신용대출 관리</li> <li>• 조언이나 공인된 금융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사건에 대비한 계획을 세움</li> <li>•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li> </ul>

〈표 II-3〉 계속

	일상적인 자금 관리	전반적 성과	생애사건 대비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관리를 자신감 있게 수행함</li> <li>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낌</li> <li>절약하기 위해 비교 쇼핑에 적극적임</li> <li>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한 저축 및 소비에 대한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태도</li> <li>사기범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li> <li>재무 조언이나 공인된 금융전문자와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적인 생애사건의 위험을 고려함</li> <li>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음</li> </ul>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 재무 관리 기술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관리를 위한 디지털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 조언 및 금융전문자와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인식</li> </ul>

자료: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et al.(2017)

## 다. 미국 ACFS의 은퇴소득이해력 조사

한편, 미국 ACFS(American College of Financial Services)는 중고령자가 최적의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은퇴소득이해력 조사(Retirement Income Literacy Study)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50세~7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조사(제4차 조사)에는 총 3,765명 응답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연금상품(Annuities), 주거, 인플레이션, 투자, 생명보험,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소득보장연금, 은퇴계획, 세금, 은퇴소득, 기대여명 등을 포함한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정답률은 31%였고, 평균 정답률보다 점수가 낮은 영역은 세금, 은퇴소득, 기대여명, 장기요양, 투자, 연금상품 관련 영역이었다.

## 2. 설문 구성

### 가. 금융지식

#### 1) 기본 금융이해력

먼저 일반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Big 3 질문, 즉 이자율 및 복리, 물가상승률, 분산 투자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과 이자 간의 관계, 대출에서의 복리 개념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Stanford대학의 Lusardi 교수와 Pennsylvania 대학의 Mitchell 교수가 기본적인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ig 3 질문은 2004년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설문 문항 중 금융이해력과 은퇴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투자교육재단이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추가되었고, American Life Panel, Survey of Consumer Finances, Understanding America Study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sup>12)</sup>

## 2) 중고령자 관련 금융이해력

다음으로 중고령자에게 조금 더 특화된 질문으로서 퇴직연금 수령 및 세금 관련 문항과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문항, 전기통신금융사기나 투자사기에 대한 취약성을 진단하는 문항, 그리고 주관적인 재무능력 평가와 디지털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수령 시 수령 형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 방법에 따른 세금 관련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은퇴 후 생애에서 중요한 지출을 차지하게 되는 노년기 의료비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sup>13)</sup>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등급을 판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급자에게 보낸다. 수급자는 장기

12) Stanford Initiative for Financial Decision-Making 홈페이지

1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요양인정서에 나온 등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적힌 서비스 종류와 내 용을 참고해 본인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한 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돈 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주거비용, 노인 돌봄비용, 기초연금 신청, 은행 계좌 잔액 확인, 가격 비교 사이트 사용, 금융상품 비교, 복지혜택 확 인, 세금 납부 점검 등 세부 항목별로 질의하였다. 세부 항목은 영국 MAS(Money Advice Service)의 OPIR 성과와 관련 요소를 참고하였는데,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관리 능력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나. 금융행동

### 1) 장단기 재무계획

단기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신용카드 이용 대금은 잘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나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나 장래비용, 주 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 상황,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MAS의 OPIR 성과 관련 요소 중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과 관련된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는 재산을 맡 긴 사람(위탁자)의 뜻과 계약에 따라 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제도에 대해 질의한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신탁상품으로는 특정금전 신탁, 재산 신탁, 유언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후 견 신탁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형 신탁이 주를 이루었다 면, 최근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운용형 신탁의 주요 수요 집단이 고소득층이었다면, 최 근 들어 중산층 소비자들의 관리형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sup>14)</sup> 앞으

14) 서울경제(2025. 7. 1.) “美처럼 ‘생전 상속설계’는다…유언대용신탁 2년새 58% 증가”; 매일경제(2025. 7. 21.) “‘상속 골치아픈데 은행에 맡기자’…5060 중산층도 ‘유언신탁’”

로 신탁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주로 어떤 목적의 수요가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이 은영 외(2025)의 신탁 설정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였다.

## 2) 금융자문

저축, 투자, 세금, 보험 주택담보대출, 연금, 복지혜택 등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주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지, 만족도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퇴기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면 및 전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그림 II-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노후 재무설계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노후 재무설계' (Post-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page 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tegrated Pension Portal. The page features a top navigation bar with various service categories, a sidebar menu on the left, and a main content area.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노후 필요자금 진단' (Post-retirement Financial Needs Assessment) form with fields for gender, age, and monthly pension amount. Below the form is a '노후 필요자금 계산' (Post-retirement Financial Needs Calculation) button. Additionally, there are two product recommendation cards: '연금저축 상품조회' (Pension Savings Product Introduction) and '퇴직연금 상품조회' (Pension Withdrawal Product Introduction), each with a '조회하기' (Search)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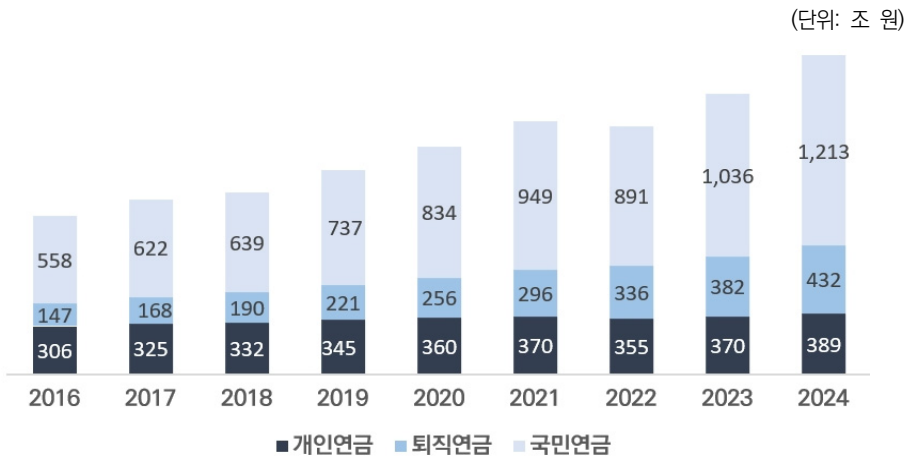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자문서비스

### 3)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인출 행동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은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금적립금을 보면 약 2,033조 원의 공·사연금 적립금 중 국민연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7%, 퇴직연금 적립금이 21.2%, 개인연금 적립금이 19.1%였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법정 연령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정해지고 수령방법도 연금 방식만 가능하고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가가 기금을 운용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 수령 방법, 인출 가능 여부, 운용 방법 결정에서도 가입자의 결정의 폭이 크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방법도 세제혜택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연금과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인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한다.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경우, 가입자가 수령 개시 연령과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흐름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II-2〉 공·사연금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자료실

먼저 응답자에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이나 인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연금으로 수령했는지,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는지, 수령 당시 총 적립금 규모, 수령 금액, 수령 시기, 연금 적립금 인출을 결정할 때 고려한 사항들, 인출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설문 문항은 영국 Financial Lives Survey 중 연금 인출기 관련 모듈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 4)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한편 디지털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고령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소외 현상이 부각되었는데,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 잔액 확인, 이체, 간편결제, 비대면 금융상품 구매, 신용등급 조회, 소비내역 확인이나 자산 관리를 이용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 다. 금융후생

먼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금융후생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 해당 문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질의한다. 금융후생 관련 문장들은 미국 CFPB(2015)의 금융후생(Financial Well-Being) 지표를 위한 질문들에 바탕을 둔다.

다음으로 은퇴 상태는 돈 버는 일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상태로 정의한 은퇴,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 한 상태,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구분하였다. 먼저, 은퇴한 소비자에게는 생활비 충당 정도, 가구의 주된 소득원, 은퇴 전 가구 월 소득 대비 현재 가구 월 소득, 현재 가구 월 생활비를 질의한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소비자로부터는 예상 은퇴 연령, 예상 노후 생활비, 노후 준비 상황을 조사한다.

금융부채 보유 여부, 부채의 규모, 부채에 대한 부담, 부채 상환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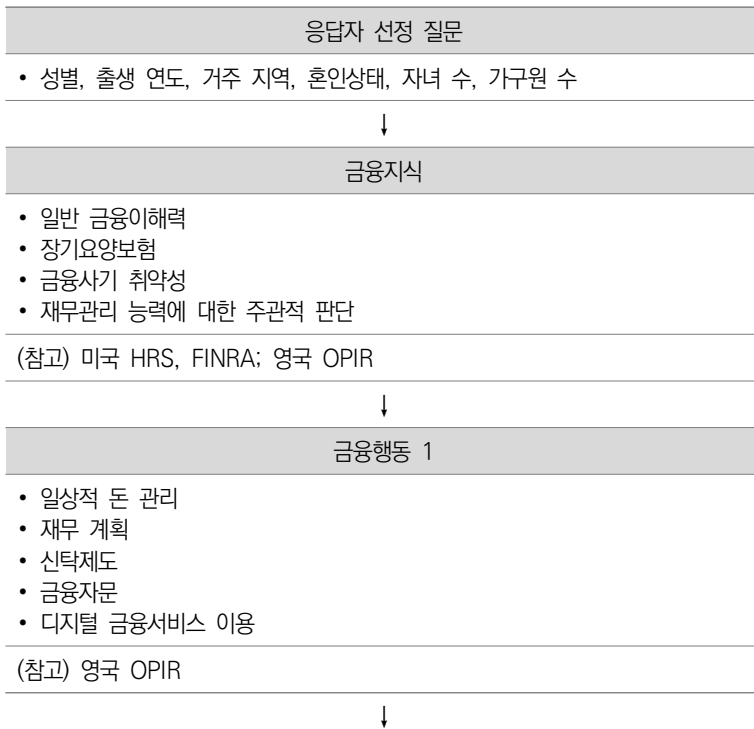
#### 라. 응답자 특성

먼저 응답자의 위험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독일 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나 유럽 GPS(The Global Preferences Survey)의 일반 위험 성향(General Risk Attitude) 질문

과 금융 관련 의사결정 시 위험 성향을 조사한다.<sup>15)</sup> 아울러 확실한 보상을 해 주는 쿠폰과 확률에 따라 다른 금액을 주는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통해 위험 선호도(Risk Preference)를 측정한다. 동 문항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문항은 현금 10만 원과 즉석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참고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복권'은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나 사행성 등 부정적 감정을 떠올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조사에서는 10만 원을 주는 쿠폰과 확률에 따라 다른 금액을 주는 쿠폰을 선택하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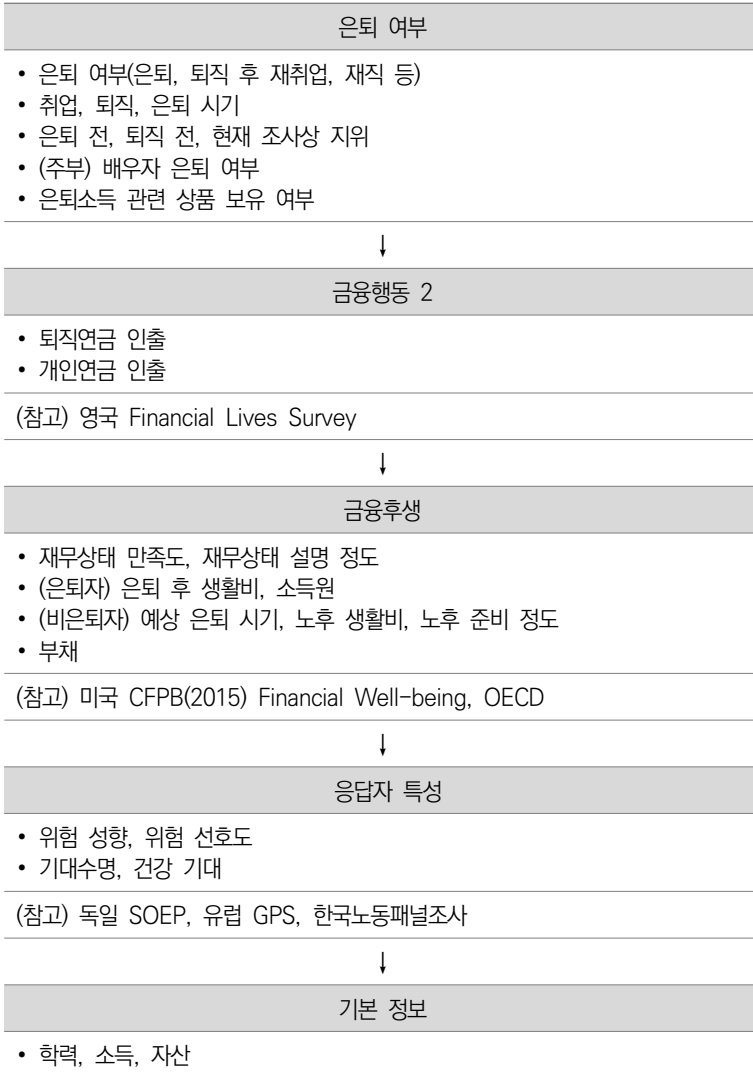
또한 기대 여명이나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해지는 시기, 치매 발병 가능성 등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예상하는 수명과 건강 상태, 시점을 함께 조사한다.

〈그림 II-3〉 설문 구성



15) “귀하는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시는 편이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는 편이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함. 위험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는 오병국 외(2024)를 참고함

〈그림 II-3〉 계속



### 3. 조사방법 및 표본 특성

동 조사는 전국 만 55~7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고령자 또는 고령자는 관련 법령, 연구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

의하며, 중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와 노후생활을 조사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지원 정책을 연구한 장지연(2000)은 노동시장 정책 대상이 되는 중고령자를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보았으며, 고령자를 55세 이상 인구로, 중고령자 또는 고연령자를 50세 이상 인구로 지칭하였다. 동 조사는 은퇴 직전 또는 은퇴기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금융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고, 조사 대상을 55세~79세로 하였다.

표본은 2025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를 활용하여 거주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조사는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표 II-4〉 조사 방법

구분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전국 55~79세 성인 남녀
표본 크기	총 3,000명(유효표본)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법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1%
조사 기간	2025년 7월 31일~8월 23일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표 II-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표본)	비율(인구총조사)	
전체	3,000	100.0	-	
성별	남성	1,470	49.0	48.2
	여성	1,530	51.0	51.8

〈표 II-5〉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율(표본)	비율(인구총조사)
연령	55~59세	832	27.7	28.9
	60~64세	799	26.6	26.8
	65~69세	719	24.0	18.9
	70~79세	650	21.7	25.4
거주 지역	서울	514	17.1	18.1
	부산/울산/경남	489	16.3	16.5
	대구/경북	323	10.8	11.0
	인천/경기	949	31.6	28.4
	광주/전라	312	10.4	10.7
	대전/세종/충청	309	10.3	10.6
	강원/제주	104	3.5	4.7
은퇴 여부	은퇴함	993	33.1	-
	퇴직 후, 재취업	633	21.1	-
	은퇴하지 않음	876	29.2	-
	해당 없음	498	16.6	-
혼인 상태	미혼	136	4.5	3.3
	기혼	2,379	79.3	74.6
	별거 중	28	0.9	-
	이혼	227	7.6	9.0
	사별	203	6.8	13.1
	무응답	27	0.9	-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90	3.0	34.9
	고등학교	868	28.9	43.7
	대학교	1,646	54.9	17.8
	대학원	396	13.2	3.6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13.8	-
	100만 원~200만 원 미만	591	19.7	-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14	20.5	-

〈표 II-5〉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율(표본)	비율(인구총조사)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91	16.4	-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27	10.9	-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98	6.6	-
	600만 원~700만 원 미만	113	3.8	-
	700만 원~800만 원 미만	100	3.3	-
	800만 원 이상	153	5.1	-
총자산 (개인)	1억 원 미만	606	20.2	-
	1억 원~3억 원 미만	680	22.7	-
	3억 원~5억 원 미만	402	13.4	-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20.7	-
	10억 원 이상	692	23.1	-

주: 통계청 비율 중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은 2024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통계표(DT\_1MR2060)-55세 ~79세」 자료로, 혼인상태, 최종학력은 「인구총조사-표본(20%) 부문(2020)-통계표(혼인상태: DT\_1PM2002, 최종학력: DT\_1PM2001)-55세~79세」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2025. 9. 22. 검색)

〈표 II-5〉는 응답자 특성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가장 오른쪽 열 중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비율은 2024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결과(55~79세)를, 혼인상태, 최종학력 비율은 2020년 인구총조사 표본(20%) 자료(표본조사로서 최신 조사)를 기초로 계산하였다.

혼인상태를 보면, 표본의 미혼 비율이 인구총조사에 기초한 미혼 비율에 비해 높았고, 표본의 기혼 및 별거 중인 비율도 인구총조사 결과의 기혼(별거 포함) 비율에 비해 높았다. 반면, 이혼 비율과 사별 비율은 인구총조사 결과에 비해 낮았다. 다른 분포에 비해 최종학력의 분포도 표본과 전체 인구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표본의 경우 대졸 이상의 비율이 68.1%였으나,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은 21.4% 수준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은 전체 평균적인 인구의 교육 수준에 비해 높았다.

# III

## 설문조사 결과

### 1. 금융지식

#### 가. 일반 금융이해력

먼저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ig 3, 즉 이자율 및 복리, 물가상승률, 위험분산 관련 질문 외에 담보대출, 채권가격, 대출 관련 질문을 더하여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다.

#### 일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A1. 귀하는 저축예금 계좌에 100만 원을 예치해 두고 있고, 이자율이 연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5년 동안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예금을 하지 않는다면, 5년 후 저축예금 계좌의 잔액은 얼마일까요?

- ① 110만 원보다 많을 것임
- ② 110만 원
- ③ 110만 원보다 적을 것임
- ④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110만 원보다 많을 것임(복리 효과로 인해 매년 이자가 붙어 5년 후에는 1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됨)

A2. 당신의 저축예금 계좌의 이자율은 연 1%이고, 물가상승률은 연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후 이 계좌에 있는 돈의 구매력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① 증가    ② 같음    ③ 감소    ④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감소(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 구매력(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은 감소함)

A3.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한 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 회사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 정답: X(여러 회사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고 수익의 변동성이 줄어듦)

---

A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액이 더 많지만, 대출 기간 전체에 걸쳐 내는 총이자는 더 적다.”

- 정답: ○(15년 만기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보다 상환기간이 짧아 월 상환액은 더 많지만, 총이자는 더 적음)

A5.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 ① 오를 것임    ② 떨어질 것임    ③ 동일할 것임
- ④ 채권가격과 이자율 간에는 연관성이 없음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떨어질 것임(채권가격은 주로 시장 이자율, 발행 시 정해진 이자,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신용 위험 등에 의해 결정됨. 특히 시장 이자율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 상승 시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 시 가격은 상승함)

A6. 귀하께서는 1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연 이자율이 연 복리 기준으로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이자율에서 귀하가 갚아야 할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몇 년이 걸릴까요?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4년 미만    ③ 4년 이상 6년 미만
- ④ 6년 이상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2년 이상, 4년 미만(72의 법칙에 따라, 20% 이자율에서는 대략 3.6년( $72 \div 20$ ) 후에 원금이 두 배가 됨. 72법칙은 투자나 대출의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72 \div \text{연 이자율}(\%)$ 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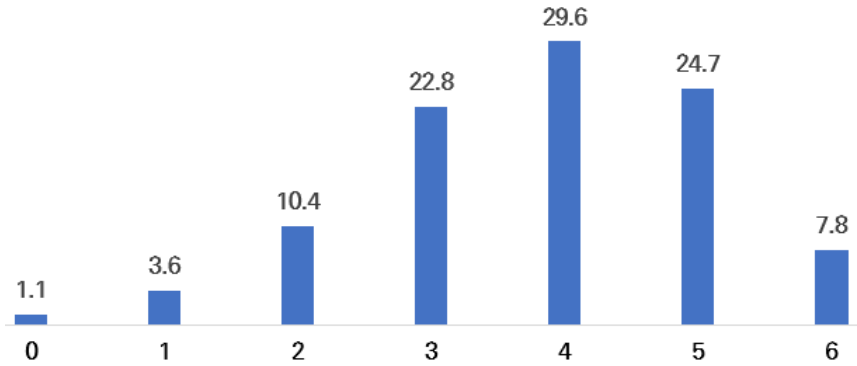
---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 문항 중 3.8개 문항을 맞추었는데, <그림 III-1>은 정답 수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답률이 8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담보대출(77.5%), 위험분산(73.7%) 순으로 높았다. 복리에 대한 질문의 정답률은 58%, 이자율과 채권가격 간의 관계 문항 정답률은 53%, 대출 복리 관련 정답률은 32.4%였다.

〈그림 Ⅲ-1〉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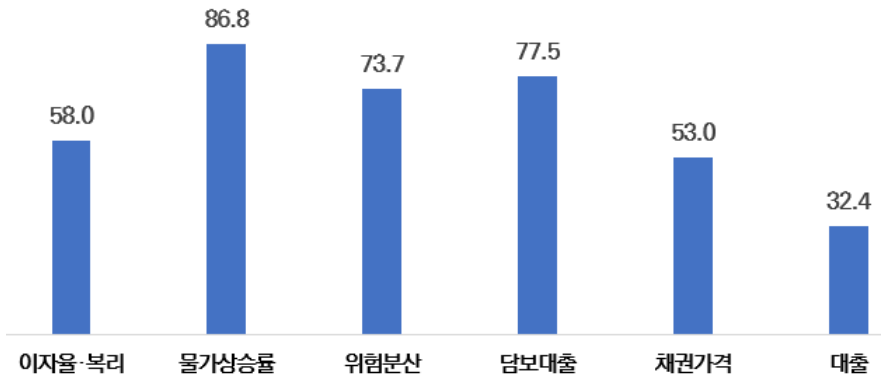
(단위: %)



주: x축은 정답을 맞춘 문항 개수를 의미함

〈그림 Ⅲ-2〉 일반 금융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반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65~69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은퇴 여부별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퇴직 후 재취업했거나, 현직에 있는 경우)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대체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았다.

〈표 Ⅲ-1〉 일반 금융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이지율	물가 상승률	위험 분산	담보 대출	채권 가격	대출	100점 환산 점수
전체		3,000	58.0	86.8	73.7	77.5	53.0	32.4	63.6
성별	남성	1,470	64.0	90.7	78.1	78.3	57.0	35.8	67.3
	여성	1,530	52.2	83.0	69.5	76.7	49.1	29.1	59.9
연령	55~59세	832	54.2	85.6	77.3	76.3	55.6	33.1	63.7
	60~64세	799	55.7	87.5	73.0	78.0	51.9	31.8	63.0
	65~69세	719	60.9	88.0	73.4	79.7	52.9	36.0	65.2
	70~79세	650	62.5	86.0	70.5	76.0	50.9	28.2	62.3
은퇴 여부	은퇴함	993	60.9	89.2	76.2	78.4	54.8	31.5	61.2
	퇴직 후, 재취업	633	60.2	89.4	72.2	77.9	55.3	33.3	64.7
	은퇴하지 않음	876	57.3	86.9	74.2	79.2	53.1	35.2	64.3
	해당 없음	498	50.6	78.3	69.9	72.1	46.2	27.9	57.5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0	48.9	70.0	54.4	60.0	37.8	34.4	50.9
	고등학교	868	54.1	79.7	68.7	73.2	44.0	31.6	58.5
	대학교	1,646	59.4	89.8	76.1	79.6	57.5	32.2	65.8
	대학원 이상	396	62.6	93.4	79.5	82.1	57.3	34.3	68.2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52.3	82.1	70.7	75.3	47.9	30.0	59.7
	100~200만 원 미만	591	54.1	83.9	70.2	77.5	43.5	30.3	59.9
	200~300만 원 미만	614	55.7	86.6	72.1	78.0	55.2	32.6	63.4
	300~400만 원 미만	491	60.7	87.0	74.1	74.9	52.3	35.4	64.1
	400~500만 원 미만	327	59.9	90.5	73.4	78.6	58.4	33.0	65.6
	500~600만 원 미만	198	67.2	90.9	78.3	77.3	60.1	28.8	67.1
	600~700만 원 미만	113	57.5	90.3	81.4	78.8	57.5	34.5	66.7
	700~800만 원 미만	100	63.0	92.0	80.0	85.0	66.0	35.0	70.2
800만 원 이상	153	69.9	90.8	85.6	81.7	63.4	35.9	71.2	

〈표 Ⅲ-1〉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이자율	물가 상승률	위험 분산	담보 대출	채권 가격	대출	100점 환산 점수
총 자산	1억 원 미만	606	54.5	78.1	65.7	73.1	43.9	31.2	57.7
	1억 원~3억 원 미만	680	56.8	82.8	68.8	75.4	45.9	34.6	60.7
	3억 원~5억 원 미만	402	57.2	91.0	78.1	78.1	54.5	31.8	65.1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58.7	90.6	78.1	81.9	55.5	34.0	66.5
	10억 원 이상	692	62.1	92.3	79.2	79.0	64.7	30.1	67.9

## 나. 퇴직연금

중고령자는 생애주기 상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단계에 있어 퇴직연금의 이해와 활용이 재무 안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조사는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현재 가입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관련 문항 4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해당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26%에 해당하는 780명이었다.

### 퇴직연금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B1.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X(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모두 수령 가능함)

B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개 선택]

- ① 회사가 모든 운용을 대신함  
 ② 연금 수령 시기만 선택함  
 ③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함  
 ④ 운용과 무관함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함(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예금, 펀드 등)을 선택해 운용한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B3.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 정답: ② X(퇴직연금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B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회사 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O(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부터는 40% 감면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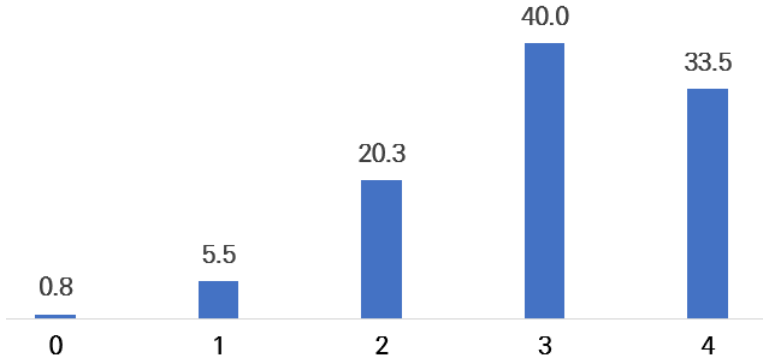
<그림 III-3>은 네 개의 문항 중에 정답 수의 분포를 보여주며,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4문항 중 3개를 맞추었다.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한 <그림 III-4>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96.5%)는 연금 수령방식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또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퇴직소득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각각 67.9%, 74.7%의 응답자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가지 문항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60.6%로 가장 낮았다. 이는 다른 문항들은 모두 O/X형이었던 것과 달리 해당 문항은 사지선다형이었던 점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소속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참여 여부나 운영 방식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전체 26.5%에 해당하며, 이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비율은 68%이다. 또한 가입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제도 가입률은 53.3%이며, 그 중 DC형 가입 비율은 54.6%로 나타났다.<sup>16)</sup>

---

16) 국가데이터터 보도자료(2025. 12. 15.),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그림 III-3〉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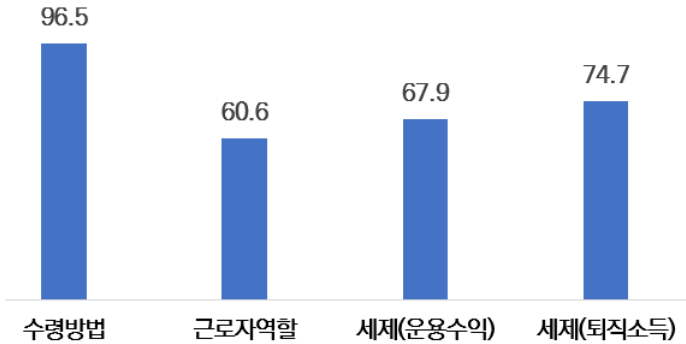


주: 1) x축은 정답을 맞춘 문항 개수를 의미함

2)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4〉 퇴직연금 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주: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을 대상으로 함

응답자 특성별로 정답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퇴직연금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 사이 응답자의 퇴직연금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개인소득이 높을수록(800만 원 이상 제외) 퇴직연금 이해도가 높아졌다.

〈표 III-2〉 퇴직연금 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수령방법	근로자 역할	세제 (운용 수익)	세제 (퇴직 소득)	100점 환산점수
전체		780	96.5	60.6	67.9	74.7	75.0
성별	남성	459	96.1	63.4	72.5	78.9	77.7
	여성	321	97.2	56.7	61.4	68.8	71.0
연령	55~59세	331	97.9	64.7	68.6	75.8	76.7
	60~64세	251	95.6	63.3	74.9	78.5	78.1
	65~69세	125	95.2	50.4	61.6	71.2	69.6
	70~79세	73	95.9	50.7	52.1	63.0	65.4
은퇴 여부	은퇴함	171	98.2	54.4	70.2	80.7	75.9
	퇴직 후, 재취업	200	93.5	57.0	67.0	73.5	72.8
	은퇴하지 않음	374	97.1	65.5	68.7	71.9	75.8
	해당 없음	35	100.0	60.0	54.3	82.9	74.3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9	100.0	55.6	44.4	55.6	63.9
	고등학교	143	95.8	53.1	55.9	69.9	68.7
	대학교	506	96.2	62.8	70.0	75.3	76.1
	대학원 이상	122	98.4	60.7	75.4	79.5	78.5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	92.7	53.7	61.0	68.3	68.9
	100~200만 원 미만	95	95.8	56.8	58.9	77.9	72.4
	200~300만 원 미만	167	95.8	56.9	64.7	71.9	72.3
	300~400만 원 미만	150	98.0	60.0	64.7	72.7	73.8
	400~500만 원 미만	96	96.9	64.6	74.0	70.8	76.6
	500~600만 원 미만	63	95.2	57.1	71.4	76.2	75.0
	600~700만 원 미만	43	95.3	58.1	62.8	88.4	76.2
	700~800만 원 미만	48	100.0	81.3	83.3	85.4	87.5
800만 원 이상	77	97.4	64.9	79.2	74.0	78.9	
총자산	1억 원 미만	107	95.3	60.7	65.4	64.5	71.5
	1억 원~3억 원 미만	171	93.6	51.5	64.9	73.1	70.8
	3억 원~5억 원 미만	97	96.9	56.7	57.7	70.1	70.4

〈표 Ⅲ-2〉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수령방법	근로자 역할	세제 (운용 수익)	세제 (퇴직 소득)	100점 환산점수
총자산	5억 원~10억 원 미만	171	96.5	65.5	63.7	74.3	75.0
	10억 원 이상	234	99.1	65.4	78.6	82.9	81.5

주: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을 대상으로 함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고령자는 노후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인 의료비 및 돌봄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본 설문에서는 노인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7개를 제시하였다.

###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측정 문항

C1.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전체 인구의 평균 의료비보다 두 배 이상 많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O(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전체 평균의 약 2.52배 수준(건강보험공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5,000원, 65세 이상: 5,434,000원))

C2. 다음 중 노인간병비(일상생활지원, 시설 이용 등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지원됨  
 ② 노인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국민연금에서 간병비가 자동으로 지급됨  
 ④ 노인간병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와 동일한 범위에서 지원됨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노인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지원, 간병, 시설 이용 등 노인간병비의 주요 재원이 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음)

C3.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입소 또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간병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O(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방문 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를 통해 간병과 일상생활 지원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음)

C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X(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C5.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방문요양    ② 시설급여    ③ 요양병원 입원비    ④ 방문간호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요양병원 입원비(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시설급여 등으로 구성됨)

C6.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연령 요건은 몇 세 이상인가요? [1개 선택]

- ① 55세 이상    ② 60세 이상    ③ 65세 이상    ④ 70세 이상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65세 이상(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인정 대상이 됨)

C7.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반적인 비율은? [1개 선택]

- ① 0%    ② 10~20%    ③ 30~50%    ④ 100%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10~20%(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비율: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그림 III-5〉는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전체 7문항 중 약 4.9개를 맞춰 69.3%의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III-6〉은 문항별 정답률을 통해 응답자의 이해 수준이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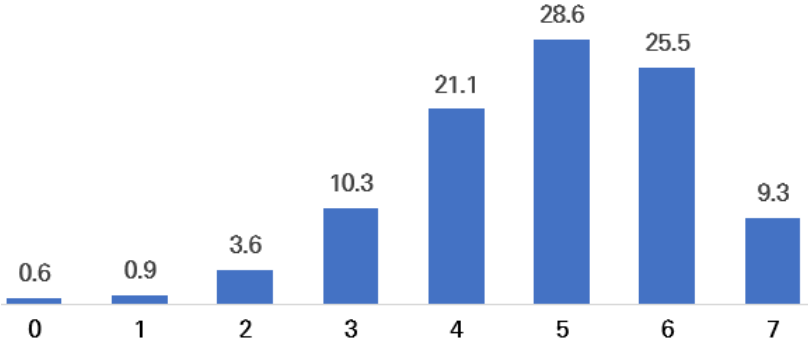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노인의 의료비 부담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인구의 평균 의료비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4.9%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입소 또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간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94.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연령 요건이 65세 이상임을 인지한 비율도 79%에 달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급여범위,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간병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7.1%,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62.1%,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는 요양병원 입원비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9%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그림 III-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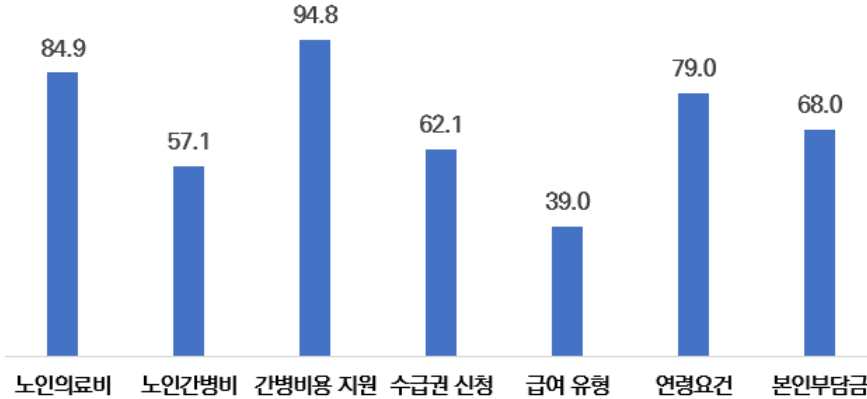
(단위: %)



주: x축은 정답 개수를 의미함

〈그림 III-6〉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여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남성보다 3.5%p 높게 나타났다. 노인 의료비 부담 및 장기요양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의 정

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64세 집단의 이해도가 71.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장기요양제도 이용과 가장 밀접한 연령대인 70~79세의 정답률을 65.6%로 가장 낮게 나타냈다. 은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은퇴자의 정답률은 70%, 非은퇴자들(은퇴하지 않음+퇴직 후 재취업)의 정답률은 69.7%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교육 수준과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개인의 월평균 소득 수준과는 뚜렷한 정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60~64세 연령층의 은퇴 여부 특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 정답률 및 점수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점수 (100점 환산)
전체		3,000	84.9	57.1	94.8	62.1	39.0	79.0	68.0	69.3
성별	남성	1,470	84.9	55.7	94.4	59.7	32.7	78.8	66.2	67.5
	여성	1,530	84.9	58.5	95.2	64.4	45.1	79.2	69.7	71.0
연령	55~59세	832	85.2	56.0	93.4	60.1	40.6	80.8	68.3	69.2
	60~64세	799	87.2	57.6	95.7	64.8	42.2	80.4	71.5	71.3
	65~69세	719	85.8	58.3	96.4	65.0	41.2	77.3	68.6	70.4
	70~79세	650	80.6	56.8	93.7	58.0	30.8	76.8	62.8	65.6
은퇴 여부	은퇴함	993	84.9	60.7	95.7	63.2	38.0	79.4	68.1	70.0
	퇴직 후, 재취업	633	85.5	57.0	95.3	67.1	39.8	81.0	70.8	70.9
	은퇴하지 않음	876	85.0	55.7	95.2	59.2	38.5	78.3	69.3	68.8
	해당 없음	498	83.9	52.6	91.8	58.2	41.2	76.7	62.0	66.6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0	77.8	47.8	90.0	53.3	32.2	73.3	47.8	60.3
	고등학교	868	84.0	52.1	93.3	55.4	35.6	77.9	66.5	66.4
	대학교	1,646	85.7	59.3	95.5	64.6	41.4	80.1	69.3	70.8
	대학원 이상	396	85.4	61.4	96.2	68.2	38.4	78.0	70.7	71.2

〈표 Ⅲ-3〉 계속

구분	응답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점수 (100점 환산)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82.8	51.8	93.9	58.1	38.0	77.5	62.2	66.3
	100~200만 원 미만	591	82.9	53.1	94.4	59.7	38.9	78.8	67.9	68.0
	200~300만 원 미만	614	85.7	55.7	94.8	65.0	40.9	80.1	72.6	70.7
	300~400만 원 미만	491	84.3	59.7	94.1	67.8	41.3	81.5	68.2	71.0
	400~500만 원 미만	327	87.5	59.6	95.1	58.7	37.9	78.6	68.5	69.4
	500~600만 원 미만	198	83.3	65.7	95.5	61.6	36.9	71.2	62.6	68.1
	600~700만 원 미만	113	83.2	58.4	93.8	61.9	34.5	74.3	66.4	67.5
	700~800만 원 미만	100	90.0	67.0	97.0	64.0	40.0	85.0	73.0	73.7
800만 원 이상	153	91.5	60.8	98.7	58.2	35.3	81.0	68.6	70.6	
총자산	1억 원 미만	606	79.4	49.8	92.6	55.8	36.0	74.3	67.7	65.1
	1억 원~3억 원 미만	680	85.1	53.8	94.3	60.9	38.2	82.2	68.8	69.1
	3억 원~5억 원 미만	402	84.8	58.5	95.8	63.2	41.8	79.6	65.4	69.9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86.5	58.7	96.0	64.4	40.8	77.9	67.1	70.2
	10억 원 이상	692	88.2	64.6	95.7	66.0	39.3	80.5	69.8	72.0

주: ① 노인의료비, ② 노인간병비, ③ 간병비용 지원, ④ 수급권 신청, ⑤ 급여 유형, ⑥ 연령요건, ⑦ 본인부담금

## 라.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마지막으로 주거비용 관리, 노인 돌봄비용 관리, 기초연금 신청, 은행 계좌 잔액 확인, 가격 비교 웹사이트 사용, 보험이나 저축상품 비교, 수급 가능한 복지혜택 확인, 정확한 세금 납부 여부 확인 등 재무관리와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 돌봄비용 관리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6점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시 59.5점),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100점 환산 시 62.7점).

〈표 III-4〉 재무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단위: %, 점)

구분	모른다 ①~③	안다 ④~⑥	6점 평균	100점 환산
주거비용 관리(전세금, 월세, 주택대출 상환금, 관리비, 수도전기 요금 등)	12.7	87.3	4.80	80.0
노인 돌봄비용 관리(요양병원 입원비, 요양시설 이용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 등)	45.4	54.6	3.57	59.5
기초연금 신청	38.6	61.4	3.87	64.5
은행 계좌 잔액 확인	4.9	95.1	5.31	88.5
가격 비교 웹사이트 사용	18.2	81.8	4.59	76.5
다양한 유형의 보험 비교	37.5	62.5	3.88	64.7
저축 상품 비교	27.6	72.4	4.17	69.5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	40.6	59.4	3.76	62.7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28.4	71.6	4.20	70.0

주: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6점 척도로 응답함

## 2. 금융행동: 돈 관리, 재무계획

앞 절에서는 중고령자의 일반적인 금융이해력을 비롯하여 퇴직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살펴보았다. 중고령기는 금융지식의 보유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 재무관리와 노후 대비 행동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고령자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재무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 가. 일상적 재무관리

먼저, 일상적 재무관리와 관련된 금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 방식과 신용카드 대금 관리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은 단기 부채 및 현금 흐름 관리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재무 건전성과 연관이 깊을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써 은행거래 내역이나 계좌 잔액을 검토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4.7%가 이 방법을 활용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가계부나 노트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19.6%)가 뒤를 이었다. 한편 스프레드시트나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3%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머릿속으로 관리한다는 응답도 11.5%로 일정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예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6.4%로 소수이지만 존재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남녀 모두 주요 수단으로 은행거래 내역 및 계좌 잔액 검토를 선택했으나, 세부적으로 남성은 스프레드시트 활용 비율(18.8%)이 여성(8.8%)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가계부·노트 기입 활용(25.5%)이 남성(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시에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은행거래 내역·계좌 잔액 검토와 가계부·노트 기록 등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의 활용이 높았다. 반대로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나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고령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반 관리 방식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학력 및 경제적 기반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고학력·고소득·고자산 집단일수록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스프레드시트 또는 자산관리 전문 앱 및 온라인 서비스 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5〉 수입·지출 관리 방법(복수 선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잔액 검토	가계 부나 노트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	자산 관리 전문 모바일 앱, 온라인 서비스	머릿속으로 관리	관리 하지 않음	기타	
전체	3,000	74.7	19.6	13.7	13.5	11.5	6.4	0.6	
성별	남성	1,470	72.2	13.5	18.8	13.5	11.8	7.1	0.5
	여성	1,530	77.2	25.5	8.8	13.5	11.2	5.7	0.7

〈표 III-5〉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잔액 검토	가계 부나 노트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	자산 관리 전문 모바일업, 온라인 서비스	머릿속으로 관리	관리하지 않음	기타	
연령	55~59세	832	71.5	16.9	17.7	16.5	10.8	6.0	0.4
	60~64세	799	73.7	17.3	13.6	12.9	12.6	8.3	0.6
	65~69세	719	77.5	21.8	12.7	13.1	11.7	6.0	0.3
	70~79세	650	77.1	23.4	9.7	10.8	10.8	4.9	1.2
은퇴 여부	은퇴함	993	75.3	22.0	13.4	14.5	10.3	6.1	0.7
	퇴직 후, 재취업	633	74.4	17.7	17.9	13.6	13.0	5.4	0.6
	은퇴하지 않음	876	75.0	17.1	16.1	14.2	11.9	5.6	0.3
	해당 없음	498	73.5	21.7	4.6	10.0	11.4	9.4	0.8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0	70.0	24.4	3.3	5.6	14.4	12.2	0.0
	고등학교	868	76.3	23.0	5.8	11.2	10.8	6.7	0.9
	대학교	1,646	74.0	18.3	16.2	15.4	12.2	6.2	0.3
	대학원 이상	396	75.5	16.4	22.7	12.4	9.6	5.1	1.3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72.6	23.5	5.1	8.7	12.3	9.9	1.2
	100~200만 원 미만	591	73.9	20.3	10.5	13.5	12.4	6.8	0.3
	200~300만 원 미만	614	75.1	19.4	11.1	14.3	10.6	5.7	0.5
	300~400만 원 미만	491	75.6	18.5	14.5	11.8	12.8	6.7	0.8
	400~500만 원 미만	327	76.1	16.2	17.1	14.1	10.4	5.5	0.6
	500~600만 원 미만	198	73.2	20.2	22.2	19.2	8.6	2.0	0.5
	600~700만 원 미만	113	75.2	16.8	23.0	13.3	10.6	3.5	0.0
	700~800만 원 미만	100	74.0	16.0	23.0	15.0	12.0	9.0	1.0
800만 원 이상	153	78.4	21.6	25.5	18.3	11.8	4.6	0.0	

〈표 III-5〉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잔액 검토	가계 부나 노트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	자산 관리 전문 모바일 앱, 온라인 서비스	머릿속으로 관리	관리하지 않음	기타	
총 자산	1억 원 미만	606	70.0	20.0	8.7	11.1	12.0	10.6	0.5
	1억 원~3억 원 미만	680	73.4	18.7	11.2	13.8	11.8	6.8	0.3
	3억 원~5억 원 미만	402	76.9	23.4	11.4	12.2	12.9	4.0	0.7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75.5	19.4	14.0	14.0	10.5	5.0	1.0
	10억 원 이상	692	78.3	18.2	21.4	15.5	10.8	4.9	0.6

다음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적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파악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4.7%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납부 관련하여 항상 전액을 갚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였고,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 최소 결제금액과 전액 사이를 납부하는 비율은 5.6%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전액 상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이 '항상 전액을 갚는다.'고 응답한 비율(78.4%)이 남성보다 5.3%p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액 상환 비율은 55~59세(74.8%)에서 60~64세(78.6%)로 상승한 뒤, 이후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다시 낮아지는 역U자형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70~79세에서는 전액 상환 비율이 72.2%로 가장 낮았으며, 잔액 이월(9.7%)과 부분 납부(6.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양상은 생애주기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은 은퇴 전후 시기와 맞물리는 구간으로, 개인에 따라 소득 구조가 변화하면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65세 이상 가구는 근로·사업소득보다 이전 소득<sup>17)</sup> 비중이 크게 나타나, 가용 현금흐름이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sup>18)</sup> 이러한 생애주

17)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와 가족(자녀)으로부터 받는

기 여건으로 인해 일부 응답자에서 잔액 이월 또는 부분 납부를 통해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행태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은퇴 여부와 신용카드 대금 관리 방식은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퇴직 후 재취업을 한 집단의 전액 상환 비율(73.6%)은 은퇴그룹(76.5%)이나 은퇴하지 않은 그룹(77.4%)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과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서 대금 관리가 다르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신용카드를 항상 전액 갚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Ⅲ-6〉 신용카드 대금 관리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항상 전액을 갚음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음	최소 결제금액과 전액 사이를 납부	신용카드 없음
전체		3,000	75.8	8.1	5.6	5.3
성별	남성	1,470	73.1	8.4	6.5	6.3
	여성	1,530	78.4	7.8	4.8	4.4
연령	55~59세	832	74.8	8.5	6.5	5.6
	60~64세	799	78.6	6.8	3.9	5.1
	65~69세	719	77.2	7.6	5.8	5.7
	70~79세	650	72.2	9.7	6.5	4.8
은퇴 여부	은퇴함	993	76.5	6.5	6.1	5.1
	퇴직 후, 재취업	633	73.6	10.1	5.8	6.6
	은퇴하지 않음	876	77.4	8.4	5.6	5.0
	해당 없음	498	74.3	8.0	4.4	4.6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됨

18) 국가데이터처(2026. 1. 12.), 「가계동향조사」, 2025 3/4,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표 Ⅲ-6〉 계속

구분		응답자 수	항상 전액을 갚음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음	최소 결제금액과 잔액 사이를 납부	신용카드 없음
최종학 력	중학교 이하	90	67.8	10.0	5.6	5.6
	고등학교	868	71.1	9.1	6.6	6.1
	대학교	1,646	77.8	8.0	5.0	4.7
	대학원 이상	396	79.5	6.1	6.3	6.3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67.1	6.3	5.6	7.7
	100~200만 원 미만	591	71.1	9.8	6.3	4.9
	200~300만 원 미만	614	79.3	8.5	4.7	4.7
	300~400만 원 미만	491	77.2	9.4	4.7	5.5
	400~500만 원 미만	327	78.6	6.4	7.0	4.9
	500~600만 원 미만	198	78.3	5.6	8.6	6.1
	600~700만 원 미만	113	75.2	13.3	5.3	5.3
	700~800만 원 미만	100	83.0	6.0	4.0	4.0
총자산	800만 원 이상	153	85.6	5.2	4.6	3.3
	1억 원 미만	606	61.1	10.7	7.9	7.8
	1억 원~3억 원 미만	680	71.0	10.9	6.3	5.7
	3억 원~5억 원 미만	402	77.6	8.7	6.7	3.5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81.9	5.6	5.0	5.3
10억 원 이상	692	86.8	4.9	2.9	3.9	

## 나. 노후 대비 행동

중고령층은 나이가 들에 따라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설문에서 노인 돌봄 필요를 대비한 계획 보유 여부를 질의하였다.

그 결과,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다.'는 33.3%로 가장 높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음'은 13.7%, '잘 모르겠음'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대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응답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 돌봄 대비 방식은 크게 개인이 자산을 활용해 직접 준비하는 방식과 외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 준비 방식으로는 저축(29.2%), 관련 보장성 보험 가입(25.1%), 재산 처분(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 지원에 대한 기대는 정부 지원(9.2%)과 가족의 비용 부담(2.3%)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돌봄 대비를 위한 직접 준비 방식 중에서도 저축 및 관련 보험 가입에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70~79세 집단에서는 해당 응답이 39.4%에 육박해, 돌봄 대비에 대한 인지는 존재하더라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젊은 중고령층에서는 노인 돌봄 상황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구체적 대비를 수행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퇴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가 달랐다.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음' 선택 비율은 은퇴하지 않은 집단(28.5%)에 비해 퇴직 후 재취업 집단과 은퇴 집단에서 각각 34% 정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연령대별 응답 분포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중고령층은 은퇴 이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 및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 행동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력, 소득, 자산이 높을수록 구체적인 실천을 안 한다고 응답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저축, 보험, 재산 처분 등 직접 준비 방식으로 대비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고학력·고소득·고자산 집단 일수록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돌봄 상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7〉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복수 선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00	33.3	29.2	25.1	13.7	9.2	8.3	2.3	1.9	0.3
성별	남성	1,470	33.0	26.7	22.9	16.9	8.0	8.8	2.0	1.9	0.1
	여성	1,530	33.5	31.6	27.1	10.7	10.3	7.8	2.5	2.0	0.5
연령	55~59세	832	31.3	29.9	25.7	15.5	8.3	8.2	2.0	2.5	0.4
	60~64세	799	30.4	29.8	26.7	14.8	9.6	7.6	2.0	1.9	0.3
	65~69세	719	33.2	30.7	24.8	12.9	8.9	9.2	1.7	1.7	0.4
	70~79세	650	39.4	25.8	22.6	11.1	10.0	8.3	3.5	1.5	0.2
은퇴 여부	은퇴함	993	34.0	30.0	22.6	13.1	8.1	9.8	2.3	1.3	0.2
	퇴직 후, 재취업	633	33.8	29.1	27.6	12.5	10.7	9.3	2.1	1.1	0.3
	은퇴하지 않음	876	28.5	33.0	29.6	15.5	8.2	7.8	1.9	1.6	0.3
	해당 없음	498	39.4	21.1	18.9	13.5	11.0	5.0	3.0	4.8	0.4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0	43.3	12.2	18.9	12.2	13.3	4.4	3.3	8.9	0.0
	고등학교	868	33.6	24.3	24.5	15.4	10.6	6.1	2.4	2.1	0.2
	대학교	1,646	33.5	30.4	25.0	13.6	8.3	8.7	2.1	1.8	0.4
	대학원 이상	396	29.3	38.9	28.0	10.9	8.6	12.4	2.3	0.8	0.3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39.0	18.4	16.7	14.8	11.1	4.6	2.7	5.6	0.2
	100~200만 원 미만	591	37.2	23.7	22.2	14.2	11.2	6.3	3.7	1.9	0.0
	200~300만 원 미만	614	36.8	28.3	23.6	12.1	10.4	8.3	1.3	1.5	0.5
	300~400만 원 미만	491	31.6	29.3	29.5	13.2	9.4	7.3	1.8	1.8	0.6
	400~500만 원 미만	327	29.7	31.8	25.7	18.3	4.6	7.6	2.1	1.5	0.3
	500~600만 원 미만	198	25.3	37.9	33.3	14.6	9.1	12.6	1.5	0.0	0.0
	600~700만 원 미만	113	25.7	45.1	23.9	12.4	8.0	13.3	4.4	0.9	0.0

〈표 III-7〉 계속

구분		응답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월 평균 개인 소득 (세후)	700~800만 원 미만	100	22.0	48.0	39.0	7.0	7.0	17.0	1.0	0.0	0.0
	800만 원 이상	153	24.8	41.8	30.1	11.8	2.6	15.7	1.3	0.0	0.7
총 자산	1억 원 미만	606	40.4	18.8	20.1	14.2	11.4	2.3	1.8	3.3	0.7
	1억 원~3억 원 미만	680	36.6	23.2	21.6	16.5	9.7	3.4	2.8	2.8	0.1
	3억 원~5억 원 미만	402	34.3	26.6	27.4	12.2	8.7	8.5	2.5	2.0	0.7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30.0	35.2	25.6	14.4	8.2	8.7	2.4	1.0	0.0
	10억 원 이상	692	26.0	40.3	30.9	11.0	7.8	17.9	1.9	0.7	0.1

주: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귀찮게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노인 돌봄 서비스, 간병 서비스, 요양시설, 치료 등)”에 대한 응답

- ①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음
- ② 비용 충당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음
- ③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함
- ④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음
- ⑤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기대함
- ⑥ 재산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⑦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기대함
- ⑧ 잘 모르겠음
- ⑨ 기타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 응답자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위임장 등 가족 등 제3자가 응답자를 대신해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는지 질의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위임장 등 대비를 했다는 응답률은 낮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사시 제3자가 응답자를 대신해 금융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련 조치를 했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은퇴 여부는 재무 관련 대비 여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대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재산관리 위임장 등 마련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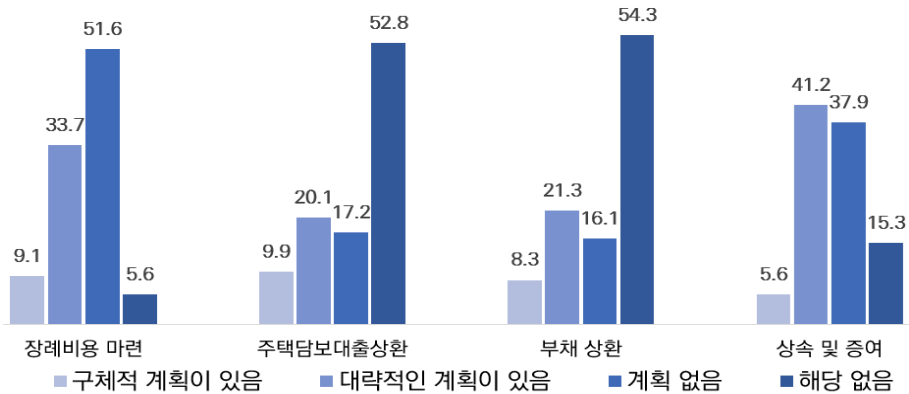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전체		3,000	16.0	81.8	2.2
성별	남성	1,470	15.0	83.0	2.0
	여성	1,530	16.9	80.7	2.4
연령	55~59세	832	13.1	83.7	3.2
	60~64세	799	15.6	82.6	1.8
	65~69세	719	17.2	81.2	1.5
	70~79세	650	18.8	79.2	2.0
은퇴 여부	은퇴함	993	16.1	82.2	1.7
	퇴직 후, 재취업	633	14.4	83.7	1.9
	은퇴하지 않음	876	16.6	81.7	1.7
	해당 없음	498	16.9	78.9	4.2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90	16.7	80.0	3.3
	고등학교	868	15.2	81.9	2.9
	대학교	1,646	15.7	82.3	2.0
	대학원 이상	396	18.9	80.1	1.0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15.7	80.1	4.1
	100~200만 원 미만	591	13.2	84.3	2.5
	200~300만 원 미만	614	15.3	82.1	2.6
	300~400만 원 미만	491	13.8	84.5	1.6
	400~500만 원 미만	327	18.7	80.4	0.9
	500~600만 원 미만	198	16.7	82.8	0.5
	600~700만 원 미만	113	22.1	75.2	2.7
	700~800만 원 미만	100	22.0	78.0	0.0
800만 원 이상	153	22.2	76.5	1.3	
총자산	1억 원 미만	606	14.7	81.8	3.5
	1억 원~3억 원 미만	680	16.0	81.3	2.6
총자산	3억 원~5억 원 미만	402	14.2	83.3	2.5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17.1	81.3	1.6
	10억 원 이상	692	17.2	81.9	0.9

마지막으로, 장례비용, 부채 정리, 주택담보대출 상환, 상속·증여 계획 등 노후 정리 및 자산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가 판단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그 외 부채 상환 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45~47% 정도였고, 장례비용 마련이나 상속 및 증여 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85~94% 정도였다. 준비 항목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만을 고려할 때, 장례비용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였다.

〈그림 III-7〉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증여 계획

(단위: %)



주: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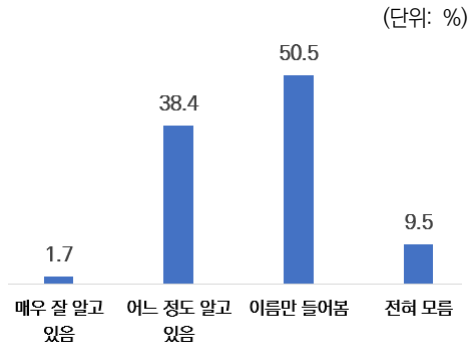
### 3. 금융행동: 신탁

중고령층은 건강 악화나 인지기능 저하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이 적절한 시기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신탁이 논의되고 있어 신탁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수준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신탁제도에 대해 적어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0.1%였으며, 약 60%는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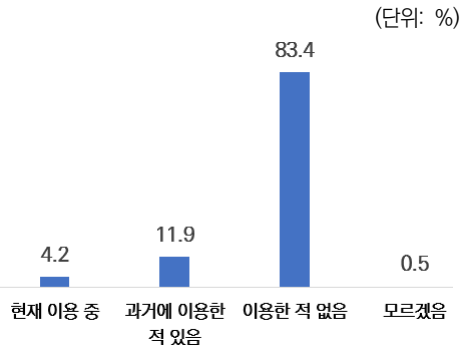
또한 신탁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40.1%)을 대상으로 신탁 이용 경험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과거에 신탁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16%에 그쳤다.

〈그림 III-8〉 신탁제도 인지도



주: “귀하는 신탁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

〈그림 III-9〉 신탁 이용 경험



주: 신탁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1,202명에게 “현재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

이후 동일 집단 중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탁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어서 현재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신탁을 이용할 의향을 6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의향이 있다고(④~⑥) 응답한 비율은 62.7%였다.

성별에 따른 신탁제도 이용 의향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성의 이용 의향이 남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64세 연령대의 이용 의향(65.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5~59세(64.6%)가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고령층에서 신탁제도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퇴 여부에 따라서는 퇴직 후 재취업 집단의 이용 의향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은퇴하지 않은 집단(62%), 은퇴 집단(5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의 이용 의향(68.8%)이 가장 높았고, 이후 중졸(66.7%), 대졸(64.6%), 고졸 집단이(54.1%)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 수준별로 비교하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72.4%)에서 신탁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산 규모

별로도 자산이 가장 큰 집단의 이용 의향(68.9%)이 가장 높았다. 다만 신탁 이용이 학력,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 신탁제도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금융재산 신탁: 금융기관에 현금·부동산·증권 등을 맡겨 운용하고, 치매·상속 시점 등 특정 상황에 자산 처분·지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제도(치매 신탁, 생애설계 신탁 등)
- 후견신탁: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수탁자가 피후견인(치매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며,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자산을 피후견인의 생계, 치료,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신탁
-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생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 승계를 설계하는 신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미리 유산 분배를 자동화할 수 있음
- 생전증여신탁: 생전 증여를 신탁 형태로 설계하여, 교육·결혼·양육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또는 시점마다 자산을 지급하는 구조로 제공됨

〈표 III-9〉 신탁제도 이용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①~③	④~⑥	6점 평균
전체		1,151	37.3	62.7	3.66
성별	남성	653	38.0	62.0	3.65
	여성	498	36.3	63.7	3.66
연령	55~59세	280	35.4	64.6	3.74
	60~64세	312	34.3	65.7	3.66
	65~69세	299	39.1	60.9	3.64
	70~79세	260	40.8	59.2	3.57
은퇴 여부	은퇴함	408	40.7	59.3	3.55
	퇴직 후, 재취업	292	30.5	69.5	3.88
	은퇴하지 않음	321	38.0	62.0	3.61
	해당 없음	130	40.0	60.0	3.58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21	33.3	66.7	3.71
	고등학교	279	45.9	54.1	3.41
	대학교	681	35.4	64.6	3.70
	대학원 이상	170	31.2	68.8	3.86

〈표 III-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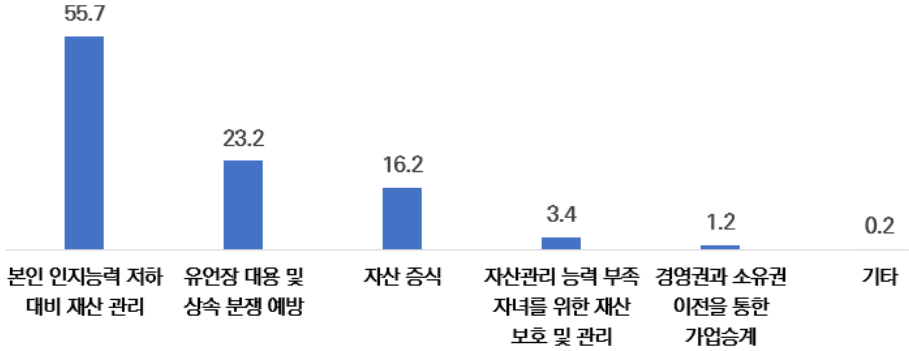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①~③	④~⑥	6점 평균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113	42.5	57.5	3.50
	100~200만 원 미만	200	37.0	63.0	3.67
	200~300만 원 미만	241	38.2	61.8	3.52
	300~400만 원 미만	192	40.1	59.9	3.54
	400~500만 원 미만	136	35.3	64.7	3.81
	500~600만 원 미만	91	31.9	68.1	3.91
	600~700만 원 미만	54	40.7	59.3	3.69
	700~800만 원 미만	48	37.5	62.5	3.67
	800만 원 이상	76	27.6	72.4	3.97
총자산	1억 원 미만	184	47.3	52.7	3.38
	1억 원~3억 원 미만	222	34.7	65.3	3.64
	3억 원~5억 원 미만	149	35.6	64.4	3.70
	5억 원~10억 원 미만	258	41.5	58.5	3.60
	10억 원 이상	338	31.1	68.9	3.84

주: 현재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들(1,151명)에게 '앞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점 척도로 응답함(① 전혀 의향 없음, ..., ⑥ 매우 의향 있음)

신탁제도 이용에 '전혀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1,055명)으로, 신탁을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유언장 대응 및 상속분쟁 예방(23.2%), 자산 증식(16.2%), 자산관리 능력 부족 자녀를 위한 재산 보호 및 관리(3.4%), 경영권과 소유권 이전을 통한 기업승계(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신탁제도 이용 목적

(단위: %)



주: 현재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 전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한 1,055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신탁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1명이었는데,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증권회사가 23.5%, 신탁회사가 13.7%, 보험회사가 7.8% 순이었다. 추가적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한 47명에게 신탁상품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57.4%가 자산 증식이라고 응답하였고, 23.4%가 본인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 관리라고 응답하였다.

#### 4. 금융행동: 금융자문 및 정보 검색

금융상품과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정보 접근성과 탐색 역량의 차이가 재무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자문 및 정보검색 관련 설문 결과를 통해 재무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언 활용 행태를 점검하였다.

재무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은퇴 여부 별로는 현직에 있거나,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조언 활용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월평균 소득 역시 전반적으로 조언 활용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고소득 구간(700~800만 원)에서는 인접 소득 구간 대비 조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예외적 양상이 관찰되었다.

〈표 Ⅲ-10〉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 활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전체		3,000	43.1	56.9
성별	남성	1,470	40.2	59.8
	여성	1,530	45.8	54.2
연령	55~59세	832	48.9	51.1
	60~64세	799	45.3	54.7
	65~69세	719	37.4	62.6
	70~79세	650	39.1	60.9
은퇴 여부	은퇴함	993	40.4	59.6
	퇴직 후, 재취업	633	46.0	54.0
	은퇴하지 않음	876	44.9	55.1
	해당 없음	498	41.6	58.4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90	36.7	63.3
	고등학교	868	39.5	60.5
	대학교	1,646	44.0	56.0
	대학원 이상	396	48.5	51.5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39.7	60.3
	100~200만 원 미만	591	40.8	59.2
	200~300만 원 미만	614	42.8	57.2
	300~400만 원 미만	491	42.2	57.8
	400~500만 원 미만	327	45.6	54.4
	500~600만 원 미만	198	46.5	53.5
	600~700만 원 미만	113	51.3	48.7
	700~800만 원 미만	100	42.0	58.0
800만 원 이상	153	49.7	50.3	
총자산	1억 원 미만	606	40.1	59.9
	1억 원~3억 원 미만	680	40.4	59.6
	3억 원~5억 원 미만	402	43.8	56.2

〈표 Ⅲ-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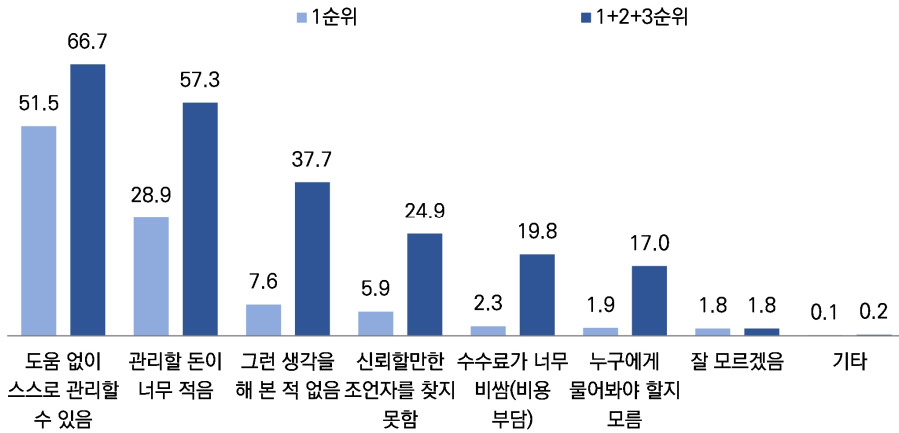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총자산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44.5	55.5
	10억 원 이상	692	46.5	53.5

구체적인 활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 시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도구 등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8명을 대상으로 조언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였다. 응답자는 비활용 사유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조언을 구하지 않는 주요 원인(1순위)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 5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리할 돈이 너무 적음'(28.9%), '생각해 본 적 없음'(7.6%), '신뢰할 만한 조언자가 없음'(5.9%), '비용부담'(2.3%), '조언 구할 대상을 모름'(1.9%)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더라도 각 항목의 순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Ⅲ-11〉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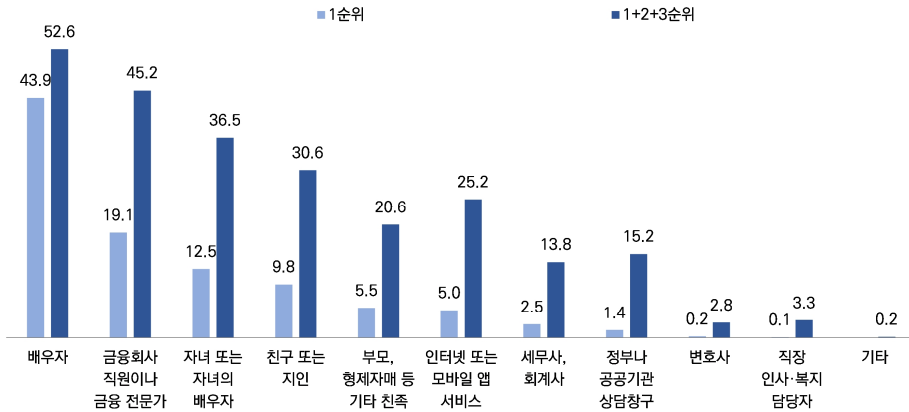
주: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8명을 대상으로 함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고 응답한 1,292명에게도 추가 질문을 하였다. 먼저 주로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하였고, 응답자는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는 배우자(4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19.1%),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12.5%), 친구나 지인(9.8%), 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5.5%),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서비스(5%), 세무사/회계사(2.5%)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비율(25.2%)이 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2〉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조언을 구하는 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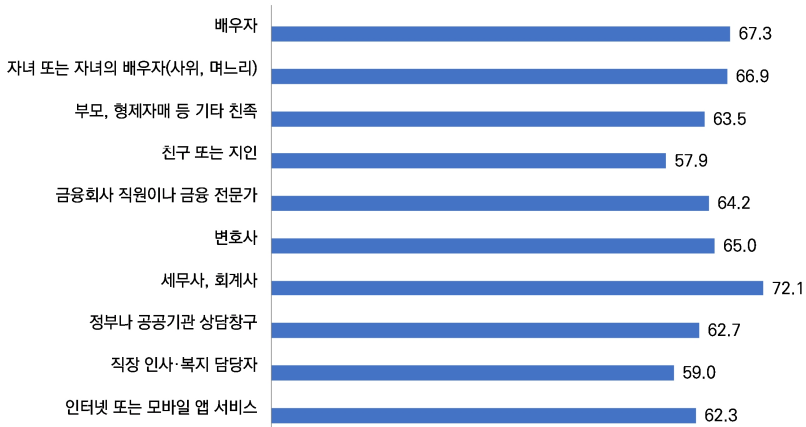


주: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고 응답한 1,292명을 대상으로 함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1~3순위)에 대해 조언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아래 그림은 대상별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세무사나 회계사에 대한 만족도(72.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배우자(67.3%),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66.9%), 변호사(65%),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64.2%)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I-13〉 재무관리 관련 조언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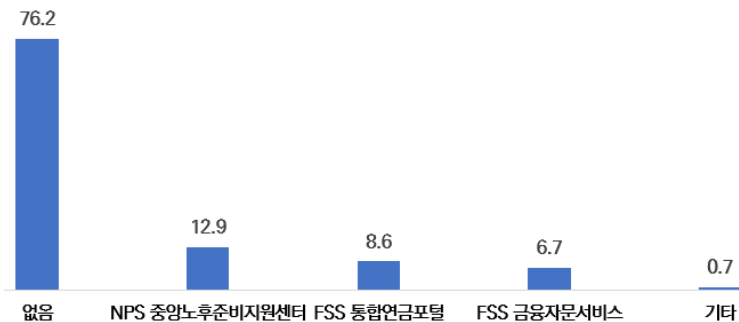


주: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그림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

재무관리 관련 조언 활용과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은퇴기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전체 76.2%는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8.6%,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는 6.7%였다.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4〉 은퇴기 재무관리 정보 제공기관 이용 경험

(단위: %)



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센터는 대면, 온라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온라인;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는 대면, 전화, 온라인이 가능함

방문 또는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금융감독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재무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모두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 III-11〉 공공 재무관리 정보 만족도

(단위: %,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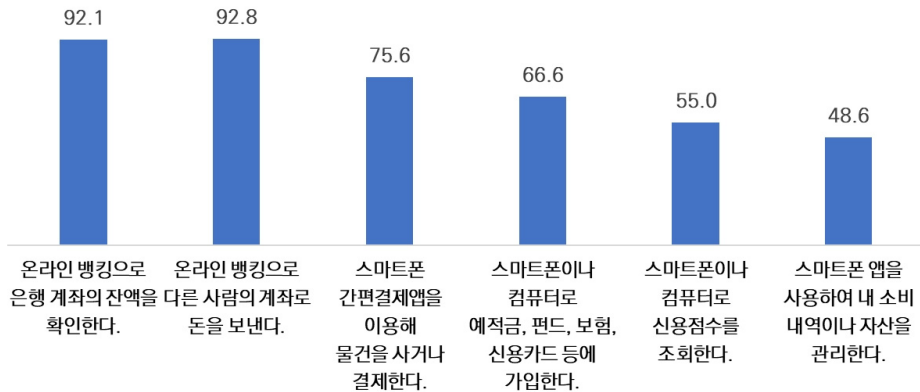
구분	불만족 ①~③	만족 ④~⑥	6점 평균	응답자 수
금융감독원 자문서비스	28.5	71.5	4.02	20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2.9	77.1	4.21	258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4.4	75.6	4.19	386

주: “귀하께서는 방문 또는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재무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6점 척도로 응답함

한편 〈그림 III-15〉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정도를 보여주는데, 온라인 बैं킹을 이용한 계좌 잔액 확인이나 이체 이용 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편결제앱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75.6%,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금융상품을 구입한다는 비율은 66.6% 수준이었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소비내역을 확인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비율은 48.6%에 불과했다.

〈그림 III-15〉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비율

(단위: %)



## 5. 금융행동: 연금 인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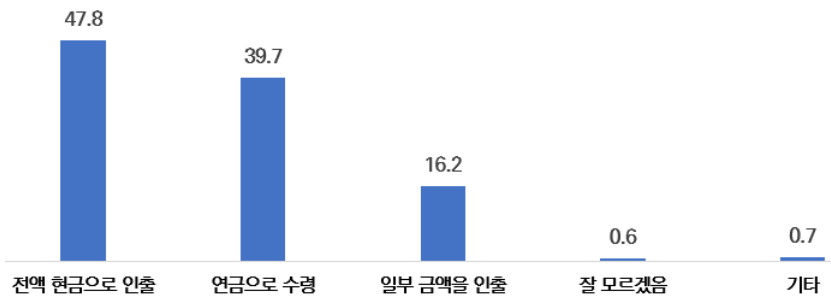
### 가. 퇴직연금 인출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780명 중, 퇴직연금에서 연금 소득을 받고 있거나 수령한 경험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345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인출 경험에 대해 질의하였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가 47.8%로 가장 많았고,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39.7%,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는 16.2%였다.

〈그림 III-16〉 퇴직연금 수령방법(모두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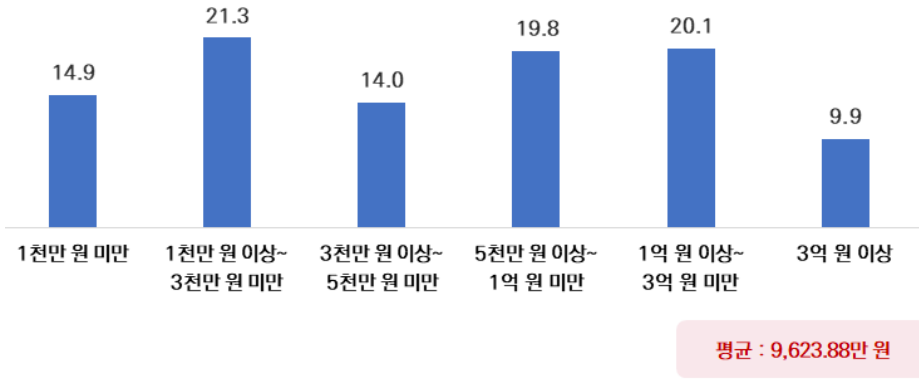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345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16〉은 연금 수령, 일부 인출, 전액 인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퇴직연금에서 처음으로 돈을 인출했을 때, 퇴직연금의 총 적립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퇴직연금 평균 적립 금액은 약 9,624만 원이었으며, 평균 적립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억 원 이상을 적립한 가입자는 응답자의 30%를 차지하였다.

〈그림 Ⅲ-17〉 퇴직연금 총 적립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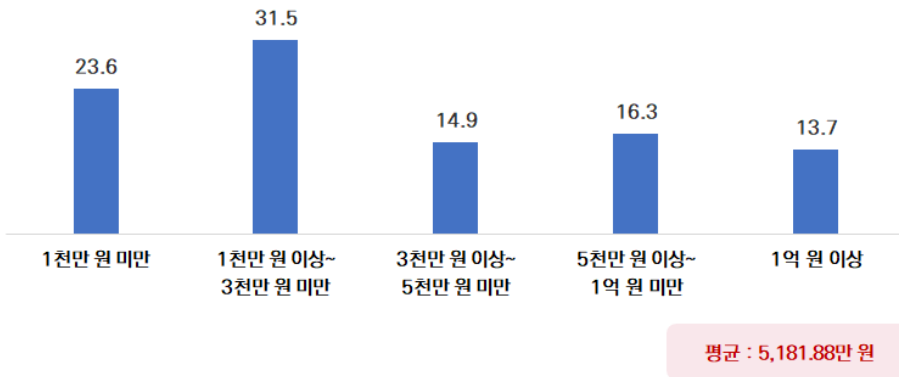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345명 중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제외)

〈그림 Ⅲ-17〉은 응답 시점까지 응답자가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평균 수령 금액은 약 5,182만 원이었으며,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수령한 경우가 31.5%로 가장 많았다.

〈그림 Ⅲ-18〉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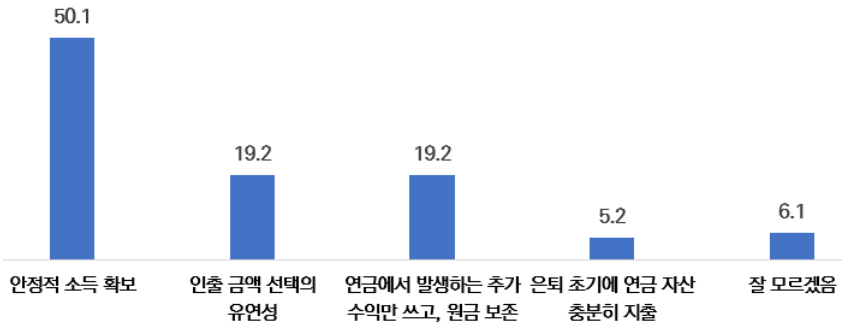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묻은 결과, 안정적 소득확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고, 인출 금액 선택의 유연성과 연금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만 쓰고 원금만 보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은퇴 초기에 연금 자산을 충분히 지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5.2%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III-19〉 퇴직연금 선호 수령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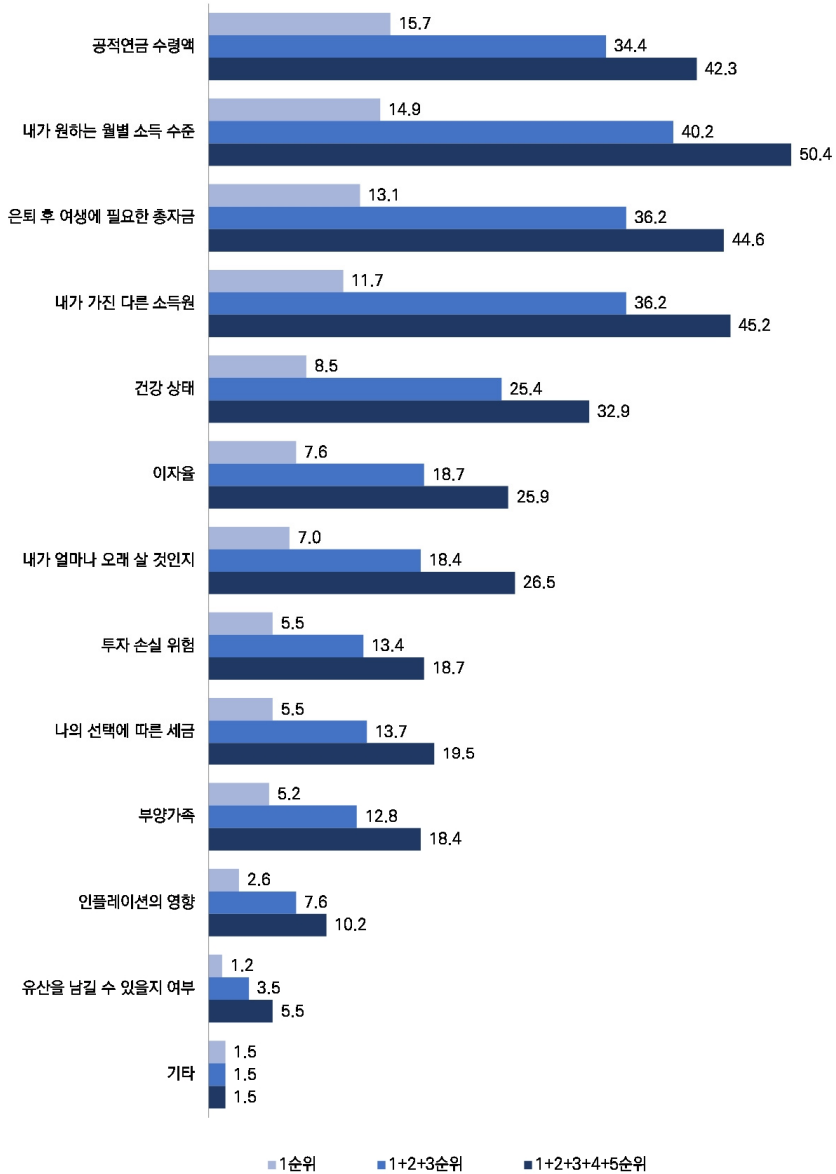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에서 돈을 어떻게 인출할지 결정할 때, 고려한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는 공적연금 수령액(15.7%),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14.9%),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13.1%),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11.7%)이었다. 5순위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50.4%),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45.2%),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44.6%), 공적연금 수령액(42.3%) 순이었다.

〈그림 III-20〉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고려한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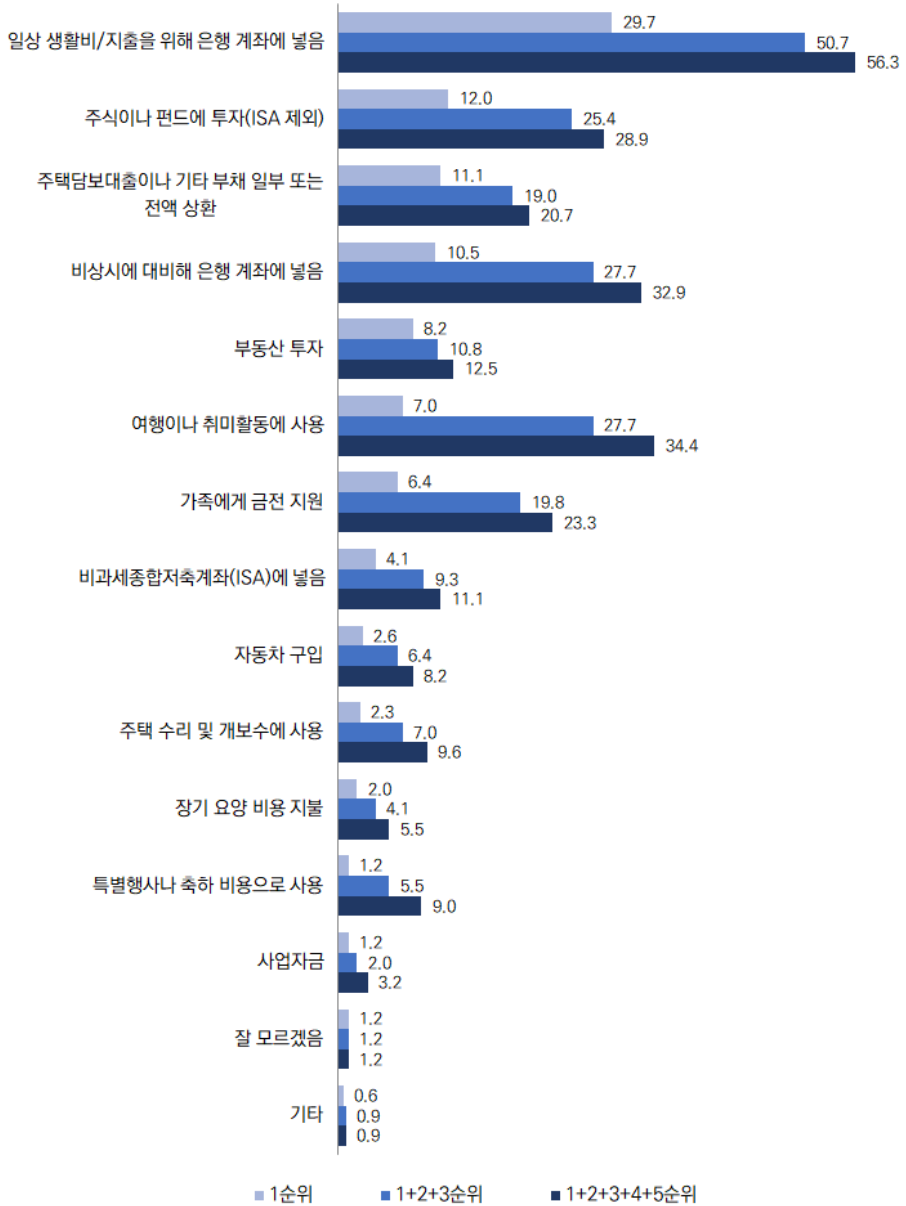


주: 1)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2) '퇴직연금에서 돈을 어떻게 인출할지 결정할 때, 다음 항목들 중 어떤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5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343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질의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는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ISA 제외)했다는 응답이 12.0%,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했다는 답변이 11.1%,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답변이 10.5%였다. 5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순위가 다소 바뀌었는데,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응답이 56.3%,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34.4%,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응답이 32.9%,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는 응답이 28.9%였다.

〈그림 III-21〉 퇴직연금 사용처 또는 사용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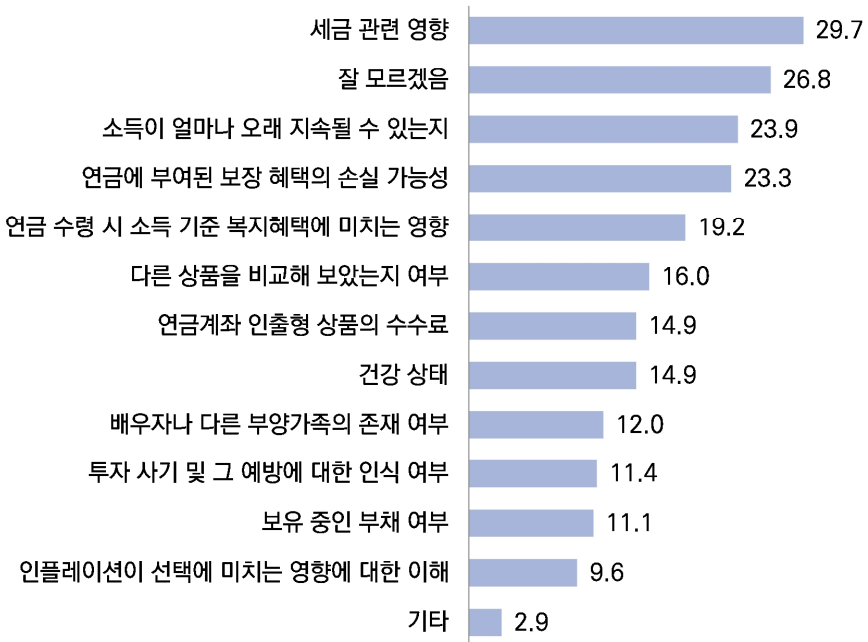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응답자가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했거나, 일부 인출 또는 전액 인출했을 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질의한 결과, 세금 관련 영향, 소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연금에 부여된 혜택의 손실 가능성, 연금 수령 시 소득 기준 복지혜택에 미치는 영향, 다른 상품과의 비교 여부, 연금계좌 인출형 상품의 수수료,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8%였다.

〈그림 III-22〉 퇴직연금 수령/인출 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하거나 제공한 정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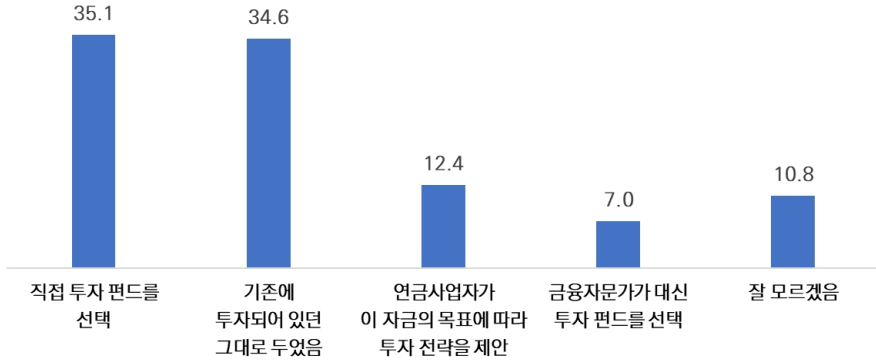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했거나, 일부 금액 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 퇴직연금에 남겨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조사한 결과, 직접 투자 펀드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35.1%,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그대로 두었다는 응답이 34.6%, 연금사업자가 자금의 목표에 따라 투자전략을 제안했다는 응답이 12.4%였다.

〈그림 III-23〉 남겨둔 퇴직연금 자금의 투자 방식 선택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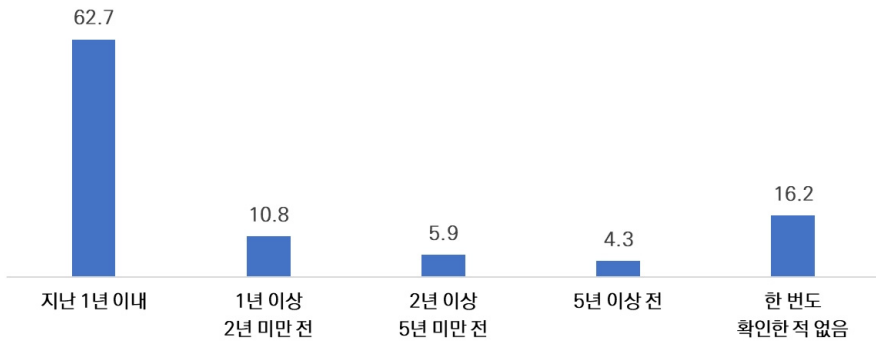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185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을 질의한 결과, 2년 이상 되었다는 응답이 26.4%였고, 이 중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6.2%였다.

〈그림 III-24〉 퇴직연금 운용(투자) 상황 마지막 확인 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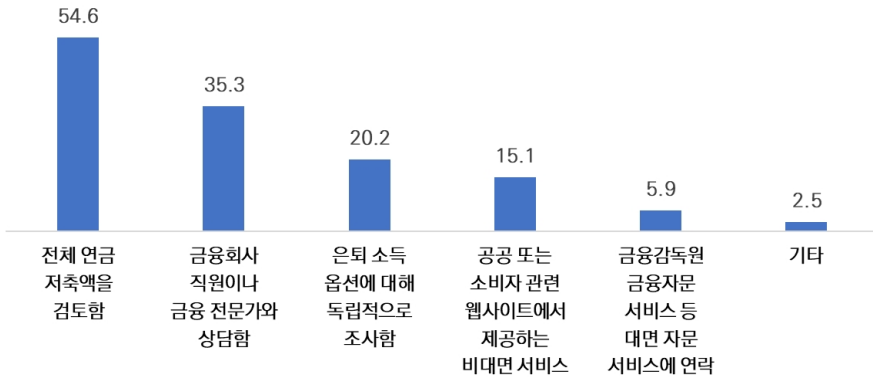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185명을 대상으로 함

퇴직연금 보유자 중 은퇴하였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239명에게 퇴직연금 수령이 개시되기 전 연금사업자로부터 은퇴 안내 자료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지 질의한 결과, 기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였다. 이들에게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소득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물었다. 전체 연금 저축액을 검토했다는 응답이 54.6%,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했다는 응답이 35.3%, 은퇴 소득 옵션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했다는 응답이 20.2%였다.

〈그림 III-25〉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 소득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이후 행동

(단위: %)



주: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은퇴 안내 자료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11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수 선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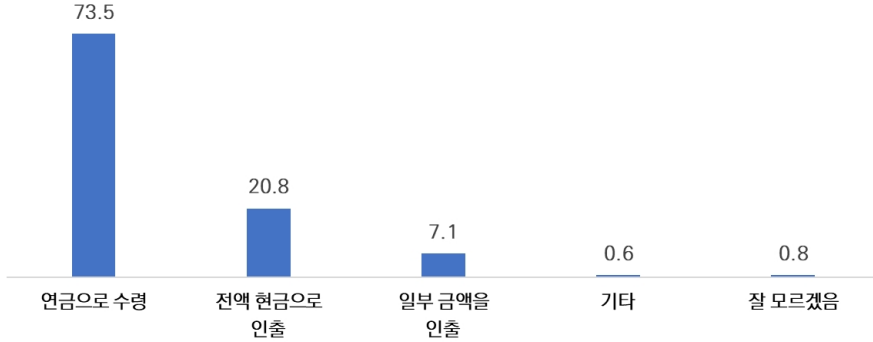
## 나. 개인연금 인출

과거에 개인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1,223명 중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30명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인출 경험에 대해 질의하였다.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73.5%,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가 20.8%로 가장 많았고,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는 7.1%였다.

〈그림 Ⅲ-26〉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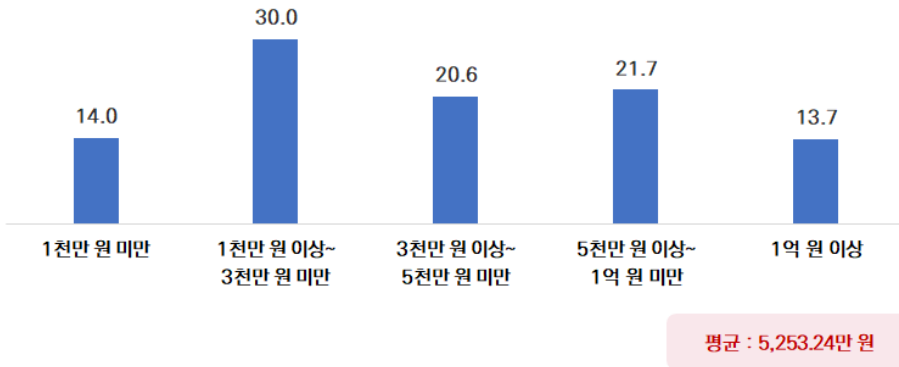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30명을 대상으로 함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 일부 인출, 전액 인출 등으로 처음 돈을 수령했을 당시, 개인연금의 총 적립 금액의 평균은 약 5,253만 원이었는데, 〈그림 Ⅲ-27〉은 총 적립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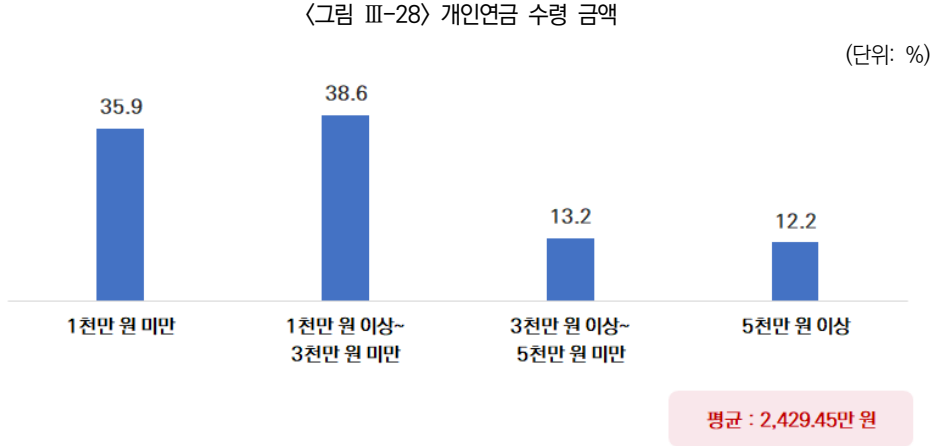
〈그림 Ⅲ-27〉 개인연금 총 적립 금액

(단위: %)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21명을 대상으로 함(개인연금 수령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제외)

응답 시점까지 개인연금 적립금 중 수령한 금액의 평균은 약 2,429만 원이었고, 수령 금액의 분포는 <그림 III-28>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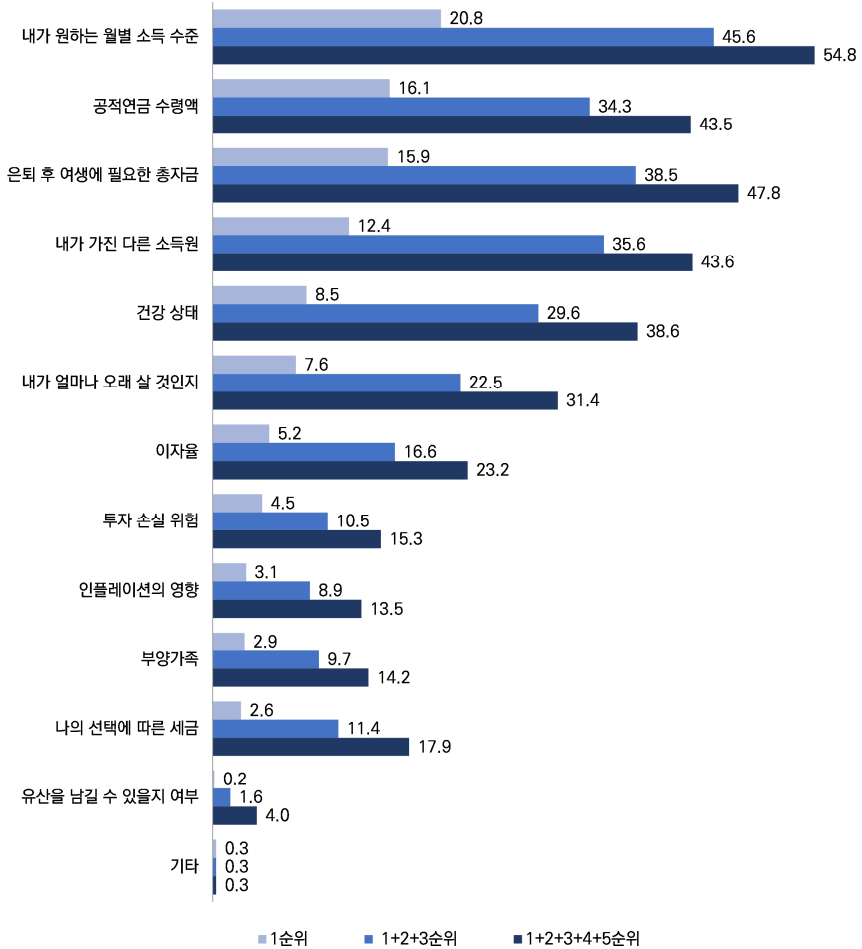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21명을 대상으로 함

1순위 기준으로는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공적연금 수령액,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 등의 순서였고, 5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내가 가진 다른 소득원, 공적연금 수령액의 순이었다.

〈그림 III-29〉 개인연금 인출 결정 시 고려한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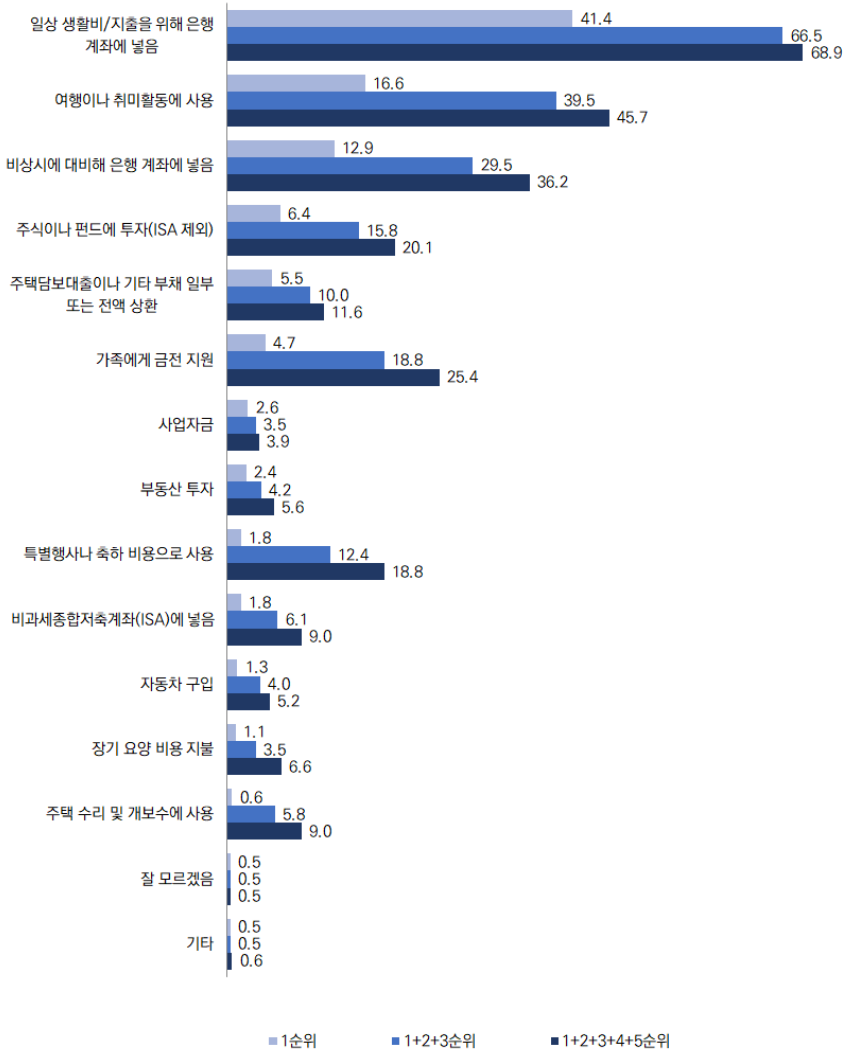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는 621명을 대상으로 함(개인연금 수령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제외)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621명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질의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는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한다는 경우가 16.6%,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응답이 12.9%였다. 5순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도 1순위와 거의 비슷했는데, 일상 생활비나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응

답이 68.9%,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45.7%,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 계좌에 넣는다는 답변이 36.2%였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는 응답도 20.1%였다.

〈그림 III-30〉 개인연금 사용처 또는 사용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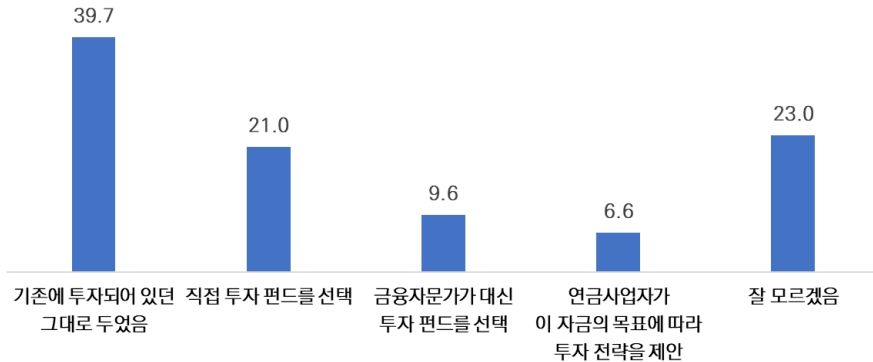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621명을 대상으로 함

개인연금에 남겨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그대로 두었다는 응답이 39.7%였고, 직접 투자 펀드를 선택했다는 응답은 21.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0%나 되었다.

〈그림 Ⅲ-31〉 남겨둔 개인연금 자금의 투자 방식 선택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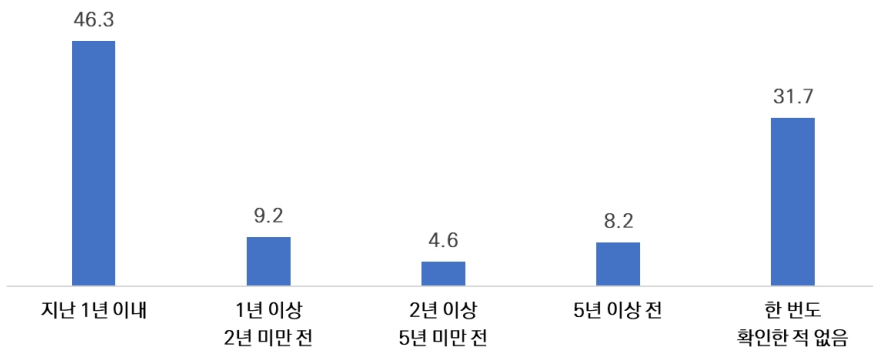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499명을 대상으로 함

개인연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을 질의한 결과, 2년 이상 되었다는 응답이 44.5%였고, 이 중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1.7%였다.

〈그림 Ⅲ-32〉 개인연금 운용(투자) 상황 마지막 확인 시점

(단위: %)



주: 개인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응답자 499명을 대상으로 함

## 6. 금융후생

### 가. 금융후생

응답 당시 자산, 부채, 저축 등 재무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의한 결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44.8점으로 만족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높아졌고, 은퇴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12〉 본인의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6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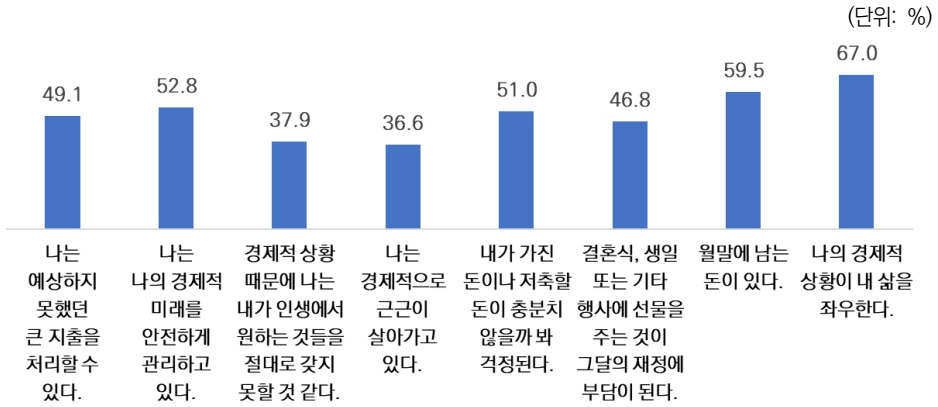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①~③	④~⑥	6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체		3,000	53.0	47.0	3.24	44.83
성별	남성	1,470	52.4	47.6	3.27	45.32
	여성	1,530	53.7	46.3	3.22	44.37
연령	55~59세	832	57.1	42.9	3.10	41.97
	60~64세	799	52.3	47.7	3.24	44.71
	65~69세	719	51.3	48.7	3.33	46.62
	70~79세	650	50.6	49.4	3.33	46.68
은퇴 여부	은퇴함	993	47.2	52.8	3.41	48.26
	퇴직 후, 재취업	633	52.4	47.6	3.27	45.50
	은퇴하지 않음	876	55.4	44.6	3.17	43.36
	해당하지 않음	498	61.2	38.8	2.99	39.76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0	65.6	34.4	2.82	36.44
	고등학교	868	60.9	39.1	2.99	39.77
	대학교	1,646	52.1	47.9	3.29	45.86
	대학원	396	36.9	63.1	3.68	53.59

〈표 III-12〉 계속

		응답자 수	①~③	④~⑥	6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72.4	27.6	2.66	33.17
	100~200만 원 미만	591	66.0	34.0	2.84	36.82
	200~300만 원 미만	614	55.7	44.3	3.15	43.03
	300~400만 원 미만	491	51.1	48.9	3.34	46.80
	400~500만 원 미만	327	36.7	63.3	3.72	54.37
	500~600만 원 미만	198	38.4	61.6	3.73	54.55
	600~700만 원 미만	113	36.3	63.7	3.73	54.51
	700~800만 원 미만	100	33.0	67.0	3.80	56.00
	800만 원 이상	153	25.5	74.5	4.04	60.78
총 자산	1억 원 미만	606	70.1	29.9	2.65	33.00
	1억 원~3억 원 미만	680	67.1	32.9	2.83	36.59
	3억 원~5억 원 미만	402	55.2	44.8	3.17	43.43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48.1	51.9	3.45	49.10
	10억 원 이상	692	27.5	72.5	4.01	60.29

다음으로 재무 상태를 서술하는 여덟 개 문장을 제시하고 해당 문장이 응답자의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림 III-33〉은 6점 척도 응답 중 ④~⑥으로(긍정 대담) 응답한 비율을 표시한다.

〈그림 III-33〉 재무 상태 설명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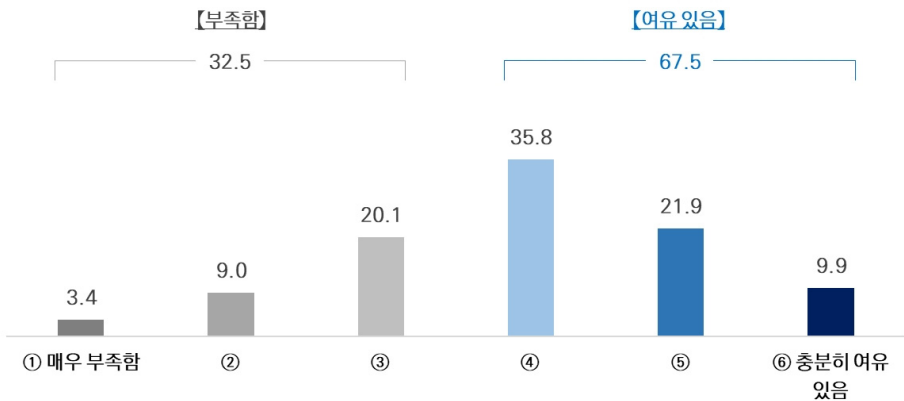
주: 모든 응답자(3,000명)를 대상으로 함

### 나. 생활비: 은퇴자

응답자가 은퇴했거나,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고, 여유 있다(④~⑥으로 응답)고 응답한 비율이 67.5%였다.

〈그림 III-34〉 최근 1년간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단위: %)



주: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1,106명)를 대상으로 함

〈표 Ⅲ-13〉 소득 및 자산 수준별 생활비 충당 정도

(단위: %)

구분		부족함 ①~③	여유 있음 ④~⑥	$\chi^2$ 검정치
개인 월소득	300만 원 미만	42.6	57.5	77.60***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9.1	80.9	
	600만 원 이상	10.5	89.5	
자산	1억 원 미만	58.9	41.1	124.89***
	1억 원~3억 원 미만	43.8	56.3	
	3억 원~5억 원 미만	28.0	72.0	
	5억 원~10억 원 미만	24.4	75.6	
	10억 원 이상	15.0	85.1	

주: 1)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1,106명)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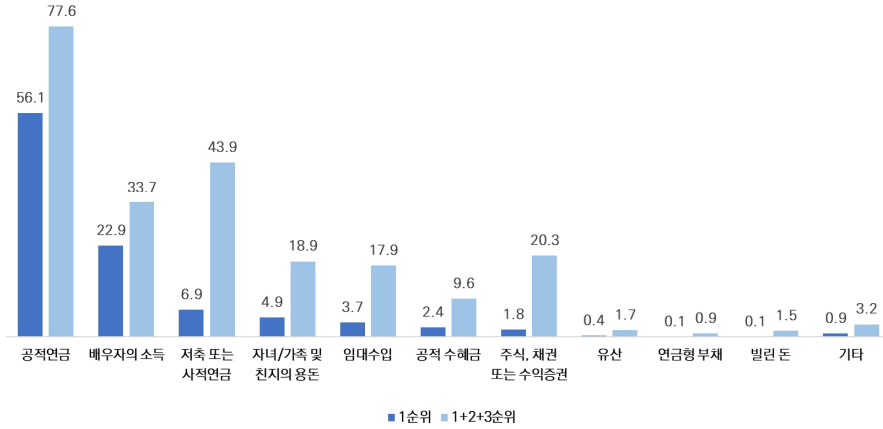
2)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Ⅲ-13〉은 소득별, 자산별로 생활비 충당 정도를 보여주는데,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산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응답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1순위 기준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소득, 저축 또는 사적연금 순이었고, 3순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공적연금, 저축 또는 사적연금, 배우자의 소득 순이었다.

〈그림 III-35〉 가구의 주된 소득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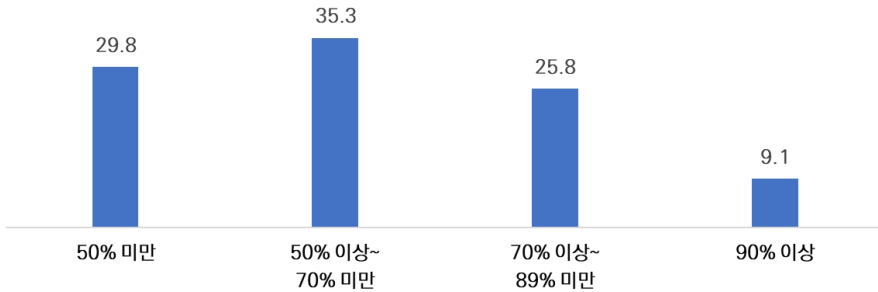


주: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을 대상으로 함

평균적으로 현재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였고, 〈그림 III-36〉는 은퇴 후 상대적 월소득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III-36〉 현재 가구 월소득과 은퇴 전 가구 월소득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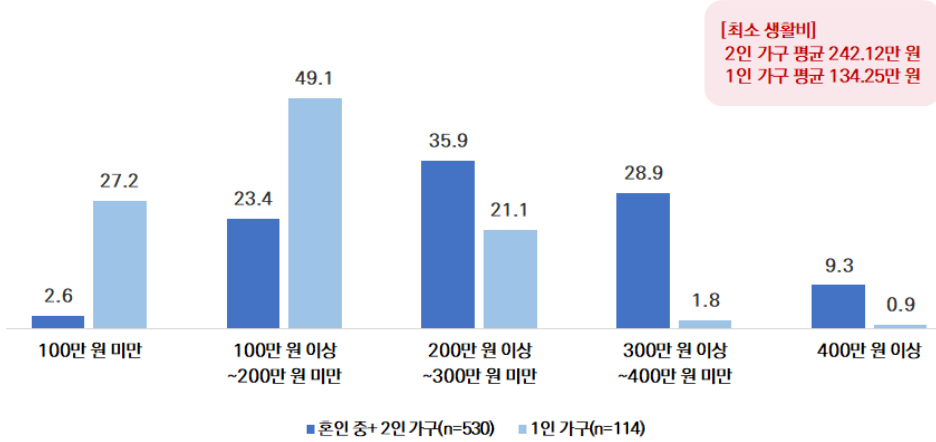


주: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월 최소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인 부부 기준으로 약 242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134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약 341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199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Ⅲ-37〉 현재 가구 월 최소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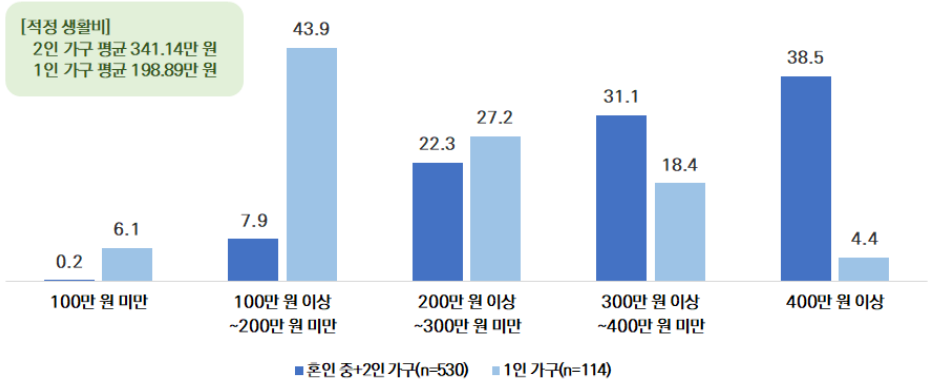
(단위: %)



주: 은퇴자이거나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 중 혼인 상태이며 2인 가구인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그림 Ⅲ-38〉 현재 가구 월 적정 생활비

(단위: %)



주: 은퇴자이거나 배우자가 은퇴한 응답자 1,106명 중 혼인 상태이며 2인 가구인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다. 생활비: 비은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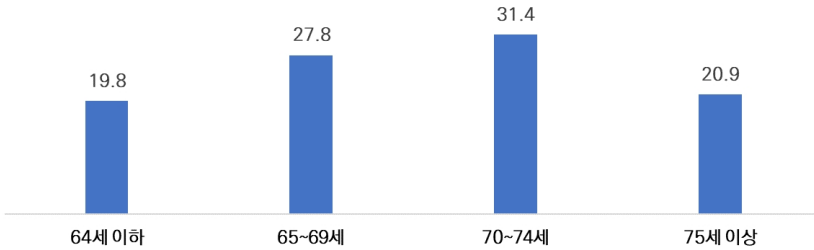
현재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와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은퇴 예상 연령, 예상 노후 생활비, 노후 준비 상황을 질의하였다.

먼저 평균적으로 은퇴 예상 연령은 약 68.6세로 응답하였고, 은퇴 예상 연령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39〉 은퇴 예상 연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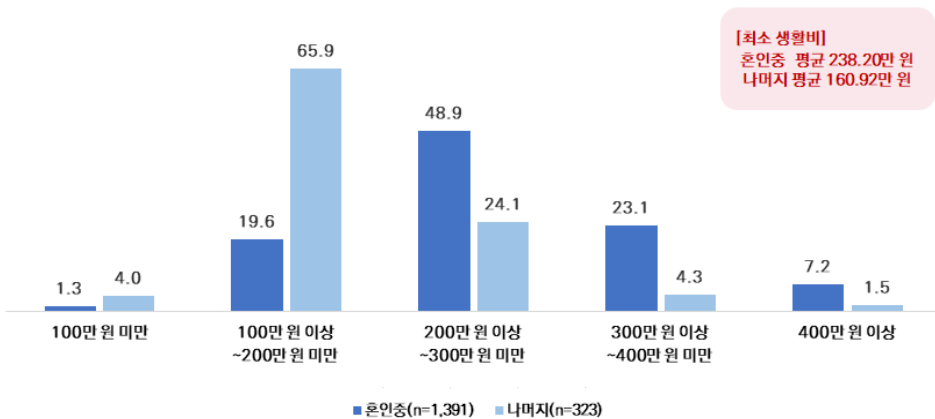


주: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예상 노후 최소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약 238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161만 원으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약 336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약 232만 원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III-40〉 예상 노후 최소 생활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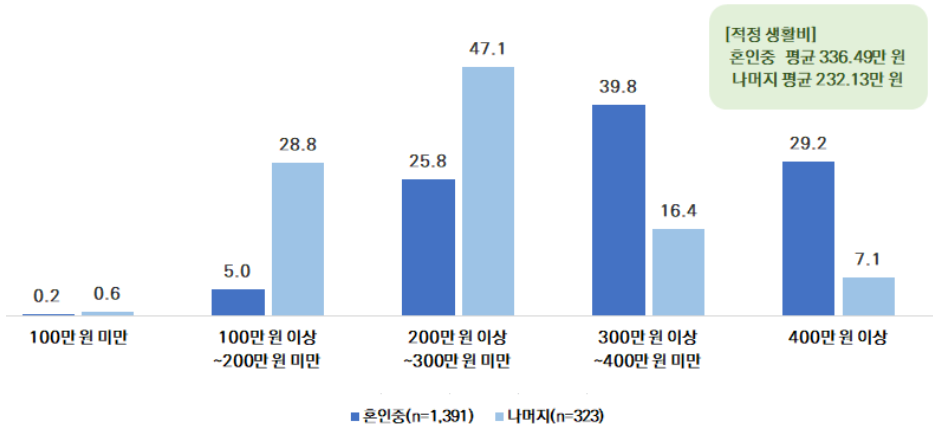


주: 1)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부부 기준으로, 나머지(미혼, 별거, 이혼, 사별)는 개인 기준으로 답변을 요청함

〈그림 III-41〉 예상 노후 적정 생활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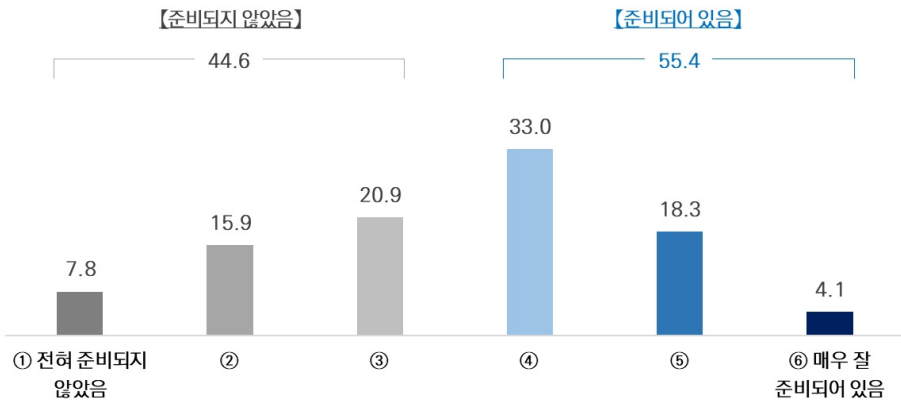


주: 1)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부부 기준으로, 나머지(미혼, 별거, 이혼, 사별)는 개인 기준으로 답변을 요청함

노후 준비 상황을 6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④~⑥)한 비율은 55.4%였고, 6점 척도 평균 점수는 3.51점이었는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50.2점이었다.

〈그림 III-42〉 노후 준비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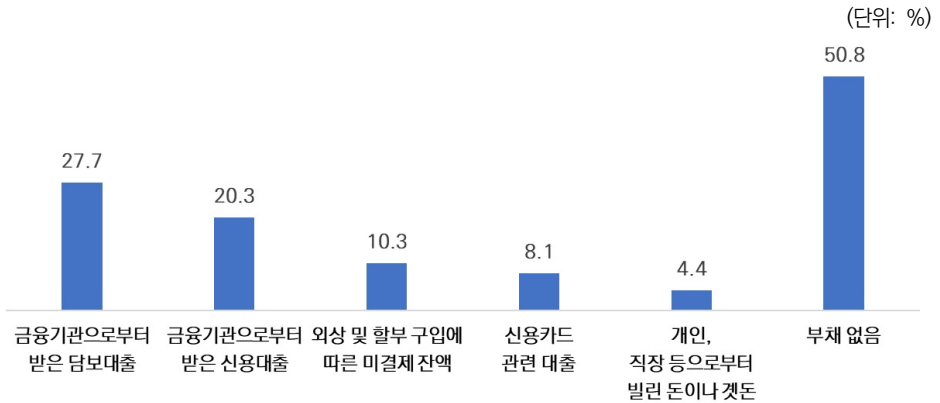
주: 비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비은퇴자인 응답자 1,714명을 대상으로 함

## 라. 부채

부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50.8%는 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9.2%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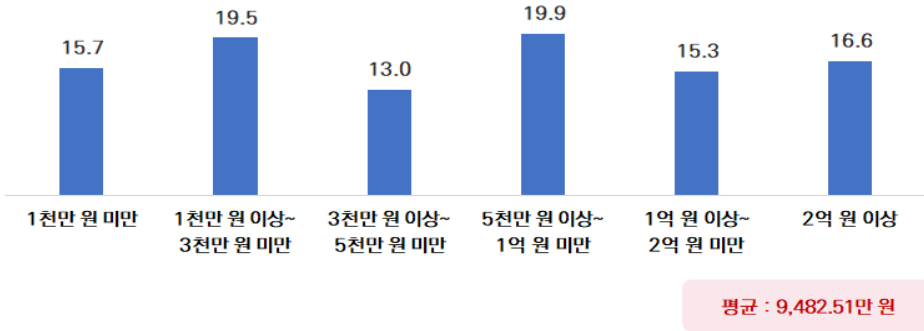
〈그림 Ⅲ-43〉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종류(중복응답)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총부채는 약 9,483만 원이었고, 〈그림 Ⅲ-43〉은 총부채 금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III-44〉 총부채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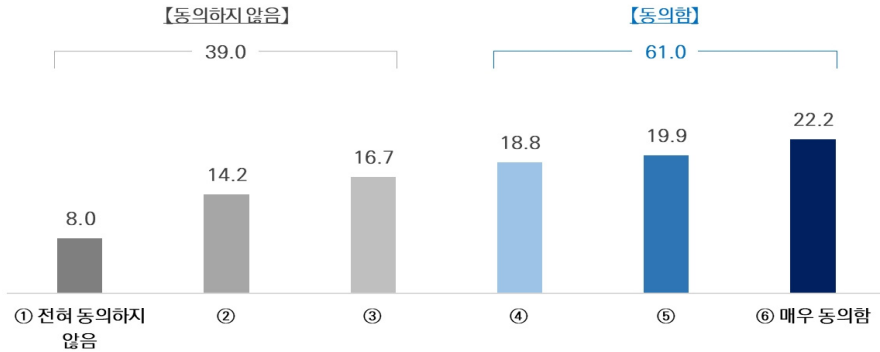


주: 부채가 있는 응답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함

현재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④~⑥), 동의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6점 기준 3.95점) 65.8점이었다.

〈그림 III-45〉 ‘나는 지금 부채(빚)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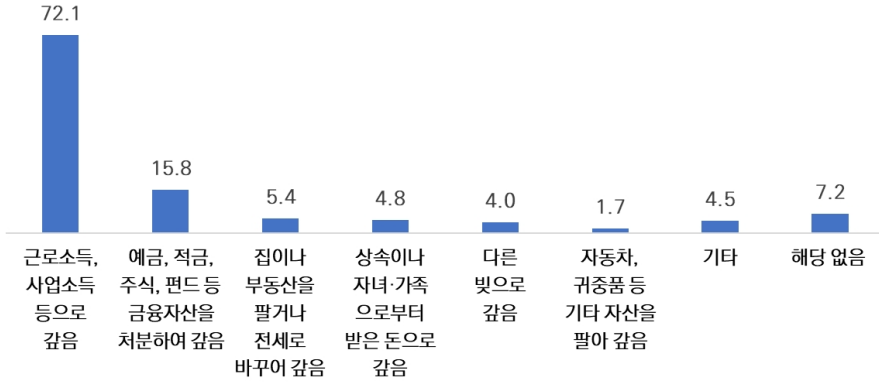
주: 1) 부채가 있는 응답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함

2) “나는 지금 부채(빚)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라는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6점 척도로 응답함

어떤 자금으로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갚고 있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갚는다는 응답이 15.8%,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는다는 응답이 5.4%, 상속이나 자녀,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갚는다는 응답이 4.8%, 다른 빚으로 갚는다는 응답이 4.0%였다.

〈그림 III-46〉 부채(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자금의 출처(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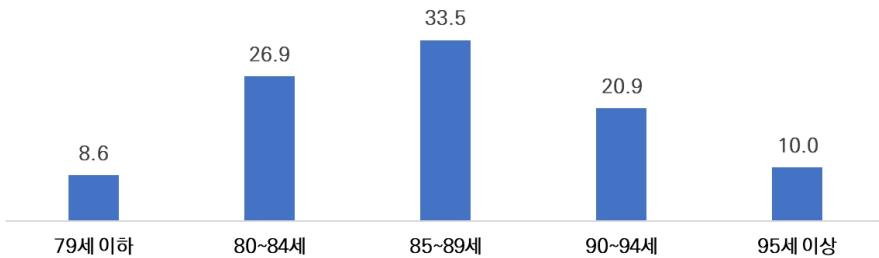
주: 부채가 있는 응답자 1,475명을 대상으로 함

## 7. 기대 여명 및 노인 돌봄 필요 예상 연령

자신이 몇 살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2023년 기준 성별 기대수명을 참고로 제공하였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85.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예상 생존 연령 분포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그림 III-47〉 예상 생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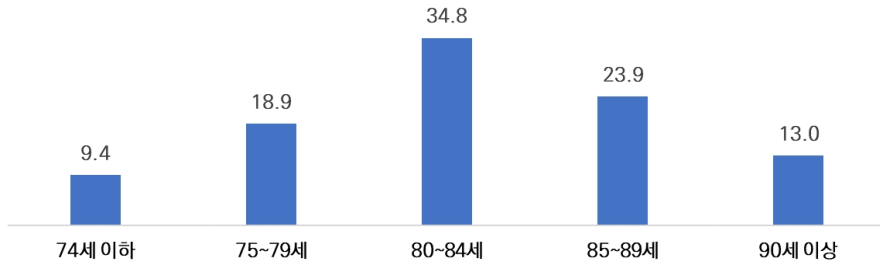
(단위: %)



다음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질 시기는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의한 결과,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81.2세가 되면 자신이 노인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돌봄 필요 예상 연령의 분포는 〈그림 III-48〉과 같았다.

〈그림 III-48〉 노인 돌봄 필요 예상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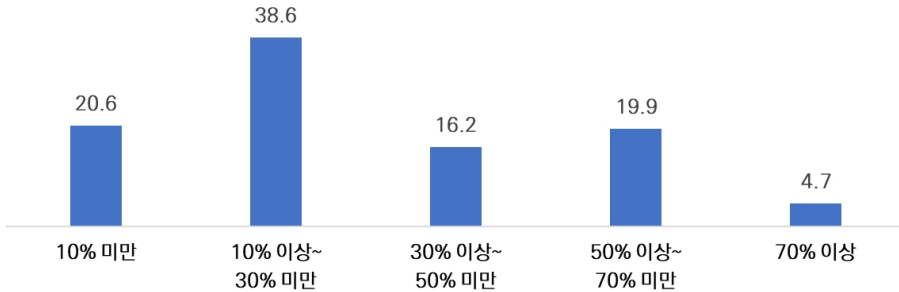
(단위: %)



한편, 응답자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9%라고 응답하였고, 38.6%의 응답자가 10% 이상 30% 미만의 확률로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 III-49〉 치매에 걸릴 가능성

(단위: %)



## 8. 소결

첫째, 금융이해력, 퇴직연금 이해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70세 이상,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이 낮은 집단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금융이해력 질문 중 물가상승률, 담보대출, 위험분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었고, 이자율, 채권가격과 이자율 간의 관계, 대출 관련 복리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여섯 문항 중 정답 수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60

점 이하인 집단을 살펴보면, 여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은퇴자 제외, 미취업자, 전업주부 등),<sup>19)</sup>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월 개인소득(세후)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총 자산이 1억 원 미만인 응답자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관련 이해도 문항 중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과세에 대한 이해도는 수령방법이나 퇴직소득 과세 이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65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최종학력을 가진 집단,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경우 100점 환산 점수가 70점 미만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와 관련해서는 노인간병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등급 결정 절차,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는 요양병원 입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문항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다. 일곱 문항의 정답 수를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이해력이 낮은 집단을 살펴보면, 70~79세의 경우 100점 환산 시 65.6점,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60.3점, 총자산이 1억 원 미만이 경우가 65.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70세 이상, 중학교 이하의 학력, 저소득·저자산 계층은 전반적 금융이해력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이해도 또한 낮아, 금융이해력과 함께 제도 이해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평소 돈 관리, 향후 노인 돌봄에 대한 대비 등을 조사하였는데, 노인 돌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33.3%,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3.7%를 차지하였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이상인 집단은 남성(16.9%), 55~59세(15.5%), 현직에 있는 경우(15.5%),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15.4%), 월평균소득이 400~500만 원 미만인 경우(18.3%), 총자산이 1억 원~3억 원 미만(16.5%) 집단이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가족 등 제3자가 응답자를 대신해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였다.

19) 은퇴 상태인지 질의하고, ① 은퇴함, ②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 ③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 ④ 해당하지 않음(미취업자, 전업주부 등)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함

한편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장례비용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로 응답자의 반 정도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0)</sup>

노인 돌봄 계획이나 장례비용, 부채상환,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 비율의 응답자가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계획 수립을 돕는 가이드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재무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아 관련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 방법을 돕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과거에 신탁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16%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중 62.7%가 신탁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60~64세,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중학교 이하 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월평균소득이 500~600만 원 미만이거나 8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이 1억 원~5억 원 미만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이상이었다. 아울러 신탁제도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 목적(55.7%)과 유언장 대응 및 상속분쟁 예방 목적(23.2%)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신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가 향후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나 상속분쟁 예방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경우, 총자산이 낮은 경우,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자문을 구하는 대상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배우자(43.9%),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19.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은퇴기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76.2%가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서비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 중에서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9%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이용해

20) 각 항목의 계획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 중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봤다는 응답률은 낮았으나, 이용 후 서비스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은 모두 70% 이상이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정보 제공이나 자문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소득, 고자산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유료 서비스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저소득이나 중·저자산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자문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만큼 신뢰할 수 있고 무료인 공적 재무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퇴직연금을 인출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에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공적연금 수령액,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순이었다. 인출한 퇴직연금의 1순위 사용처로는 일상 생활비 및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입금,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 부채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들을 하였는데, 개인연금 인출 시 연금으로 수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퇴직연금 인출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원하는 월별 소득 수준, 공적연금 수령액, 은퇴 후 여생에 필요한 총자금 순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하였다. 인출한 개인연금의 사용처 순위는 일상 생활비 및 지출을 위해 은행 계좌에 입금,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사용,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 계좌에 입금 순이었다.

여섯째, 응답자들은 자산, 부채, 저축 등 재무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6점 척도로 응답했는데,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44.8점이었다.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환산 시 40점보다 낮은 집단은 미취업자나 전업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 총자산이 3억 원 미만인 집단이었다.

한편 은퇴자 혹은 배우자가 은퇴한 가구에 속하는 응답자에게 생활비 충당 정도를 6점 척도로 질의한 결과, 32.5%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적으로 현재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라고 응답하였다.

은퇴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 즉, 혼인 중이면서 2인 가구인 경우 최소 생활비가 약 242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41만 원으로, 1인 가구인 경우 최소 생활비는 약 134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19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비은퇴가구가 예상한 노후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약 238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36만 원, 1인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는 약 161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232만 원이었다. 부부 기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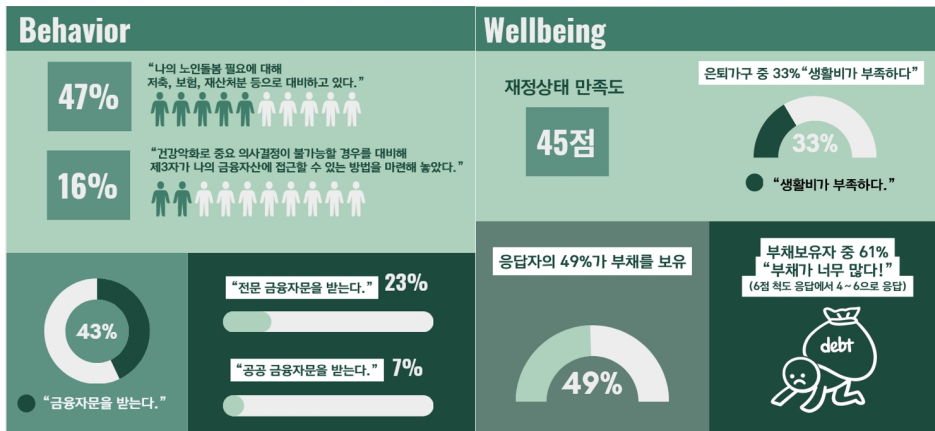
비는 최소, 적정 생활비 모두 비은퇴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실제 은퇴가구의 생활비가 더 많았으나, 1인 기준 생활비는 비은퇴자의 예상금액보다 실제 은퇴 1인가구의 생활비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2%였고, 평균 총부채 금액은 약 9,483만 원이었다.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61%가 현재 부채가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72.1%), 금융자산 처분(15.8%)을 통해 부채를 갚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추가적인 생활비 마련이나 비용 관리, 부채관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85.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노인 돌봄이 필요로 할 시기는 81.2세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평균 24.9%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50〉 설문조사 주요 결과



## IV

# 금융지식 수준에 따른 금융행동·후생과 취약 집단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수집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항목은 <부록 III>을 참고). 먼저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금융후생 간 관계를 살펴본 후,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을 결합하여 금융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금융후생 형성에 있어 지식과 행동의 역할을 파악하고, 기술적 메커니즘(Descriptive mechanism)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역량 취약 집단을 정의하고, 해당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and 긍정적 금융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금융지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사는 중고령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일반 금융이해력, 퇴직연금 이해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금융이해력 측정 시 대표적으로 Big3 질문, 즉 이자율 및 복리, 물가상승률, 분산 투자 관련 문항과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과 이자 간의 관계, 대출 맥락에서의 복리 개념 등 6개의 질문으로 측정한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의 득점률은 63.6%였다.

퇴직연금 이해력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보유 중인 응답자(780명)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퇴직연금의 인출 방식, 근로자의 역할, 세제 혜택 등 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균 득점률은 75%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서비스의 유형, 연령 요건, 본인 부담금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평균 4.8개를 맞춰 69.3%의 득점률을 보였다.

〈표 IV-1〉 영역별 평균 금융지식 점수

(단위: 점, %, 명)

구분	총점	평균 득점	표준편차	득점률	응답자 수
일반 금융이해력	6	3.8	1.3	63.6	3,000
퇴직연금 이해력	4	3.0	0.9	75.0	780
장기요양보험 이해력	7	4.8	1.4	69.3	3,000

## 2.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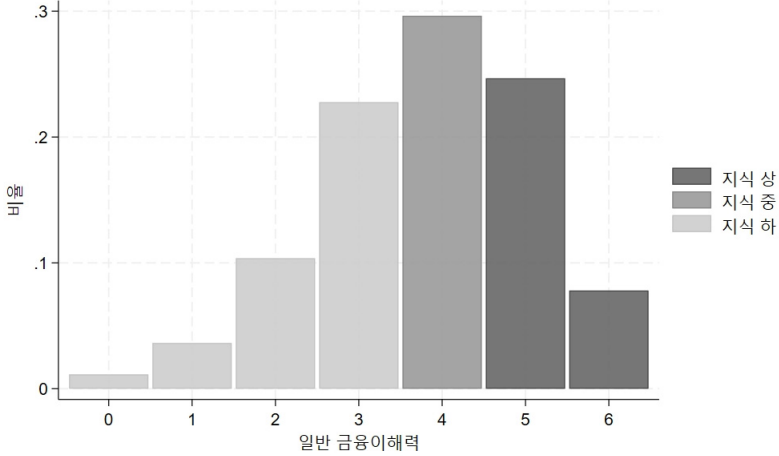
### 가. 변수 정의 및 집단 구분

#### 1) 금융지식 분포 및 집단 정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지식 수준을 3분위(상·중·하)로 나누어 정의하였고, 각 집단별 평균 행동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금융지식(이해력) 지표로서 일반 금융이해력을 사용하였다. 일반 금융이해력은 OECD/INFE 국제 기준에 가까운 지표로서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개념을 측정하여 대표성이 높다. 반면 퇴직연금 이해력은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이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은 특정 제도에 국한되어 있고, 연령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IV-1〉은 일반 금융이해력의 점수 분포를 제시하며, 지식수준의 3분위 구분 기준을 보여준다. 3분위는 분포상 각 집단의 크기가 최대한 균등하도록 정의하였다.

〈그림 IV-1〉 일반 금융이해력 분포 및 집단 정의

(단위: 점)



## 2) 금융행동 지표 정의 및 측정

응답자의 금융행동은 수입지출 관리 여부, 신용카드 대금 상환 행태, 연금 가입 개수, 노후 돌봄에 대한 계획 여부, 금융자문 활용 여부, 디지털 금융 이용 수준을 통해 평가하였다.

일상적 재무관리 행동을 보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단을 조사하였다.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 가계부나 노트, 은행거래 내역이나 계좌 잔액 검토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수입지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경우 수입지출 관리 더미변수가 1의 값을 갖도록 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신용카드 대금 상환 행태는 미상환 및 고금리 리볼빙이 부정적 금융행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 대금을 상환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정의하였다.<sup>21)</sup> 신용카드 미보유자(약 5%)는 미상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로 처리하였다.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는 연금가입과 노후 돌봄 계획을 살펴보았다. 먼저 은퇴기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통해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21) “귀하는 대체로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할부 이용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전액을 갚지만, 일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때도 있음’이나 ‘항상 전액을 갚음’이 이에 해당함

위해 연금 가입 개수를 지표로 사용하였다.<sup>22)</sup> 다음으로 노후 돌봄 계획은 신체·정신건강 악화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노인 돌봄 서비스, 간병 서비스, 요양시설, 치료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로 측정하였는데, 저축, 보험 가입, 재산 처분 계획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를 1로 정의하였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생각만 한 경우, 가족이나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등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금융상품의 복잡성, 정보의 비대칭성, 행동편의(Behavioral Biases) 경감, 자산배분 최적화 등의 측면에서 금융자문 활용은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금융자문을 활용 여부, 특히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정부나 공공기관 상담창구 등을 이용하여 자문을 구하는지 여부를 긍정적인 금융행동의 지표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수준을 금융행동에 포함하였는데, 온라인 뱅킹으로 계좌 잔액 조회, 온라인 뱅킹으로 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이용,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금융상품 구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용점수 조회,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내역이나 자산관리 등 6가지 서비스 중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수를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수준 지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해당 응답자가 6가지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0, 모두 사용한다면 6점이 된다.

## 나.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행동

### 1) 일반 금융이해력과 금융행동 지표

<표 IV-2>는 3분위 금융지식 집단을 기준으로 측정한 평균 금융행동 경향을 나타낸다.

전체 응답자의 금융행동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90%가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81%는 신용카드 대금을 전액 상환하여 미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재무 대비와 전문적 자

22)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②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등  
 ③ 개인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일반/변액) 등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세액공제 가능),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세액공제 불가))  
 ④ 주택연금

문 활용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확보를 위한 연금 상품 보유 개수는 평균 1.4개에 그쳤고, 구체적인 노후 돌봄 계획(저축, 관련 보험, 재산 처분 등)을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금융 의사결정 시 자문을 활용하는 비율은 43%였으나, 이 중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전문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하였다. 디지털 금융이용 점수는 평균 4.3 점이었다.

금융지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행동 지표는 지식의 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미 변수로 측정한 행동 지표 중 집단 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노후 돌봄 계획이었다. 금융지식 상 집단의 53%가 노후 돌봄 대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식 하 집단은 41%에 그쳐 12%p(29.3%)의 격차를 보였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의료비를 비롯한 간병, 돌봄 서비스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정부나 가족에 의존하여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비 공백은 지식 하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두드러진 영역은 신용카드 대금 전액 상환 여부와 전문 금융자문 활용 여부였다. 신용카드 대금 전액 상환 비율은 금융지식 상 집단이 86%, 하 집단이 78%로 8%p 차이를 보였다. 미상환 잔액에 부과되는 높은 이자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장기적으로 가계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 금융자문 활용에서도 지식 상 집단은 29%가 활용하는 반면, 지식 하 집단은 8%p(27.6%) 낮은 21%가 활용하는 격차가 나타났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재무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증고령기에 전문 자문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감독원 등 무료 공공 자문 서비스를 포함하더라도 전문 자문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71~79%에 달하였다. 한편, 지인이나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 금융자문 활용 여부 자체는 금융지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문에 대한 수요는 지식수준과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조언보다 전문 자문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속 변수로 측정한 가입 연금 개수와 디지털 금융 이용 점수 또한 금융지식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2〉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행동

구분	전체	금융지식 하	금융지식 중	금융지식 상	p-value
수입지출 관리 여부	0.90	0.87	0.91	0.92	0.00***
신용카드 대금 전액 납부 여부	0.81	0.78	0.79	0.86	0.00***
가입 연금 개수(0~4)	1.43	1.28	1.42	1.62	0.00***
노후 돌봄 계획 여부	0.47	0.41	0.47	0.53	0.00***
금융자문 활용 여부	0.43	0.42	0.45	0.43	0.53
전문 금융자문 활용 여부	0.25	0.21	0.25	0.29	0.00***
디지털 금융이용(0~6)	4.31	3.96	4.40	4.63	0.00***
응답자 수	3,000	1,137	889	974	-

주: 1) 가입 연금 개수와 디지털 금융이용을 제외하고는 더미변수임

2) p-value는 각 금융행동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금융지식 수준 더미변수(기준: '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중' 및 '상' 더미의 결합 유의성을 검정한 F-test의 유의확률임. 이는 분산분석(ANOVA)의 F검정과 수학적으로 동일함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4) 사후 검정은 〈부록 표 IV-1〉에 수록

## 2) 퇴직연금 이해력과 연금가입 행동

중고령자는 경제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노후 생활을 보내는 시기에 있다. 이러한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력 수준이 은퇴 후 소득 확보 수단 중 하나인 연금가입 행동과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표 IV-3〉은 퇴직연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연금 이해력이 높을수록 연금 상품 가입 개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단순히 지식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은퇴 대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퇴직연금의 수령방식, 세제 혜택, 운용 전략 등을 명확히 인지하는 개인일수록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 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 퇴직연금 이해력 점수별 금융행동

(단위: 개)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전체
가입 연금 개수(0~4)	2.33	1.86	2.27	2.40	2.47	2.37
응답자 수	6	43	158	312	261	780

###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과 노후 돌봄 대비 계획 수립

생애주기 상 고령으로 진입할수록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 개입 및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력 수준이 노후 돌봄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IV-4〉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력이 높을수록 노후 돌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노후 돌봄 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개인일수록 공적 제도 서비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인 차원의 저축, 민간보험 가입, 재산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대비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4〉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 점수별 금융행동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체
노후 돌봄 계획 여부	0.11	0.32	0.39	0.36	0.43	0.49	0.49	0.57	0.43
응답자 수	18	28	109	309	632	858	766	280	3,000

## 3. 금융지식과 금융후생

### 가. 금융후생 지표 정의 및 측정

금융후생 지표는 재무 상태 만족, 경제적 안정, 부채 부담 등 세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6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⑥ 매우 그러함)로 응답 되었으며, ⑤ 또는 ⑥을 선택한 경우를 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재무 상태 만족도 질문에 ⑤나 ⑥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재무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상황을 묘사

하는 각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에 ⑤나 ⑥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묘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⑤나 ⑥으로 답변한 경우를 지나친 부채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무 상태 만족은 “본인의 개인 재무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안정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처리 가능 여부, 경제적 미래에 대한 안정감, 월말 여유자금 유무 등 긍정 문항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제약, 저축 부족에 대한 걱정 등 부정 문항들을 포함한다. 긍정 문항에 동의한 경우 +1점, 부정 문항에 동의한 경우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모든 긍정 문항에 동의하고, 부정 문항에 비동의할 경우 최대 8점을 얻게 되며, 반대의 경우 0점을 얻게 된다. 부채 부담은 “나는 지금 부채(빚)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후생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후생

〈표 IV-5〉는 3분위 금융지식 집단을 기준으로 측정한 평균 금융후생 지표를 나타낸다.

전체 응답자의 금융후생 수준을 살펴보면, 현 재무 상태에 만족하는 응답자(6점 척도 중 5 또는 6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7%에 불과하였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8개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4.6점(8점 만점)으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1%였다.

금융지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후생 지표 역시 지식의 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인의 재무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금융지식 상 집단(21%) 이 하 집단(14%)에 비해 7%p 높았으며, 경제적 안정성 점수 또한 상 집단이 하 집단 대비 0.4점 높았다.

다만, 부채로 인한 재무적 고통을 겪는 비율은 금융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부채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자산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로 의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금융지식과 독립적인 다양한 요인과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고령층의 금융후생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이해력 강화와 더불어, 과중 채무자를 위한 상담 및 채무 상환 계획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 IV-5〉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후생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금융지식 하	금융지식 중	금융지식 상	p-value
재무 상태에 만족함	0.17	0.14	0.16	0.21	0.02**
경제적으로 안정됨(0~8)	4.56	4.40	4.48	4.80	0.00***
부채가 너무 부담됨	0.21	0.21	0.19	0.22	0.33
응답자 수	3,000	999	985	1,016	-

주: 1) 경제적으로 안정됨(0~8) 제외하고는 더미변수임

2) p-value는 각 금융행동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금융지식 수준 더미변수(기준: '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 분석에서 '중' 및 '상' 더미변수의 결합 유의성을 검정한 F-test 유의확률임. 이는 분산분석(ANOVA)의 F검정과 수학적으로 동일함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4) 사후 검정은 〈부록 표 IV-2〉에 수록

## 4.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의 결합 효과

3절에서 금융지식 수준과 금융행동 및 금융후생 간에 각각 정(+)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 금융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식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금융행동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융행동 자체가 지식과 무관하게 금융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을 결합하여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지식-행동-후생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Descriptive mechanism)을 확인하고자 한다.

### 가. 변수 정의 및 집단 구분

#### 1) 금융행동지수 분포 및 집단 정의

지식-행동 조합별 후생을 비교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한 지식 및 행동 지표의 구성을 설명한다. 금융지식은 3절에서 사용한 일반 금융이해력 기준 3분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금융행동은 〈표 IV-2〉에 제시된 6개 지표<sup>23)</sup>를 합산하여 단일 지표를 구성한 뒤, 이를 3분위(상·중·하)로 구분하였다. 더미변수가 아닌 연금 가입 개수와 디지털 금융 이용 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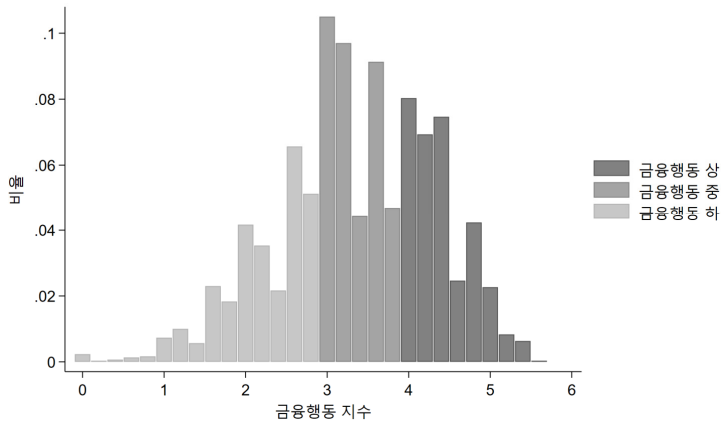
23) 금융자문 행동에 대해서는 전문 금융자문을 구하는지 여부만 반영하였음

각 지표의 최댓값, 즉 연금 가입 개수는 최대 연금 가입 개수인 4, 디지털 금융 이용 점수는 최고 점수인 6으로 나누어 [0, 1] 범위로 정규화한 후 합산에 포함하였다.

〈그림 IV-2〉는 금융행동지수 분포를 제시하며, 지수의 3분위 구분 기준을 보여준다. 3분위는 분포상 각 집단의 크기가 최대한 균등하도록 정의하였다.

〈그림 IV-2〉 금융행동지수 분포 및 집단 정의

(단위: 비율)



## 2) 금융후생 점수 정의

후생을 비교하기 위해 〈표 IV-5〉에 제시된 후생지표들을 더함으로써 단일 후생 점수를 산출하였다. 합산 시, 재무상태 설명 정도 문항 중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고, ‘부채가 너무 부담된다.’는 문항에 5, 6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다(부록 표 III-2 참조).

### 나. 금융지식-금융행동 조합별 금융후생

앞서 정의한 지식, 행동, 후생 지표를 바탕으로 〈그림 IV-3〉 히트맵(Heatmap)을 작성하였다. 금융지식수준과 금융행동지수가 높아질수록 평균 후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응답 비율로 부정적 금융후생을 나타낸 〈그림 IV-4〉에서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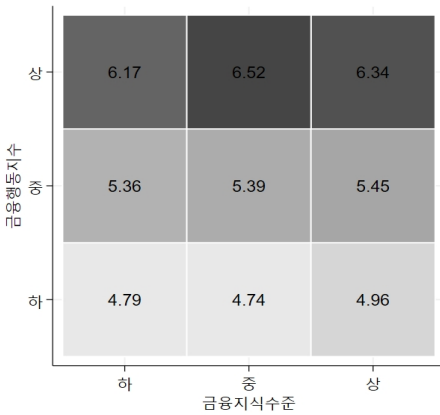
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금융지식수준과 행동지수가 낮을수록 부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금융지식과 행동지수가 각각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요소 중 어느 쪽이 후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금융지식수준보다 금융행동지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림 IV-3>에서 금융지식을 '하'로 고정하고 행동지수만 변화시키면 평균 후생 점수가 4.79에서 6.17로 약 1.38점(28.8%) 상승한다. 반면, 금융행동을 '하'로 고정하고 지식수준만 변화시키면 4.79에서 4.96으로 0.17점(3.5%) 상승에 그친다. <그림 IV-4>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며, 이는 금융지식보다 금융행동이 후생과 보다 직접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3>

금융지식-행동별 금융후생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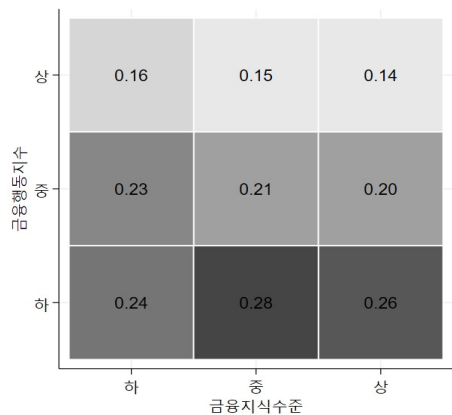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IV-4>

금융지식-행동별 '부채가 너무 많다.' 응답

(단위: 비율)



주: 금융후생 점수 범위는 0~10점임

<그림 IV-3>과 <그림 IV-4>에서 관찰된 각 셀(cell) 내 수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토하기 위해 <그림 IV-5>와 <그림 IV-6>으로 재구성하였다. 금융행동지수를 가로축으로, 금융지식수준별 평균 후생 수준을 막대로 표현하였으며, 각 막대에 95% 신뢰구간을 추가하였다.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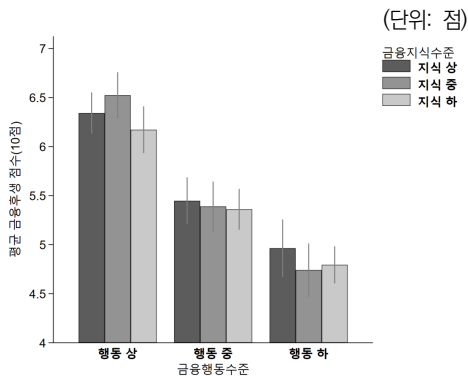
<그림 IV-5>에서 금융행동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금융지식수준에 따른 후생 점수를 비교하면, 신뢰구간이 중첩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금융행동지수에 따른 후생 차이는 신뢰구간이 중첩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예를 들어 행동 '상' 집

단 내에서 지식 '상', '중', '하' 막대의 95% 신뢰구간은 서로 겹쳐있어, 행동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후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반면, 행동 집단 간 비에서는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아 행동 수준에 따른 유의한 후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6>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측되는데, 행동지수 '상'과 '하' 집단 간 차이는 신뢰구간이 거의 중첩되지 않아 유의한 후생 차이가 관측되는 반면, 동일 행동지수 내 지식수준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식수준의 상승만으로는 후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 단의 히트맵 분석을 재해석하게 한다. <그림 IV-3>과 <그림 IV-4>에서는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이 각각 후생과 연관된 것처럼 보였으나, 행동을 통제하면 지식의 독립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다. 즉, 금융후생 변화의 주된 요인은 금융행동이다. 본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금융지식 수준과 긍정적인 금융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표 IV-2>)을 고려하면, 금융지식은 그 자체로 후생에 직접 기여하기보다 금융행동을 매개로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금융지식에서 행동을 거쳐 후생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Descriptive mechanism)을 제시하며, 금융행동의 매개 효과를 실증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Fan and Henager 2022; Sajid et al.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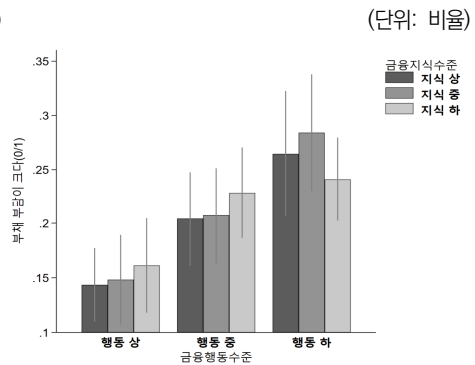
<그림 IV-5>

금융지식-행동별 금융후생 점수



<그림 IV-6>

금융지식-행동별 '부채가 너무 많다.' 응답



## 5. 금융역량 취약 집단의 특성과 장벽

본 절에서는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금융역량의 취약 집단을 정의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긍정적인 금융행동 실천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장벽을 분석한다.

### 가. 취약 집단 정의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4절에서는 금융후생이 금융행동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금융지식은 행동을 매개로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지식 자체가 후생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더라도 바람직한 금융행동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행동이 낮은 상태에서 금융지식마저 낮다면, 높은 확률로 후생 수준도 낮고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역량도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역량 취약 집단을 금융지식수준과 행동지수가 모두 ‘하’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

#### 취약소비자에 대한 정의

OECD의 정의

- 특정 상품의 시장 특성, 상품의 속성, 거래의 성격이나 소비자의 특성 또는 상황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서 피해를 입기 쉬운 소비자라고 정의함(OECD Recommendation on Consumer Policy Decision Making)
- 소비자의 취약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개인의 특성, 경제적 상황, 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취약성을 연구하고 다양한 정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와 같은 정의들은 다음 측면 중 하나 이상의 요인을 담고 있음(OECD 2025)

- 개인적 특성: 연령, 장애,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 개인적 상황: 가족구조의 변화, 사별, 이혼, 실직
- 시장 특성: 경쟁 부족, 복잡한 시장 및 가격 구조, 소비자·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 정보비대칭
- 외부 환경: 자원 배분, 불평등, 차별, 의료서비스, 소매서비스, 교육 또는 지불 가능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부족

아울러 소비자 취약성 정의는 크게 개인적 특성에 바탕을 둔 계층 중심(Class-based) 접근과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외부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바탕을 둔 상황 중심(State-based)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함

영국 금융영업행위 감독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정의(FCA 2025)

-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금융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개인적 환경으로 인해 피해에 취약한 소비자로 정의하고, 「취약 고객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한 금융회사 지침」을
-

제공하고 있음

- 모든 소비자는 특정 상황에서 취약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 삶의 사건, 회복력, 역량 등 4가지 측면의 취약성 중 하나 이상을 보일 경우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고 봄
- 구체적으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 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 사별이나 실직 등 부정적인 사건을 겪는 경우, 재무적 또는 정서적 충격을 견딜 능력이 낮은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돈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낮거나, 디지털 역량 등이 낮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식, 금융행동, 후생의 맥락에서 정의한 집단들을 바탕으로 금융후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지식수준과 행동지수가 모두 '하'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 집단'으로 정의함

전체 응답자 3,000명 중 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473명(15.8%)이었다. <표 IV-6>은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남성(여성)의 비율이 낮(높)고, 현재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또한 높았다.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55~59세 비율이 취약 집단에서 약 4%p(14.3%) 낮은 반면, 70세 이상 비율은 5%p(23.8%)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 측면에서도 취약 집단의 저학력 비율이 뚜렷이 높았다. 중졸 이하 비율은 약 8%로 비취약 집단(2%) 대비 약 4배가량 높았고, 고졸 이하 비율(42%) 역시 비취약 집단(27%) 대비 15%p(55.6%) 높았다. 반면,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비율은 유의하게 낮았다. 월평균 소득(세후) 측면에서도 저소득 구간에서 취약 집단 비율이 유의하게 높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그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종합하면, 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고령층, 저학력, 저소득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금융역량 측면에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V-6> 취약 집단 및 비취약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구분	비취약 집단	취약 집단	전체	p-value
남성	0.50	0.43	0.49	0.005***
경제활동 하지 않음	0.49	0.56	0.50	0.004***
연령 55~59세	0.28	0.24	0.28	0.046**
연령 60~64세	0.27	0.25	0.27	0.248
연령 65~69세	0.24	0.25	0.24	0.591
연령 70세 이상	0.21	0.26	0.22	0.010***

〈표 IV-6〉 계속

구분	비취약 집단	취약 집단	전체	p-value
최종학력 중졸 이하	0.02	0.08	0.03	0.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0.27	0.42	0.29	0.000***
최종학력 대졸 이하	0.57	0.42	0.55	0.000***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0.14	0.08	0.13	0.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세후)	0.03	0.09	0.04	0.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세후)	0.11	0.21	0.12	0.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세후)	0.15	0.17	0.15	0.17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세후)	0.15	0.18	0.15	0.077*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세후)	0.15	0.13	0.14	0.440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세후)	0.12	0.07	0.11	0.000***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세후)	0.09	0.06	0.08	0.041**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세후)	0.07	0.03	0.06	0.000***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세후)	0.15	0.05	0.13	0.000***
응답자 수	2,527	473	3,000	-

주: 1) 모든 변수는 더미변수임

2) p-value는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취약 집단 더미변수(기준: 비취약 집단)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취약 집단 더미의 유의성을 검정한 F-test의 유의확률임. 이는 분산분석(ANOVA)의 F검정과 수학적으로 동일함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나. 취약 집단의 금융행동 장벽

취약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개입의 방향을 논하기 어렵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금융행동이 금융후생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

다면, 이들이 왜 적절한 금융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즉 금융역량 취약 집단의 긍정적 금융행동 이행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장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융행동은 금융지식과도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단순히 지식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에 대한 숙련도, 그리고 행동 변화에 대한 동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 집단이 직면하는 장벽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 1) 정보 접근성 장벽

첫째, 금융자문 이용 행태를 통해 정보 접근성 장벽을 알아보았다. 올바른 금융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재무 의사결정에 있어 본인의 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적 조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표 IV-7>에서는 금융자문 이용 행태를 통해 취약 집단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취약 집단과 비교하였다.

취약 집단의 경우 금융자문을 구하지 않는 비율이 64.3%로 비취약 집단의 평균(55.6%)보다 약 8.7%p 높은 수준이다. 금융자문을 구하더라도 취약 집단이 전문 자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11.2%인 반면, 비취약 집단은 27.5%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표 IV-7> 금융자문을 구하는 행동 비교: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단위: 명, %)

구분	금융자문을 구하지 않음	비공식 자문을 구함	전문 자문을 구함	전체
비취약 집단	1,404 (55.6)	428 (44.4)	695 (27.5)	2,527 (100)
취약 집단	304 (64.3)	169 (35.7)	53 (11.2)	473 (100)
응답자 수	1,708 (56.9)	1,292 (43.1)	748 (24.9)	3,000 (100)

주: 1) 괄호 안 숫자는 집단 내 각 금융자문 행동의 비율(%)임

2) 카이제곱 검정  $\chi^2(2)=60.43$ . P-value=0.000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복수 응답(최대 3개)하도록 하였다. 이 중 '신뢰할 만한 조언자를 찾지 못함',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름', '잘 모르겠음' 중 하나라도 선택한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IV-8〉은 이 정의에 따라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사이의 정보 접근성 장벽을 마주하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취약 집단의 경우 약 70.4%가 정보 접근성 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약 집단은 약 61%로 9%p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즉, 취약 집단은 금융자문을 덜 이용할 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자체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문 경로에 대한 홍보와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8〉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정보 접근성 장벽

(단위: 명, %)

구분	접근성 외 다른 이유	접근성	전체
비취약 집단	551 (39.2)	853 (60.8)	1,404 (100)
취약 집단	90 (29.6)	214 (70.4)	304 (100)
응답자 수	641 (37.5)	1,067 (62.5)	1,708 (100)

주: 1) 괄호 안 숫자는 집단 내 각 금융자문 행동의 비율(%)임  
2) 카이제곱 검정  $\chi^2(2)=9.90$ , P-value=0.002

## 2) 디지털 격차 장벽

둘째, 디지털 금융 이용 행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채널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은 금융행동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숙련도의 차이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표 IV-9〉는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취약 집단이 디지털 금융 이용 환경에서 구조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점수는 2절에서 정의한 디지털 금융행동 지표를 따른다. 분석 결과,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최고점(6점)을 기록한 응답자 비율은 취약 집단이 11.6%에 불과한 반면 비취약 집단은 39.8%에 달하며, 약 3.4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반대로 최하점(0점)에 해당하는 응답자 비율은 취약 집단이 15%였고, 비취약 집단이 2.6%로, 취약 집단에서 약 5.8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수준과 숙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표 IV-9〉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점수 비교: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단위: 명,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전체
비취약 집단	66 (2.6)	44 (1.74)	187 (7.4)	312 (12.4)	441 (17.5)	477 (18.9)	1,000 (39.8)	2,527 (100)
취약 집단	71 (15.0)	29 (6.1)	76 (16.1)	106 (22.4)	93 (19.7)	43 (9.1)	55 (11.6)	473 (100)
응답자 수	137 (4.6)	73 (2.4)	263 (8.8)	418 (13.9)	534 (17.8)	520 (17.3)	1,055 (35.2)	3,000 (100)

주: 1) 괄호 안 숫자는 각 집단 내 점수별 응답자 비율(%)임

2) 카이제곱 검정  $\chi^2(6)=340.36$ ,  $P\text{-value}=0.000$

### 3) 역량 과신 장벽

셋째, 금융지식(혹은 역량)에 대한 소비자의 과신(Overconfidence)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역량에 대한 과신은 내적·인지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금융역량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우 추가적인 학습이나 행동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 동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신 여부는 주관적 자기평가와 객관적 금융지식 점수의 분포상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여 구분하였다. 주관적 자기평가는 금융 의사결정 및 서비스 관련 9개 문항<sup>24)</sup>에 대해 1~6점(전혀 모름~매우 잘 알고 있음)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서 ⑤ 또는 ⑥점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항목을 잘 알고 있다고 간주하여 문항을 합산하였다. 이

24) 주거비용 관리, 노인 돌봄비용 관리, 기초연금 신청, 은행 계좌 잔액 확인, 가격 비교 웹사이트 사용, 보험 유형 비교, 저축 상품 비교, 복지혜택, 정확한 세금 납부 확인 등

를 객관적 금융지식 점수(일반 금융지식 점수)와 함께 활용하여, 주관적 자기평가 점수가 해당 분포의 중간값 이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금융지식 점수가 해당 분포의 중간값 이하인 경우를 역량 과신으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22).

〈표 IV-10〉은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내 금융역량 과신 비율을 나타낸다. 취약 집단에서 과신으로 분류된 응답자 비율은 약 27.1%로 비취약 집단 내 비율(13%)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취약 집단은 금융지식과 행동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본인의 실제 역량보다 주관적 인식이 높은 과신 경향까지 더해져, 학습이나 행동 변화를 통해 금융후생을 개선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Kruger and Dunning(1999)이 제시한 Dunning-Kruger 효과, 즉 역량이 낮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 및 행동 변화의 동기를 갖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여, 행동 변화에 대한 동기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

〈표 IV-10〉 금융역량 과신 여부 응답자 비율: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

(단위: 명, %)

구분	과신하지 않음	과신함	전체
비취약 집단	2,200 (87.1)	327 (13.9)	2,527 (100)
취약 집단	345 (72.9)	128 (27.1)	473 (100)
응답자 수	2,545 (84.8)	455 (15.2)	3,000 (100)

주: 1) 괄호 안 숫자는 각 집단 내 과신 여부에 따른 응답자 비율(%)임

2) 카이제곱 검정  $\chi^2(1)=61.75$ , P-value=0.000

## 1. 금융역량 강화 수단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규제, 금융교육, 상품 설계나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금융정책당국은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상품공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다른 상품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교육, 즉 인식제고, 정보, 지침(Instruction), 객관적인 조언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재무선택과 금융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지식, 기술, 태도, 행동)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sup>25)</sup> 금융교육이 금융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Kaiser et al.(2022)은 전통적인 금융교육을 크게 사내 복지 설명회 등을 활용한 직장 내 금융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 개인화된 일대일 금융코칭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비전통적인 금융교육 사례로서 아프리카 등지에서 마을 현장지도원(Extension Agents)이 2주나 3주 간격으로 일대일 또는 그룹회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정보, 금융교육과 동기부여 내용으로 구성된 참여형 이주 노동자 대상 워크숍, 재무 관련 이슈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용한 정보 제공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편향이나 심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 설계나 선택 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후생을 높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퇴직연금(401(k)) 자동가입 제도나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25) OECD의 「금융교육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원칙과 모범관행에 관한 이사회 권고」는 금융교육을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개념 및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정보, 지침(Instruction),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 위험과 혜택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 나아가 자신의 금융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동 권고는 2005년에 채택되었고, 2020년에 폐지됨

OECD(2008)는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재무성과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정한 은퇴소득확보라는 맥락에서 <그림 V-1>과 같이 제시하였다. 금융교육은 은퇴계획, 저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제고,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관련 정보나 지침 제공,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은퇴소득확보를 도울 수 있는데,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목표 대상 집단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내용과 전달방식을 채택할 때, 해당 소비자들의 행동과학적 특성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림 V-1> 금융역량 강화 수단: 적절한 은퇴소득 보장

규제(Regulation)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	기타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보호</li> <li>• 정보 제공(상품공시 등)</li> <li>• 투자자금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 제고</li> <li>• 정보 제공</li> <li>• 지침 제공(Instruction)</li> <li>• 조언(Advi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가입 (Automatic Enrolment)</li> </ul>

주: OECD(2008) Figure 2.1.을 수정

## 2. 실험설계 배경 및 개요

### 가. 실험설계 배경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약 32.5%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약 49.2%가 부채가 있고, 이 중 61%가 빚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은퇴 가구 또는 은퇴 직전 가구에 있어서 예산관리나 은퇴소득확보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낮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저소득·저자산·고령층의 재무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퇴직연금을 수령한(연금, 전액 또는 일부 일시금)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약 60.2%가,<sup>26)</sup> 개인연금을 수령한(연금, 전액 또는 일부 일시금) 적이 있는 응답자들 중 약 98.6%

26) 1차 조사 응답자 중 780명(응답자의 26%)이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었고, 이 중 345명이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었고, 218명은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가 전액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했다고 응답했다.<sup>27)</sup> 인출금은 대체로 통장에 예치하고 생활비나 비상금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출 행태는 중고령자의 재무관리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을 생활비·목돈·투자 목적 등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가, 언제까지 쓸 수 있도록 배분할 것인가 등 복잡한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언을 받는 중고령자는 소수(12.2%)<sup>28)</sup>에 불과하였다.

1차 조사는 중고령자 간 금융이해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또한 확인하였다. 일반 금융 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63.6%였고, 저학력, 저소득, 고령층일수록 금융이해력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을 금융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 금융이해력이 낮은 이 취약계층은 금융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율 역시 낮았다. 정작 정보와 조언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이를 소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재무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경우, 조언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66.7~88.8%의 만족도를 보였다.<sup>29)</sup> 전문적인 금융 조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민간 경로로, 세무사, 회계사, 금융회사 직원 및 금융전문가 등 유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다. 둘째는 공공 경로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재무상담 서비스이다. 특히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는 인지도는 낮았으나(전체 응답자의 약 24%만이 서비스를 인지함),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7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가 이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료의 공신력 있는 공공서비스는 유료 자문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도 접근 가능하며, 높은 만족도와 이해도 향상 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적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7) 응답자 중 1,223명(40.8%)이 과거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었고, 이 중 630명이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었고, 이 중 621명이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을 수령했다고 응답함

28) 1차 조사에서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활용한다는 응답자(43.1%) 중 가족·친지·친구가 아닌 금융기관·세무사·회계사·변호사·공공서비스 등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28.2%)을 결합하여 도출함

29) 6점 척도로 응답한 만족도 중 ④~⑥점으로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분류함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접근성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공공 재무 서비스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하였다. 중고령자의 75% 이상은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지 못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지도와 접근성 향상은 중요한 과제다. 둘째는 정보의 전달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개인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가 제공되는 것과 실제로 이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복잡한 금융 개념을 포함한 재무진단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중고령자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은 이 중 두 번째 과제인 정보 전달 형식에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금융정보를 중고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정책 현장에서 카드뉴스처럼 시각적 요약 형식과 텍스트 형식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학습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연구는 시각적 요소가 정보 전달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한다. Mayer and Moreno(2003)는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결합할 경우 인지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unlap and Lowenthal(2016)은 텍스트만 제시하는 방식보다, 단순화된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시각적 요소(인포그래픽)가 학습자의 이해 및 정보 처리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연속적인 흐름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정보를 분절시켜 제시할 때 학습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Mayer 2009).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보 전달 시 카드뉴스 형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드뉴스' 섹션을 운영하며,<sup>30)</sup> 금융위원회 역시 정책 홍보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한다.<sup>31)</sup>

한편, 인포그래픽과 같은 시각적 요약 형식이 항상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도 있다. Buljan et al.(2018)은 실험의 참가자들이 인포그래픽을 더 선호하고 읽기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지식 테스트 점수에서는 인포그래픽과 서술형 텍스트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Sung and Mayer(2012) 또한 시각적 요소가 포함된 자료를 받은 학생들이 시각적 요소가 없는 집단 대비 만족도가 높았으나, 기억 수행에서 유의미한 향상은 학습을 돕는(Instructional) 시각적 요소가 포함된 조건에서만 관찰

3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홍보센터-카드뉴스

3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자료-카드뉴스

되었다. 이는 시각적 요소가 자료 읽기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해·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설계가 중고령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Fenesi et al.(2015)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은 이미지와 내레이션이 결합된 조건에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인 반면, 중고령자는 텍스트와 내레이션이 결합된 조건에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연령별 차이가 중고령자의 작업 기억 용량 감소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단편적인 이미지보다는 텍스트처럼 맥락 단서를 제공하는 매체가 이해를 보조해 인지와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시각적 요소가 가미된 형식이 반드시 학습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중고령자에게는 효과적인 정보 제시 방식이 일반 성인들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설계하였다. 금융감독원 무료 재무진단이 제공하는 재무관리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를 원용하여, 은퇴 후 소득확보 방법과 연금계좌 활용에 대한 정보를 담아 간단한 참고자료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자료는 텍스트형(금융감독원 자료 원용)과 카드뉴스형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험 참여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어떤 방법이 소비자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해당 주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나. 실험 개요

〈표 V-1〉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55~64세 성인 남녀
표본 크기	총 2,400명(유효표본)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1%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9일~ 12월 10일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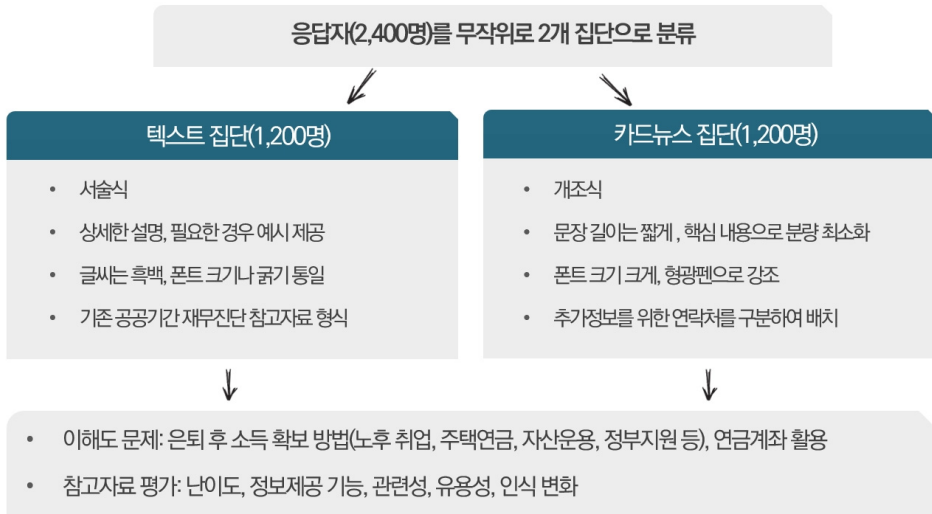
55세~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와 달리, 소비자실험의 대상은 55세~64세로 한정하였다. 이는 소비자실험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은퇴소득확보(노후취업, 주택연금, 자산운용, 정부 지원), 연금계좌를 활용한 투자 및 절세, 노후 준비 등과 같이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초기 단계의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내용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패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력 및 소득 수준 등의 잠재적 표본 편이가 65세 이상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실험 대상자, 2,400명을 거주 지역, 성, 연령을 바탕으로 각각 1,200명씩 두 개의 집단으로 임의 할당한 후, '은퇴 후 소득확보 방법'과 '연금계좌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되, 각각 다른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카드뉴스 집단(이후, 텍스트 집단)에게는 서술식으로 작성된 텍스트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공한 반면, 실험집단(이후, 카드뉴스 집단)에게는 카드뉴스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서술식 문장으로 작성된 참고자료는 현재 금융감독원 간편재무진단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 PDF 문서를 바탕으로 제도나 상품을 최신화하여 구성하였고, 카드뉴스 형식의 참고자료는 카드 각 장이 전달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만 구성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폰트 크기는 크게, 문장의 길이는 짧게 하고, 핵심정보만을 제공하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나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 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자가 참고자료를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후, 일정 시간 후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누르는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텍스트 집단과 카드뉴스 집단 모두 처음 도입 부분은 해당 화면에 최소 3초 동안은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 이후 내용은 참고 자료의 분량이나 문장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 집단의 경우는 각 항목(노후 취업, 주택연금, 자산운용, 정부지원) 나머지 항목들은 15초 후에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적어도 일정 시간만큼은 해당 화면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고, 카드뉴스 집단의 경우는 각 항목당 13초 후에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를 제공한 후에 참고자료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후 취업, 주택연금, 자산운용, 정부지원 등에 대한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고, 응답자가 해당 정보들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공받은 참고자료가 읽기 쉬웠는지,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자신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참고자료를 읽은 후 은퇴 후 소득확보와 자산 관리 계획을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재무진단 서비스나 자문을 받을 의향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6점 척도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V-2〉 온라인 실험 개요



### 3. 조사 결과

#### 가. 임의 할당

〈표 V-2〉는 임의 할당된 텍스트 집단과 카드뉴스 집단의 특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개인소득, 자산, 금융자산 비율,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 은퇴자 비율, 기혼 비율, 가족 수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소득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카드뉴스 집단이 텍스트 집단보다 높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텍스트 집단이 카드뉴스 집단보다 높았다.<sup>32)</sup> 아울러 텍스트 집단 중 모바일 매체를 이용해 설문에 응답한 비율이 카드뉴스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일반 금융이해력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 -test  $p$ -value 0.64). 이는 두 집단의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금융이해도가 더 높은 응답자들이 특정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

32) Chi-square test 결과, 개인소득의 경우  $\chi^2(2)=0.2195$  ( $P$ -value=0.896), 가구소득의 경우  $\chi^2(2)=6.5840$  ( $P$ -value=0.037)이었음

서 이후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기존의 금융이해력 차이보다는 정보 전달 방식의 영향으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표 V-2〉 비교 기준 특성 및 임의 할당 검증

구분		전체	(1)	(2)	(2)-(1)
			텍스트형	카드뉴스형	Pairwise T-test(P값)
(세후)월평균 개인소득	저	0.47	0.47	0.46	0.78
	중	0.40	0.39	0.40	0.65
	고	0.14	0.14	0.14	0.81
(세후)월평균 가구소득	저	0.21	0.21	0.21	0.92
	중	0.45	0.43	0.47	0.03**
	고	0.34	0.36	0.31	0.02**
자산(천만 원)		57.24	59.61	54.88	0.19
금융자산 비율(%)		35.37	35.40	35.34	0.96
(전문)대출 이상		0.73	0.74	0.72	0.44
은퇴 여부		0.20	0.19	0.20	0.41
기혼 여부		0.80	0.80	0.79	0.72
가족 수(명)		2.80	2.80	2.79	0.69
응답매체 모바일		0.27	0.29	0.25	0.02**
금융이해력(6점 만점)		3.84	3.83	3.86	0.64
관측치 수		2,400	1,200	1,200	2,400

주: 1) 개인 (가구) 소득에서 저소득은 300만 원 미만, 중소득은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고소득은 600만 원 이상으로 정의함

2) 소득 분류, 은퇴 여부, (전문)대출 이상, 기혼 여부, 모바일은 더미 변수임

3)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함

#### 나. 이탈에 대한 분석

최종 표본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전달 형식(텍스트 또는 카드뉴스)에 따른 설문 이탈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V-3〉은 조사 중 이탈한 응답자의

수를 보여준다. 참고자료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참고자료 열람 중 응답을 중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텍스트 집단은 참고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이탈한 응답자 수가 카드뉴스 집단보다 많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정보 전달형식에 따라 이탈 시점 분포(또는 설문 완료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2)=6.823$ , p-value=0.033), 카드뉴스 집단의 설문 완료율이 텍스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이탈률의 차이로 각 집단의 응답자 구성이 체계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잠재적으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참고자료를 읽는 단계에서 이탈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 부담을 느낀 응답자들이 중도에 이탈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러한 이탈 성향이 개인의 금융 이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면,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응답자 표본은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높은 집단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집단 간 이해력 점수 차이는 실제 정보 제공 방식(텍스트 대비 카드뉴스) 차이의 효과가 아니라 표본 구성 변화에 의한 편의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앞서 수행한 균형성 검정(Balance test) 결과, 일반 금융이해력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탈이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로 인한 특정 집단에 편향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탈이 집단별로 다르게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완료자 표본의 잠재적 선택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V-3〉 이탈자 수: 집단별, 시점별

(단위: 명, %)

집단	참고자료 열람 전	참고자료 열람 중	참고자료 열람 후	총 이탈자
텍스트 집단	74 (25.3)	148 (50.7)	70 (24.0)	292 (100.0)
카드뉴스 집단	89 (31.7)	112 (39.9)	80 (28.5)	281 (100.0)
계	163 (28.5)	260 (45.4)	150 (26.2)	573 (100.0)

주: 1) 괄호 안 숫자는 집단별 총 이탈자 중 각 시점의 이탈자 비율을 나타냄

2) Chi-square test 결과:  $\chi^2(2)=6.823$ (p-value=0.033)

## 다. 정독 수준 분포

정보 전달 형식이 응답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참고자료를 실제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집단 간 정독 수준(읽는 노력)이 다르다면, 이해도 점수의 차이는 전달 형식의 효과가 아닌 읽기 행동의 차이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에 앞서, 집단별 정독 수준 분포를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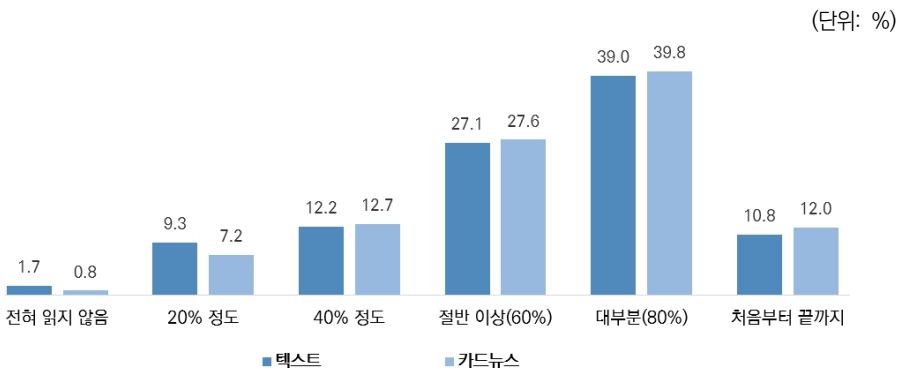
〈표 V-4〉는 집단 간 참고자료 정독 수준을 보여준다. 참고자료의 절반 이상(60% 이상)을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이나 대부분(80% 이상)을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V-3〉은 정독 수준의 전체 분포를 더 자세히 보여준다. 각 응답별 분포를 검토해 보아도 정독 수준의 집단 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 보고(Self-report)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텍스트 집단이 카드뉴스 집단보다 더 집중해서 읽었다거나, 반대로 카드뉴스 집단이 상대적으로 대충 읽었다고 불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V-4〉 참고자료 정독 수준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	카드뉴스 집단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절반 이상(60% 이상)	0.77	0.79	-0.03	-1.48	0.14
대부분(80%)	0.50	0.52	-0.02	-0.98	0.33

주: 절반 이상은 60% 이상 읽은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 대부분은 80% 이상 읽은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임

〈그림 V-3〉 집단별 정독 수준 분포



## 라. 참고자료 이해력 측정 문항 정답률

제공받은 참고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6개 문항, 연금계좌에 대해 3개 문항을 제시하고 정답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

### 참고자료 이해력 측정 문항

C1. 주택연금의 연금지급 방식 중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종신지급 방식    ② 종신훈합 방식    ③ 확정기간혼합 방식  
④ 대출상환 방식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종신훈합 방식(종신훈합 방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를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C2.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주택연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1개 선택]

- ① 60세 가입자    ② 65세 가입자    ③ 70세 가입자  
④ 75세 가입자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④ 75세 가입자(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많아집니다.)

C3. 은퇴 후 자산운용의 핵심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 선택]

- ① 금융자산이 단시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자금의 목적에 맞는 자산운용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③ 장기적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는 연금이나 매월 일정한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④ 은퇴 후 자산은 안정을 추구해야 하므로, 수익률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④ 은퇴 후 자산은 안정을 추구해야 하므로, 수익률은 고려사항이 아니다.(금융자산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10년~20년 후에도 사용해야 하므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C4. 기초연금 지급 자격 기준 중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된다.  
②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③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40%에게 지급된다.  
④ 만 70세 이상 노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

C5.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담보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다.”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C6.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7. 퇴직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② 만 55세 이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 ③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 ④ 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이체해 받을 수 있다.
-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만 55세 이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C8.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연금계좌를 통해 원리금보장 상품부터 펀드·ETF 등 금융상품 투자 및 운용이 가능하다.
- ②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가입 유지를 해야 한다.
- ③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④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9.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기간 중 일반 금융소득세율이 적용된다.”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X(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운용기간 중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에서는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표 V-5〉는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 관련 문항 정답 수의 합계(6점 만점), 연금계좌 관련 문항 정답 수의 합계(3점 만점), 그리고 총합계(9점 만점)를 제시한다. 소득확보 방안 관련 평균 점수(정답 수)의 경우,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p-value=0.8), 연금계좌 관련 평균 점수와 총점은 텍스트 집단의 점수가 카드뉴스 집단보다 높았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value=0.00). 두 집단의 이해도 총점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p-value=0.06), 이 차이는 주로 연금계좌 관련 문항의 점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5〉 이해도 총점 비교

(단위: 점)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	카드뉴스 집단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은퇴 소득확보 문항 점수	4.46	4.45	0.01	0.25	0.80
연금계좌 문항 점수	1.78	1.64	0.14	3.34	0.00
총점	6.24	6.09	0.15	1.85	0.06

주: 소득확보 방안 문항 점수는 소득확보 방안 문항 정답 수의 합계(6점 만점)를, 연금계좌 문항 점수는 연금계좌 문항 정답 수의 합계(3점 만점)를 의미함

〈표 V-6〉은 문항별로 집단의 평균 정답률을 제시하고, 집단 간 정답률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 관련 문항 중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 담보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집단의 정답률이 텍스트 집단의 정답률보다 높은 반면, 연령과 주택연금액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텍스트 집단의 정답률이 카드뉴스 집단의 정답률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관련 문항들은 모두 텍스트 집단의 정답률이 카드뉴스 집단의 정답률보다 높았는데, 이 중 두 문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6〉 이해도 문항별 정답률 비교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A)	카드뉴스 집단 평균(B)	(A)-(B)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주택연금 지급 방식	0.66	0.69	-0.04	-1.92	0.06
연령 vs. 주택연금액	0.58	0.46	0.12	5.80	0.00

〈표 V-6〉 계속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A)	카드뉴스 집단 평균(B)	(A)-(B)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은퇴 후 자산운용	0.82	0.81	0.01	0.63	0.53
기초연금 수급자격	0.77	0.78	-0.01	-0.54	0.59
주택연금 담보 대상	0.78	0.86	-0.08	-5.07	0.00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0.86	0.85	0.01	0.87	0.38
퇴직금 및 연금계좌	0.49	0.43	0.06	3.00	0.00
연금계좌	0.62	0.58	0.05	2.38	0.02
연금계좌 수익 과세	0.67	0.64	0.03	1.59	0.11

집단 간 참고자료 이해도 총점에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모든 응답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참고자료를 보다 충실히 읽은 응답자 집단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정독 수준에 따라 이해도 총점을 비교하였다.

정독 수준은 ‘귀하는 제공받은 자료를 얼마나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읽지 않았다. ② 20% 정도 읽었다. ③ 40% 정도 읽었다. ④ 절반 이상(60%) 읽었다. ⑤ 대부분(80%) 읽었다. 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로 응답한 문항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표 V-7〉에 따르면, 텍스트 집단과 카드뉴스 집단의 점수 차이는 참고자료를 대부분 또는 전부 꼼꼼히 읽은 집단에서 발생하였다.

앞서 텍스트 집단이 참고자료 제공되는 단계에서의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과, 이해도의 차이가 정독률이 80% 이상 높은 집단에 의해 견인된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카드뉴스는 설문 응답의 지속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는 텍스트 형식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7〉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 비교

(단위: 점)

정독 수준	텍스트 집단 평균	카드뉴스 집단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① 전혀 읽지 않았다.	5.25	4.10	1.15	1.08	0.29
② 20% 정도 읽었다.	4.99	4.63	0.36	1.19	0.24
③ 40% 정도 읽었다.	5.10	5.60	-0.21	-0.94	0.35
④ 절반 이상(60%) 읽었다.	5.79	5.80	-0.00	-0.03	0.98
⑤ 대부분(80%) 읽었다.	6.94	6.58	0.36	3.19	0.00
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7.33	6.92	0.42	1.69	0.09

주: 이해도 총점은 9점 만점임(소득확보 방안 문항 6점, 연금계좌 문항 3점)

#### 마. 회귀분석 결과

집단 간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 차이가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등 개인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앞서 집단별 특성의 평균을 비교하고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 분포와 모바일 응답 비율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해당 변수를 포함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카드뉴스 제공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카드뉴스 제공 여부와 개인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Card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1)$$

아래 첨자  $i$  는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  $i$  의 종속변수  $Y_i$  는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이며,  $Card_i$  는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할당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X_i$  는 개인의 특성 변수 벡터로, 나이, 성별, 은퇴 여부, 교육 수준, 개인의 월소득 수준, 가구소득 수준, 모바일 사용 여부, 일반 금융이해도 점수, 정독 수준 80% 이상 여부를 포함하였다.

〈표 IV-8〉은 위 회귀식을 이용한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에 대한 OLS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열은 이해도 점수 총점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 결과로, 카드뉴스 형식의 참고

자료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평균 이해도 점수가 서술형 형식의 텍스트 참고자료를 제공받은 응답자에 비해 이해도 점수가 약 0.16점(9점 만점) 낮음을 보여준다(100점으로 환산하여 약 1.77점). 2열과 3열은 전체 문항 중 각각 은퇴 후 소득확보 관련 문항(6개)과 연금계좌의 활용에 관한 문항들(3개)에 대한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은퇴 후 소득확보 관련 이해도는(2열) 참고자료 형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계좌 활용 관련 이해도(3열)의 경우 카드뉴스 형식 참고자료를 제공받은 집단의 응답자 이해도 점수는 서술형(텍스트) 참고자료를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 약 0.14점(3점 만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0점으로 환산하여 약 4.67점). 이는 두 집단 간 전체 이해도 점수 차이가 주로 연금계좌 활용 관련 문항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회귀분석의 전체 결과를 담은 <부록 표 IV-4>에 따르면, 참고자료의 형식 외에도 가구소득, 교육 수준, 가구원 수, 응답 매체(모바일 여부), 일반 금융이해력, 80% 이상 정독 여부 등이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8>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

설명변수	종속변수: 이해도 점수		
	(1) 총점(9점)	(2) 소득확보(6점)	(3) 연금계좌(3점)
카드뉴스 형식 ( $Card_i$ )	-0.1642*	-0.0212	-0.1430***
상수항	4.7114***	1.8090**	2.9024***
관측치 수	2,400	2,400	2,400
R-squared	0.267	0.211	0.176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2) 전체 결과는 <부록 표 IV-3>에 첨부함

앞서 <표 V-7>에서 살펴보았듯이, 참고자료를 80% 이상 정독한 응답자들에 의해 집단 간 이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점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Card_i + \beta_2 (Card_i \times Read80_i) + \beta_3 Read80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2)$$

표기법은 회귀식 (1)과 동일하다. 다만,  $Read80_i$ 는 응답자  $i$ 가 참고자료를 80% 이상 정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Card_i \times Read80_i$ 는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할당받은 동시에 참고자료를 80% 이상 정독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이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추가함으로써 참고자료 전달방식의 효과를 정독 수준(80% 미만 대비 80% 이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표 V-9〉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 비교

정독 수준	카드뉴스 제공 효과
80% 미만( $Read80_i = 0$ )	$\beta_1$
80% 이상( $Read80_i = 1$ )	$\beta_1 + \beta_2$
정독 수준 별 차이	$\beta_2$

회귀식 (2)를 통해 정독 수준이 낮은 집단( $Read80_i = 0$ )에서 카드뉴스 제공 효과를  $\beta_1$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 $Read80_i = 1$ )에서의 카드뉴스 제공 효과는  $\beta_1 + \beta_2$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beta_2$ 는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카드뉴스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해당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할 수 있는 계수이다. 즉,  $\beta_2$ 는 정독 수준에 따른 카드뉴스 효과의 이질성을 나타낸다.

회귀식 (2)의 주요 회귀계수 및 선형결합의 추정 결과는 〈표 V-10〉에 제시하였다. 패널 A의 주요 회귀계수를 보면, 카드뉴스 제공 더미의 계수( $\beta_1$ )는 모든 종속 변수(총점, 소득확보, 연금계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eta_1$ 은 정독 80% 미만 집단( $Read80_i = 0$ )에 카드뉴스를 제공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하므로, 정독률이 낮은 집단에서는 카드뉴스형 자료와 서술형 텍스트 자료 간 이해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제시한 〈표 V-7〉 분석 내용과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교호항 계수( $\beta_2$ )는 정독률이 높은 집단에서 카드뉴스 효과가 낮은 집단 대비 추가적으로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추정한다. 추정 결과,  $\beta_2$ 는 전체 이해도(1열)에 대하여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2, 3열)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패널 B는 정독률이 높은 집단( $Read80_i = 1$ )에게 카드뉴스형 자료를 제공했을 때의 전체 효과를 계수의 선형결합 형태( $\beta_1 + \beta_2$ )로 제시한다. 정독률이 높은 집단은 카드뉴스형 정보가 제공될 때 서술형 텍스트 자료가 주어진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0.31점(9점 만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 환산 시 3.4점). 또한 소득확보 관련 이해도에서도 해당 집단의 카드뉴스 효과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금계좌 활용 이해도는 서술형 텍스트 자료 집단 대비 0.2점(3점 만점) 낮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100점 만점 환산 시 6.7점).

〈표 V-10〉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교호항

설명변수 및 선형결합	종속변수: 이해도 점수		
	(1) 총점 (9점)	(2) 소득확보 (6점)	(3) 연금계좌 (3점)
패널 A. 주요 회귀계수 추정 결과			
카드뉴스 형식( $Card_i; \beta_1$ )	-0.0095	0.0730	-0.0825
카드뉴스×80%이상 정독( $Card_i \times Read80_i; \beta_2$ )	-0.3040*	-0.1851	-0.1188
상수항	4.5135***	1.6885**	2.8250***
패널 B. 선형 결합 추정 결과			
$\beta_1 + \beta_2$	-0.3135***	-0.1121*	-0.2013***
관측치 수	2,400	2,400	2,400
R-squared	0.269	0.212	0.177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2) 전체 결과는 〈부록 표 IV-4〉에 첨부함

요약하자면, 회귀분석 결과는 텍스트형 참고자료를 읽은 경우가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읽은 경우에 비해 참고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정독 수준에 따른 참고자료 형식의 효과를 보기 위한 교호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는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의 참고자료 형식의 효과가 총점, 소득확보 관련 점수, 연금계좌 관련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 연구에서 사용한 연금계좌 관련 내용과 같은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결과인지, 금융 관련 주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참고자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내용을 바로 질문한 방식을 취한 만큼, 정보 제공의 단기 효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 1. 요약

본 연구는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초기 소비자의 금융역량 수준을 폭넓은 주제에 걸쳐 점검하고, 은퇴기 금융관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금융교육이나 금융역량 관련 연구들이 학교 금융교육, 은퇴저축기 금융역량 강화 등 주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반면, 은퇴자금 인출기 소비자의 금융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자산인출기 고령소비자의 금융관리 실패는 자산축적기(경제활동기) 젊은 소비자에 비해 만회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더 큰 경향이 있다는 점, 고령기의 인지적, 신체적 역량의 약화가 금융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나, 거시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자산인출기 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 가. 설문조사

은퇴 직전과 은퇴기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55세~7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금융감독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은퇴기 재무설계편과 해외 중고령자 금융역량 관련 설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중고령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금융지식 분야에서는 기본 금융이해력, 퇴직연금,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관적인 재무능력 평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수준 등을 다루었다. 둘째, 금융행동 분야에서는 일상적 돈 관리, 재무 계획, 신탁제도, 금융자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인출 등을 질의하였고, 마지막으로, 금융후생 관련 분야에서는 재무상태 만족도, 은퇴자에게는 은퇴 후 생활비, 소득원, 비은퇴자에게는 예상 은퇴 시기, 노후 준비 정도, 부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첫째, 금융지식 및 금융행동 분야에서 중고령자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한 금융역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금융이해력과 함께 퇴직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이해력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반 정도는 장례비용이나 상속 및 증여 등 죽음을 대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를 대비한 노인 돌봄이나 자산 관리 위임자 지정 등에 대한 계획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낮아<sup>33)</sup>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체적인 대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준비를 돕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신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인지능력 저하 대비 재산관리나 상속 분쟁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신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중고령자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한다는 비율은 43% 정도였으나, 배우자나 친지가 아닌 전문 금융자문(금융회사 직원, 금융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부나 공공기관 상담창구 등)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다섯째, 자신의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기준으로 44.8점으로 조사되었다(6점 척도로 응답). 마지막으로, 부채 보유자(응답자의 약 49%)의 61%가 부채가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고, 은퇴가구의 약 33%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고령자의 예산관리, 부채관리, 은퇴소득확보 등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나. 금융지식·금융행동과 금융후생

IV장은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II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을 기초로 평가한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를 금융지식으로 정의하고, 일상적 재무관리(수입지출 관리, 신용카드 대금 상환), 미래에 대한 대비(연금가입, 노후 돌봄 계획), 전문 금융자문 활용, 디지털 금융 이용을 금융행동 지표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재무 상태 만족 정도, 경제적 안정도, 부채 부담을 금융후생 지표로 사용하였다.

33)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음,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은 없음,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8.9%였고, “갑작스러운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 귀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해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재산 관리 위임장 등)을 마련해 놓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또는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84%였음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를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3분위로 구분하고 집단별 금융행동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금융행동 수준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같은 방법으로 금융지식과 금융후생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금융지식과 재무 상태 만족 정도 및 경제적 안정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부채 부담 강도는 금융지식 수준 3분위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의 조합이 금융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를 각각 상, 중, 하의 3개 집단으로 나누고, 열지도를 그려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식수준 개선만으로는 금융후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금융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지식이 금융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금융행동의 변화를 매개로 후생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경로를 시사하는 기술적(Descriptive) 근거이다.

위 결과를 토대로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이 모두 '하'인 집단을 금융 취약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금융행동 및 후생의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비취약 집단과 비교한 결과, 금융 취약 집단은 고령,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저학력, 저소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들이 금융행동과 후생을 개선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둘째,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저하 및 미숙, 셋째, 자신의 금융역량에 대한 과신이다. 이러한 특성과 장벽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은 VI장 2절에서 다룬다.

## 다. 온라인 실험

소비자 금융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규제, 금융교육, 상품 설계나 선택 설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금융교육의 방법으로서 인식 제고, 정보 제공, 개인화된 조언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보 제공 방식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은 무료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전문가의 유료 금융 조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저소득층 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정보 전달 방식 효율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동 연구에서는 정보 전달 형식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해 텍스트형과 카드뉴스형 정보 제공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은 은퇴 후 소득확보와 연금계좌 관련 참고자료를 두 집단에 각기 다른 형식으로 제공하고, 각 집단의 참고자료 이해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텍스트 집단의 '참고자료 확인 중 탈락' 비율이 카드뉴스 집단에 비해 높았다. 둘째, 이해도 총점은 텍스트 집단이 카드뉴스 집단에 비해 높았는데, 대체로 연금계좌 관련 문항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응답자의 참고자료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을 비교해 보면, 이해도 차이는 참고자료를 80% 이상 읽은 응답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카드뉴스 제공 여부와 개인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읽은 경우가 텍스트형 참고자료를 읽은 경우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카드뉴스 형식과 정독 수준의 교호항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정독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카드뉴스 제공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의 카드뉴스 제공 효과는 총점, 소득확보 관련 점수, 연금계좌 관련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보다는 단순화된 정보, 그림이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설명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룬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 연금계좌 활용 등 금융 관련 정보는 비금융 관련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맥락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집단 간 정독 수준, 일반 금융이해력 수준 등의 비교를 통해 선택편의에 대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 없는 관찰 불가능 요소와 이해도 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 선택편의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정보 제공 방식이 이해도를 인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복잡한 금융·재무관리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자료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실증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카드뉴스형은 상대적으로 완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무관리가 필요한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상담이나 심화 조언 등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도입 단계의 도움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대신 복잡하고 맥락 의존성이 높은 금융상품, 재무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형 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령층이 실제로 경험할 만한 다양한 상황,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2.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중고령소비자 내에서도 소집단별로 금융역량의 격차와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 금융역량 강화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금융지식이 긍정적 금융행동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금융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죽음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건강 악화나 상속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공공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응답자의 44% 이상이 장례,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없으며, 48.9%는 건강 악화를 대비한 노인 돌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특별히 실천한 것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 악화 대비 재무 위임장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은 죽음·질병 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거나 관련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경향,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 편향, 미래에 발생할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상태유지 편향(Status quo bias) 등으로 인해 건강 관련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미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Loewenstein et al. 2003; O'Donoghue and Rabin 1999; Tanner et al. 2025). 따라서 건강 악화나 죽음 대비를 가족 보호나 자신의 보호 등 긍정적인 개념으로 프레이밍(Framing)하여 접근하거나, 준비 절차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지비용과 현재의 비용(복잡한 절차)을 감소시키는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전문 금융자문(공적 금융자문 포함) 이용률은 25%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은퇴가구의 32.5%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부채를 보유한 49.2%의 응답자 중 61%가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어 예산관리, 부채관리 등 재무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소득 충격,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고, 부채 의존도가 높아 재무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채관리, 현금흐름 관리, 최소한의 완충자산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무료인 공적 재무관리 서비스(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가 부채관리, 생활비 관리 등 현금흐름 관리와 완충자산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신뢰할 만한 조언자를 찾지 못함', '누구에

게 물어봐야 할지 모름', '잘 모르겠음'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정보 접근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무료 재무관리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금융역량 취약 집단이나 디지털 채널 활용 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디지털 금융 활용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이용 빈도의 차이를 넘어 취약 집단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취약 집단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의 설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바른 궤도에 돌아올 수 있는 설계를 통해 현존하는 비대면 재무진단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대면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이 시의적절한 시기의 대면 금융자문 서비스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역량 과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 자가진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에 대해 과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우 일상적 돈 관리나 미래 계획에 있어 긍정적 금융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진단이나 교육 프로그램 전 짧은 퀴즈를 풀도록 하고 정답과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자문이나 금융 관련 도움 활용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분석 결과는 금융지식만으로는 부채부담 경감(금융후생 개선)이 어려우며, 금융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금융행동의 실천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는데, 긍정적인 금융행동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 대신 감정, 심리,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행태편향: Behavioral Bias)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재무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인지능력, 계산능력, 자제력 저하 가능성이 높고, 대출을 고려할 때도 절대적인 비용보다는 대출 승인이 편하고 빠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높은 대출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Mullainathan and Shafir 2014; Gandy et al. 2016). Bertrand and Morse(2011)는 단기대

출자들에게 예상 총대출비용의 시각화와 같은 넛지(Nudge) 장치를 통해 비합리적인 대출 선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태편향을 경감시키는 조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긍정적 금융행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의 형식과 전달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실시한 소비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텍스트 집단의 '참고자료 확인 중 탈락' 비율이 카드뉴스 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소비자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는 텍스트형 참고자료가 카드뉴스형 참고자료에 비해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카드뉴스형 정보는 재무관리가 필요한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상담이나 심화 조언 등으로 연결하는 단계에서 활용하고, 재무관리 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가진 소비자에게는 텍스트형 정보(경험할 만한 상황, 사례들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역량 프로그램의 설계, 평가, 수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역량 프로그램 설계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와 FGI 등 질적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을 과소 대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증거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도입 전 사전 테스트, 도입 후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접속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 기본 특성 조사, 만족도 등 비대면 재무진단 등 온라인 서비스 관련 데이터도 축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VI-1〉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방안

구분	현황	강화방안
미래 위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죽음에 대한 계획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식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죽음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 확대</li> </ul>
공적 금융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퇴가구의 32.5%는 생활비 부족을, 부채 보유자의 61%가 과도한 부채 부담 경험</li> <li>전문 금융자문 이용률이 25%로 저조</li> <li>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전문 금융자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관리, 현금흐름 관리, 완충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관리 지원</li> <li>신뢰할 만한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공적 서비스 접근성 혁신: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금융감독원, 국민연금 등) 홍보 강화 및 접근성 제고</li> </ul>

〈표 VI-1〉 계속

구분	현황	강화방안
비대면 및 대면 지원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역량 취약계층의 디지털금융 활용 수준이 낮아 구조적 배제 위험이 존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지원: 비대면 재무진단의 사용 편의성 개선(실수 방지 설계 등)과 함께, 대면 상담 채널(신용·부채 컨설팅 등)의 적극적인 유지·활성화</li> </ul>
금융역량 과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역량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 대비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을 과신하는 경향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관적 자기진단 도입: 재무진단 전 짧은 퀴즈를 통해 자신의 실제 수준을 인지시키고 전문 조언의 필요성을 환기</li> </ul>
행동변화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식만으로는 부채 부담(금융 후생) 경감이 어려우며, 실제 금융행동의 변화가 핵심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태편향 경감 조치: 대출 시, 총 상환비용 시각화 등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경감시키는 넛지(Nudge)를 활용</li> </ul>
정보전달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드뉴스는 완독에 유리하나, 복잡한 금융정보의 이해도 제고에는 텍스트형이 더 효과적임이 확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계적 정보 제공: 카드뉴스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한 후, 실제 사례를 담은 텍스트 자료를 통해 심화 이해와 행동 변화를 견인</li> </ul>
금융역량 프로그램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가 존재</li> <li>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을 과소 대표할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조사 보완: 금융역량 프로그램 설계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와 FGI 등 질적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 검토</li> </ul>
금융역량 프로그램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역량 프로그램 평가 및 지속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거 기반 운영: 프로그램 도입 전후 사전·사후 테스트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보완</li> <li>온라인 서비스 관련 데이터 축적(접속 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 기본 특성 조사, 만족도 등)</li> </ul>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20),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5권』, 금융감독원
- 김정현·최현자(2012),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23(1), pp. 229~254
- 석상훈·장선구(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4호, pp. 1~26
- 양덕순(2022), 「금융이해력이 소비자의 노후 재무대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8(2), pp. 83~103
- 양혜경(2018), 「금융이해력과 재무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11(3), pp. 29~55
- 여윤경(2014), 「장수리스크 감소를 위한 은퇴자산의 인출전략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pp.141~172
-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연구보고서 2024-05, 보험연구원
- 유경원·서인주 (2016), 「은퇴가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 19~38
- 유경원·서인주·정지수(2020), 「중·고령자가구의 은퇴 전후 자산보유 행태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6권 4호, pp. 1~27
- 윤재호·김현정 (2010),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경제분석』, 제17권 제1호, pp. 1~44
- 윤정혜(2025), 「만 55~64세 고령층의 조기 퇴직과 계속 근로」, 『고용동향 브리프』, Vol. 1, 한국고용정보원
- 이경희·손성동(2025),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4-15, 보험연구원
- 이은영·강윤지(2025), 「인지취약자 지원 실태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5-10, 보험연구원

이희숙·김민정·곽민주(2013), 「은퇴에 따른 가계경제구조의 변화」, 『소비문화연구』, 제16권 제2호, pp. 171~200

장지연(200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 정책」, 정책연구 2000-16, 노동연구원

최철(2023),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과 금융 웰빙」, 『금융소비자연구』, 13(3), pp. 49~74

통계청(2024),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홍보센터-카드뉴스(<https://www.nps.or.kr/pnsinfo/pbtycntr/getOHAG0061M0.do>)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https://www.fss.or.kr/fss/lifeplan/enlfDsgn/list.do?menuNo=200947>)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자료-카드뉴스(<https://www.fsc.go.kr/no040101>)

Agarwal, S., Driscoll, J., Gabaix, X. and Laibson, D.(2009), “The Age of Reason: Financial Decisions over the Life-Cycle with Implications for Regu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9(2), pp. 51-117

Alessie, R., Van Rooij, M. and Lusardi, A.(2011),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0(4), pp. 527-545

Atkinson, A. and Messy, F.(2012),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Results of the OECD/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INFE) Pilot Study”,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15

Behrman, J., Mitchell, O., Soo, C. and Bravo, D.(2012), “How Financial Literacy Affects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2(3), pp. 300-304

- Bertrand, M. and Morse, A.(2011), "Information Disclosure, Cognitive Biases and Payday Borrowing", *The Journal of Finance*, 66(6), pp. 1865–1893
- Boyle, P., Mitchell, O., Mottola, G. and Yu, L.(2025), "Declining Financial and Health Literacy among Older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30, 100547
- Buljan, I., Malički, M., Wager, E., Puljak, L., Hren, D., Kellie, F. and Marušić, A.(2018), "No Difference in Knowledge Obtained from Infographic or Plain Language Summary of a Cochrane Systematic Review: Thre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97, pp. 86–94
- CFPB(2015), "Measuring Financial Well-Being",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Dunlap, J. and Lowenthal, P.(2016), "Getting Graphic about Infographics: Design Lessons Learned from Popular Infographics", *Journal of Visual Literacy*, 35(1), pp. 42–59, pp. 42-59
- Engels, C., Kumar, K. and Philip, D.(2021), "Financial Literacy and Fraud Detection", in *Financial Literacy and Responsible Finance in the FinTech Era*, Routledge, pp. 124–146
- Fan, L., and Henager, R.(2022), "A Structural Eeterminants Framework for Financi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3(2), pp. 415-428
- FCA(2025), *Financial Lives 2024 Survey: Vulnerability and Financial Resilience*
- Fenesi, B., Vandermorris, S., Kim, A., Shore, D. and Heisz, J.(2015), "One Size Does Not Fit All: Older Adults Benefit from Redundant Text in Multimedia Instru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1076
- Finke, M., Howe, J. and Huston, S.(2017), "Old Age and the Decline in Financial Literacy", *Management Science*, 63(1), pp. 213–230
- Gamble, K., Boyle, P., Yu, L. and Bennett, D.(2015), "Aging and Financial Decision Making", *Management Science*, 61(11), pp. 2603–2610
- Gandy, K., King, C., Hurle, P., Bustin, C. and Glazebrook, K.(2016), *Poverty and*

Decision-Making: How Behavioural Science Can Improve Opportunity in the UK,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Hastings, J., Madrian, B. and Skimmyhorn, W.(2013),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Education and Economic Outcomes”, *Annual Review of Economics*, 5(1), pp. 347–373

Hastings, J. and Mitchell, O.(2020), “How Financial Literacy and Impatience Shape Retirement Wealth and Investment Behavior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9(1), pp. 1–20

Kaiser, T., Lusardi, A., Menkhoff, L. and Urban, C.(2022), “Financial Education Affects Financial Knowledge and Downstream Behavio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5, pp. 255–272

Kim, H., Maurer, R. and Mitchell, O.(2021), “How Financial Literacy Shapes the Demand for Financial Advice at Older Ages”,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20, 100329

Kim, K. T., Lee, S., and Kim, H.(2022), “Gender Differences in Financial Knowledge Overconfidence among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6(4), pp. 1223–1240

Kruger, J. and Dunning, D.(1999), “Unskilled and Unaware of It: How Difficulties in Recognizing One’s Own Incompetence Lead to Inflated Self-Assess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pp. 1121–1134

Loewenstein, G., O’Donoghue, T., and Rabin, M. (2003), “Project Bias in Predicting Future U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pp. 1209–1248

Lusardi, A. and Mitchell, O.(2011a),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An Overview”,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0(4), pp. 497–508

\_\_\_\_\_ (2011b),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0(4), pp. 509–525

\_\_\_\_\_ (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pp. 5-44
- \_\_\_\_\_ (2023), “The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Opening a New Fie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7(4), pp. 137-154
- Lusardi, A. and Tufano, P.(2015), “Debt Literacy, Financial Experiences and Overindebtednes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4(4), pp. 332-368
- Mayer, R. and Moreno, R.(2003), “Nine Ways to Reduce Cognitive Load in Multimedia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38(1)
- Mayer, R.(2009), “Segmenting Principle”, in *Multimedia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5-188
- Mullainathan, S. and Shafir, E.(2014), “Scarcity: The New Science of Having Less and How It Defines Our Lives”, *Scarcity: The New Science of Having Less and How It Defines Our Lives*, Picador
- O’Donoghue, T. and Rabin, M.(1999), “Doing It Now or Later”, *American Economic Review*, 89(1), pp. 103-124
- OECD(2008), *Improving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OECD
- \_\_\_\_\_ (2020a),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OECD
- \_\_\_\_\_ (2020b),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OECD
- \_\_\_\_\_ (2023), *OECD/INFE 2023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OECD
- \_\_\_\_\_ (2025),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Financial Consumer Vulnerability”, *OECD Business and Finance Policy Papers*, No. 83
- Sajid, M., Mushtaq, R., Murtaza, G., Yahiaoui, D., and Pereira, V.(2024). “Financial Literacy, Confidence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Financial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82, 114791
- Stolper, O. and Walter, A.(2017),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Advice, and Financial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87, pp. 581-643

- Sung, E. and Mayer, R.(2012), “When Graphics Improve Liking but Not Learning from Online Less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pp. 1618–1625
- Tanner, M., Hofmann, R., and Klingsieck, K. (2025), “Delaying until It Is Definitely too Late –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Procrastination in Estate Planning”, *Financial Planning Review*, 8 (1), e1196
-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Age UK and The Money Advice Service(2017), “Older People in Retirement Financial Capability Outcomes Framework: Introduction and Guidance”
- Von Gaudecker, H.(2015), “How Does Household Portfolio Diversification Vary with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Advice?”, *The Journal of Finance*, 70(2), pp. 489–507
- World Bank(2013a), “A Toolkit for the Evaluation of Financial Capability Program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orld Bank
- \_\_\_\_\_ (2013b), “Financial Capability Surveys Around the World: Why Financial Capability Is Important and How Surveys Can Help”, World Bank
- Stanford Initiative for Financial Decision-Making 홈페이지 – Take the Big Three Quiz (<https://ifdm.stanford.edu/the-big-three/quiz>)

## 1. 기존 참고자료

- 기존 참고자료는 줄글, 높임말로 서술하였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간편재무진단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하였음
  - 화면에 순차적으로 각 항목을 보여주었으며, 처음 도입 부분 후에는 3초가 지난 후에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보여주었고, 다음 항목들은 각 항목당 15초가 지난 후에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을 읽도록 유도하였음

###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 가지고 있는 재산(집, 금융자산 등)을 활용하는 방법,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구분, 3초 후 다음 버튼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일자리〉

노후에 일을 해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은 일터에 취업을 하거나 은퇴 이후 창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후 취업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는 전일제인 경우보다는, 일정 시간 혹은 기간 동안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전에 개인의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노후의 일자리는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급여 수준도 다양합니다.

나에게 맞는 일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요?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나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민간형 사업은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이 해당됩니다. 참여 방법은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상담 후에 참여자가 선발되고, 선발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체명	사이트 주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a href="https://www.kordi.or.kr/">https://www.kordi.or.kr/</a>
노인일자리 여기	<a href="https://www.seniorro.or.kr:4431/noin/organization.do">https://www.seniorro.or.kr:4431/noin/organization.do</a>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a href="https://koreapeople.or.kr/info/employment">https://koreapeople.or.kr/info/employment</a>

단체명	사이트 주소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a href="https://50plus.or.kr/sjc/index.do">https://50plus.or.kr/sjc/index.do</a>

페이지 구분, 15초 후 다음 버튼

#### <주택연금의 활용>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연금의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훘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고, 종신훘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 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주택연금은 동일한 주택가격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가입하면 연금액수가 줄어들고,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일반주택을 기준(정액형, 2025년 10월 30일)으로 가입연령에 따라 60세 100만 원, 65세 121만 원, 70세 149만 원, 75세 186만 원입니다.

페이지 구분, 15초 후 다음 버튼

####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소득 증대>

자산운용이란 여유자금을 모아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은퇴 후는 은퇴 전에 모아둔 자산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고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은퇴 후의 투자 및 자산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금융자산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본인이 세운 생활계획에 따른 자산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에 가계의 경제상태, 자산상황을 은퇴 전부터 파악하고 자산운용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가(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금융전문가(재무설계사)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은 충분한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투자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인지, 상속을 위한 자금인지, 비상시를 위한 자금인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생활비나 비상자금은 자주 혹은 갑작스럽게 인출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는 유동성이 큰 상품(보통예금, CMA, MMF, MMDA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활비 조달이 고민된다면 연

---

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나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중신연금, 월 지급식 상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자금은 상속이나 증여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자금의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페이지 구분, 15초 후 다음 버튼

---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혹은 가계(부부인 경우)의 월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계산하여 이를 12로 나눈 값)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혼자 살면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의 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다양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인 경우 143만 5천 원입니다. 이러한 가계에 해당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소지의 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제도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생계가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계 급여, 명절위로금,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노인급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서 이러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구분, 15초 후 다음 버튼

---

### 연금계좌: 노후자금·퇴직금의 투자 및 절세 전략

대표적 연금계좌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퇴직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공적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후자금 계좌로,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ETF 등 실적배당 상품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출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룸)과 낮은 세율입니다. 계좌에서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3.3~5.5%로, 일반 금융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을 때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5세 이전 퇴직자: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 계좌에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자: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거나 IRP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페이지 구분, 15초 후 다음 버튼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 징수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고(과세이연), 게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IRP·연금저축) 합산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한도는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최대 6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소득이 없어도 연금계좌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계좌 내에서 운용한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낮은 세율(3.3~5.5%)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두고 펀드나 ETF로 운용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달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구분, 15초 후 다음 버튼

---

## 2. 개선안

- 개선안은 각 장에 전달하는 내용을 최소화하는 카드뉴스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폰트 크기는 크게, 문장의 길이는 짧게 하고, 핵심정보만을 제공하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나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함
  - 처음 도입 카드뉴스 후에는 3초 후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13초 후에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적어도 일정 시간만큼은 해당 화면에 머물러 있도록 함
  - 단, ‘연금계좌 활용: 투자·절세·노후준비’는 카드뉴스 분량이 많아서 페이지를 한번 구분하고, 첫 번째 카드 제공 후에는 13초 후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나머지 카드 제공 후에는 12초 후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함

## 은퇴 후 소득 확보 방안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 ①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
  - ②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 ③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
- 이 있습니다.

### 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 노후취업

##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 노후 취업



### 정부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공형: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연금수급자
- 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 민간형 사업: 60세 이상

### 수행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 참여 방법

-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에 관련서류 제출 및 상담  
→ 참여자 선발 → 사업 참여


### 주요 노후 취업지원 기관

- 노인일자리 여기(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s://www.senioro.or.kr:4431/>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https://koreapeople.or.kr/info/employment>

나.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주택연금

<p><b>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주택연금</b></p> 	<p>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 (국가 보증)</p> <p>가입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 부부 중 1명이 <b>55세 이상</b></li> <li>주택가액: 부부 합산 <b>공시가격 12억원 이하</b></li> </ul>
<p>주택연금의 주요 연금지급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신지급: 인출한도 설정 없이 <b>전액 평생</b> 연금</li> <li>종신혼합: <b>일부 인출</b>, 나머지 평생 연금</li> <li>확정기간혼합: <b>일부 인출</b>, 나머지 <b>일정 기간</b> 동안 연금</li> <li>대출상환 방식: <b>대출 잔액 상환</b>을 용도로 <b>일부 인출</b>, 나머지 평생 연금</li> </ul> <p>주택연금 월지급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은 ↑ (동일 주택가 기준)</li> </ul>	<p>“나에게 해당하나? 연령(55세 이상), 공시가격(12억 이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p> <p>한국주택금융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ref="https://www.hf.go.kr/ko/index.do">https://www.hf.go.kr/ko/index.do</a></li> <li>콜센터: 1688-8114</li> </ul>

다.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자산운용

<p><b>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자산운용</b></p> 	<p>은퇴 후 투자-자산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오랫동안</b> 유지해야(조기 소진 방지)</li> <li>물가상승을 감안한 <b>수익률도 추구</b></li> <li><b>목적별 운용</b>(생활비, 비상, 상속)</li> </ul>
---	---

### 자금의 목적에 맞는 투자방법

- **단기간의 생활비나 비상자금**
  - 자주 인출에도 손해가 적은 유동성 높은 상품 (보통예금, CMA, MMF, MMDA 등)
- **장기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
  - 매월 일정한 이자를 받는 연금·월 지급식 상품 (종신연금, 월 지급식 상품 등)
- 👤 **상속·증여를 위한 자금**
  - 상속·증여 시기까지 자금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정기투자
- ☑ **당장 쓰지 않는 여유자금**
  -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물가상승을 감안한 수익을 추구하되, 소진 방지와 분산 투자를 병행합니다.”

### 공공 재무상담 서비스

- 금융감독원
  - 대면 재무상담, 전화상담: 1332, 온라인상담
  - 파인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라.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 정부지원(저소득층)

###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 정부 지원(저소득층)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 지급 요건(2025년 기준)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365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지급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 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2025년 기준)이고, (1인 가구: 143만 5천원, 2인 가구: 236만원 이하)
  -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어야 함

“저소득층 대상 정부지원 신청 및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기초연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마. 연금계좌 활용: 투자·절세·노후준비

## 연금계좌 활용: 투자 · 절세 · 노후준비



### IRP와 연금저축

**공통점**

-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 예금·보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55세 이상 +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가능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관리 계좌, **소득지만** 가입 가능, 금융기관당 1계좌

**연금저축(세제혜택형 개인연금)**

자율적 노후자금 관리 계좌, **누구나** 가입 가능

###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방식**

- 55세 이전 퇴직: IRP로 의무 이체
- 55세 이후 퇴직: 일시금 수령 또는 IRP로 이체 가능

① 일시금으로 받을 때

-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후 남은 금액만 수령

② 연금으로 받을 때(IRP 연금계좌 활용)

- **퇴직소득세는 연금 개시 시점에 납부**(과세이연)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혜택 (단, 만 55세 이상 + 계좌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 연금소득세

**연금계좌 내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 연금으로 인출할 때 부과(**과세이연**)
- **낮은 세율**(3.3~5.5%) 적용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낮음)

(연금소득세는 과세이연된 운용수익과 퇴직소득세 이연분을 합산한 금액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페이지 구분, 13초 후 다음 버튼

### 건강보험료

-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됨
-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됨
-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절감**을 기대 가능

### 소득이 있든 없든, 연금계좌는 절세수단

**소득이 있다면, 세액 공제 혜택**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 IRP: 연금저축 포함 합산 최대 900만원
-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소득이 없어도, 절세 가능**(세액 공제 혜택 X)

- 계좌 내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이연 + 낮은 세율(3.3~5.5%)** 적용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투자 수익의 절세 전략을 찾고 있다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관리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연금저축 세제, 퇴직연금 세제, 소비자 유의사항

〈부록 표 II-1〉 OECD 금융이해력 점수

분류	내용
금융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의 시간가치</li> <li>• 대출이자</li> <li>• 단리 계산</li> <li>• 복리 계산</li> <li>• 위험과 수익</li> <li>• 인플레이션</li> <li>• 위험다각화</li> </ul>
금융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보다 소비 선호(5점 척도)</li> <li>• 미래보다 현재 선호(5점 척도)</li> <li>• 돈은 쓰기 위해 존재(5점 척도)</li> </ul>
금융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돈 관리</li> <li>• 적극적 저축</li> <li>• 생활비 충당을 위해 차입하지 않음</li> <li>• 조연 요청</li> <li>• 개인 재무상황 관리</li> <li>• 장기 재무목표 수립</li> <li>• 신중한 구매</li> <li>• 청구대금 기한 내 납부</li> </ul>
금융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지출 발생 시 자력 해결 가능</li> <li>• 최근 1년 생활비 부족 경험</li> <li>• 소득 중단 시 버틸 수 있는 기간</li> <li>• 월말 잔여 자금 보유 여부</li> <li>• 현재 재무상태 만족도</li> <li>• 재무 상태로 인한 생활 제약</li> <li>• 과도한 부채 부담</li> <li>• 생활비 지불에 대한 걱정</li> <li>• 재무상황의 삶 통제 정도</li> <li>• 재무로 인한 미래 비관</li> <li>• 자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li> <li>• 재무적으로 겨우 생활</li> </ul>

자료: OECD(2023)

〈부록 표 III-1〉 금융지식·행동·후생 측정 항목

대분류	소분류	측정
금융지식	일반 금융이해력 (6문항)	Big3 질문,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 대출 맥락에서의 복리 개념
	퇴직연금 이해력 (4문항)	인출방식, 근로자의 역할, 세제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7문항)	의료비·간병비, 급여 적용, 연령요건, 본인 부담금
	재무관리 능력 (9문항)	주거비용, 노인 돌봄비용, 기초연금, 은행 계좌 잔액, 가격 비교 웹사이트, 보험비교, 저축상품 비교, 복지혜택 확인, 세금납부 관련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금융행동	디지털금융 이용 (6문항)	온라인 banking, 간편결제앱, 금융상품 가입, 신용점수 조회, 소비내역 및 자산관리
	일상적 돈 관리 (2문항)	수입지출 관리, 신용카드 이용
	재무 계획(6문항)	노후 돌봄 계획, 위임장 등
	선택(2문항)	이용 경험, 목적
	금융자문(2문항)	금융자문 활용 여부, 자문 주체
	연금가입(1문항)	가입한 경험 또는 가입 중인 연금
금융후생	만족도(1문항)	재무상태 만족도(6점 척도)
	재무상태(8문항)	재무상태 설명 정도(6점 척도)
	부채부담(1문항)	부채부담 정도(6점 척도)

주: 분석 시, 금융후생 6점 척도 응답 ①~⑥ 중 ⑤나 ⑥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만족도는 만족한 것으로, 재무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부채부담은 부채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부록 표 III-2〉 금융지식·행동·후생 관계 분석에 사용한 변수 정의

대분류	측정
금융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g3 질문,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 대출 맥락에서의 복리 개념</li> <li>• 금융지식 지표: 정답 수(최대: 6점)</li> <li>•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3분위(금융지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li> </ul>
금융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입지출 관리: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스프레드시트, 가계부나 노트, 은행거래 내역이나 계좌 잔액 검토 중 하나 이상 사용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② 신용카드 대금 전액 납부: 전체대금 상환 또는 신용카드 미보유자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③ 가입연금 개수(최대 4)</li> <li>④ 노후 돌봄 계획: 대비를 위해 저축, 보험가입, 재산 처분 계획 중 하나 이상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⑤ 금융자문 활용: 전문 금융자문 활용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⑥ 디지털 금융 이용(최대 6)</li> </ul> </li> <li>• ①, ②, ④, ⑤: 더미 변수</li> <li>• ③, ⑥: 특정 값을 최댓값으로 하는 이산 변수, 최댓값으로 나눔으로써 [0,1]로 정규화</li> <li>• 금융행동 지표 = ①+②+(③/4)+④+⑤+(⑥/6)(최대: 6점)</li> <li>•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3분위(금융행동 수준 상, 중, 하)로 구분</li> </ul>
금융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무상태 만족도: 6점 척도 응답이 5, 6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② 재무상태 설명 정도: 각 문항 6점 척도 응답이 5, 6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총 8문항, 재무상태 중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li> <li>③ 부채부담 정도: 6점 척도 응답이 5, 6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ul> </li> <li>• 금융후생 지표 = ①+②+(1-③)(최대: 10점)</li> <li>•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3분위(금융후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li> </ul>

〈부록 표 IV-1〉 사후 검정: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행동

구분	금융지식 하 vs 중	금융지식 하 vs 상	금융지식 중 vs 상
수입지출 관리 여부	0.04***	0.05***	0.01
신용카드 대금 전액 납부 여부	0.02	0.08***	0.07***
가입 연금 개수(0~4)	0.15***	0.35***	0.20***
노후 돌봄 계획 여부	0.05**	0.12***	0.06***
금융자문 활용 여부	0.03	0.01	-0.02
전문 금융자문 활용 여부	0.04**	0.07***	0.03*
디지털 금융이용(0~6)	0.44***	0.68***	0.24**
응답자 수	3,000	1,137	889

- 주: 1) 각 셀의 값은 금융지식 수준 간 평균 차이이며, \*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가입 연금 개수와 디지털 금융이용을 제외하고는 더미변수임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부록 표 IV-2〉 사후 검정: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후생

구분	금융지식 하 vs 중	금융지식 하 vs 상	금융지식 중 vs 상
재무 상태에 만족함	0.03*	0.04***	0.01
경제적으로 안정됨(0~8)	0.20**	0.33***	0.12
부채가 너무 부담됨	-0.01	-0.03	-0.02
응답자 수	3,000	999	985

- 주: 1) 각 셀의 값은 금융지식 수준 간 평균 차이이며, \*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경제적으로 안정됨(0~8) 제외하고는 더미변수임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부록 표 IV-3)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

설명변수	종속변수: 이해도 점수		
	(1) 총점	(2) 소득확보	(3) 연금계좌
카드뉴스 형식	-0.1642*	-0.0212	-0.1430***
연령	-0.0242	0.0086	-0.0329***
남성(=1)	-0.0241	-0.0583	0.0341
은퇴 여부(=1)	0.1747	0.1100	0.0647
가구원 수	-0.1283***	-0.0778**	-0.0505**
모바일 여부(=1)	-0.2162**	-0.1628**	-0.0534
금융이해력	0.4732***	0.2932***	0.1800***
80% 이상 정독 여부(=1)	1.1685***	0.7076***	0.4609***
최종학력 고졸 이하(=1)	0.2157	0.4602	-0.2445
최종학력 대졸 이하(=1)	0.7551*	0.7230**	0.0321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1)	0.8643*	0.8343**	0.029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0.0744	0.1270	-0.052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0.3919	0.2083	0.183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0.4658	0.2723	0.1935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0.6122*	0.4247*	0.1875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0.8194***	0.5181**	0.3012*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0.8343**	0.4729*	0.3614**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0.7907**	0.4766*	0.3141*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0.7308**	0.4144*	0.3164**
상수항	4.7114***	1.8090**	2.9024***
관측치 수	2,400	2,400	2,400
R-squared	0.267	0.211	0.176

-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2) 남성, 은퇴 여부, 모바일 여부, 80% 이상 정독 여부는 더미변수, 가구소득, 교육 수준, 금융이해력은 카테고리 변수임  
 3)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기준 집단(reference group)은 각각 중졸 이하, 100만 원 이하임

〈부록 표 IV-4〉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교호항

설명변수	종속변수: 이해도 점수		
	(1) 총점	(2) 소득확보	(3) 연금계좌
카드뉴스 형식	-0.0095	0.0730	-0.0825
카드뉴스×80% 이상 정독	-0.3040*	-0.1851	-0.1188
연령	-0.0245	0.0085	-0.0330***
남성(=1)	-0.0281	-0.0607	0.0326
은퇴 여부(=1)	0.1828	0.1150	0.0678
가구원 수	-0.1284***	-0.0778**	-0.0506**
모바일 여부(=1)	-0.2234**	-0.1672**	-0.0562
금융이해력	0.4717***	0.2923***	0.1794***
80% 이상 정독 여부(=1)	1.6248***	0.9855***	0.6393***
최종학력 고졸 이하(=1)	0.2113	0.4575	-0.2462
최종학력 대졸 이하(=1)	0.7512*	0.7207**	0.0306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1)	0.8565*	0.8296**	0.026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0.0739	0.1267	-0.05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0.3919	0.2084	0.183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0.4580	0.2675	0.1905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0.6089*	0.4227*	0.1862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0.8175***	0.5170**	0.3005*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0.8265**	0.4681*	0.3583**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0.7870**	0.4744*	0.3126*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0.7308**	0.4144*	0.3164**
상수항	4.5135***	1.6885**	2.8250***
관측치 수	2,400	2,400	2,400
R-squared	0.269	0.212	0.177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2) 남성, 은퇴 여부, 모바일 여부, 80% 이상 정독 여부는 더미변수, 가구소득, 교육 수준, 금융이해력은 카테고리 변수임

3)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기준 집단(Reference group)은 각각 중졸 이하, 100만 원 이하임

##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연구보고서

2026-04

## 2025 보험소비자행태조사: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발행일 2026년 5월

발행인 김헌수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99-6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

